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

- '선박'과 '바다(해수욕장, 갯바위 등) 이용자'를 위한 범정부 안전대책 -

2014. 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해사안전시행계획의 개요	1
II.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변화	3
III. '13년 성과 및 반성	13
IV. '14년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	23
V. 6대 안전분야별 추진계획	31
VI. 투자계획	209
(붙임 1) 과제별 소요예산	210
(붙임 2) 주요 해역별 해양사고 현황	219
(붙임 3) 해역별 환경 및 여건변화	239

I. 해사안전시행계획의 개요

- (의의)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은 선박과 바다이용자에 대한 범정부 계획인 '제1차('12~'1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해양사고 30% 감소대책(해수부, '13.4.26)'을 구체화하는 연도별 실천계획임

* 「해사안전법」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

◆ (계획의 범위) 우리나라 내수*, 영해, 항만, 해안, EEZ 및 대륙붕

* 한강 등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있는 강, 하천, 호수 포함

◆ (주요 대상) 우리나라 국민과 국적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외국적 선박 등

- (주체 및 체계) 해수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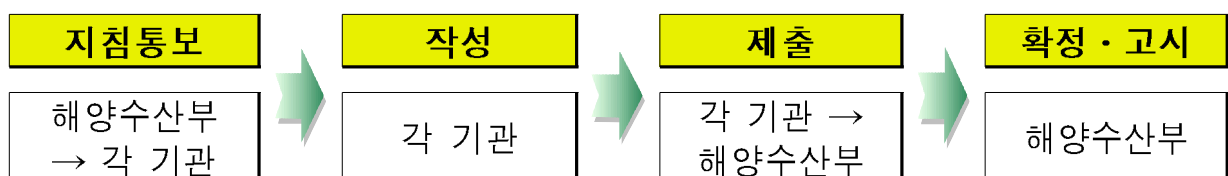
- 계획의 이행력 확보와 정책환류를 위해 '계절별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이 참여한 '해양안전종합관리 TF'를 운영

* 필요시 각 기관·부서는 본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절차) 각 기관은 해수부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제출

- 해수부는 이를 종합·조정하고 각 기관의 의견수렴('14.1.23. 해양안전 관계관 회의 개최)을 거쳐 시행계획 확정·고시

<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 주요 안전관리 대상 및 범위('13년말기준) 》

◆ 선 박

○ 국적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총 87,489척(대))

구분	합계	어선	일반선박					수상레저 기구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기타	
등록 척수	87,489	75,031 (낚시4,313)	224	793	734	3,314	4,295	3,098

* 주 : 어선은 '12년말 기준 임

○ 국내항만 입출항 선박척수 (총 384,313척)

구분	총계	국적외항선	국적내항선	외국적선
무역항	384,313	45,839	217,856	120,618

* 주 : '13년 기준(연안항, 어항 등은 제외한 숫자 임)

◆ 선박 이용자

○ 국적선박의 승선원 및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현황 (총 23,744명)

구분	총계	어선	일반선박	수상레저기구
선원	23,744	1,904	7,867	13,973

* 주 : 어선·일반선박은 '13.9월기준(해외취업인 제외), 수상레저기구는 자격증 보유현황 임

○ 일반국민의 선박이용 현황 (총 20,835,883명)

구분	총계	여객선		크루즈	유도선	낚시어선
		연안	국제			
연인원	20,835,883	16,062,533	2,737,283	10,435	11,387	2,014,245

* 주 : '13년 기준(유도선은 '12년 기준), 크루즈 이용객은 전체이용객(752,166명) 중 한국 국적자

◆ 갯바위·해수욕장 등 해안 현황

구분	해안길이	갯벌	해수욕장
길이·면적(이용자 수)	14,396km	2,489km ²	276개(8,780만명)

* 출처 : 2013년 해양수산통계, 연안습지면적 현황

◆ 주요 안전관리 해역 (약 44만km²*, 남한면적 9.9만km²의 4.4배)

*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 주요 항만·어항 현황

○ 무역항 31개(지방관리 17), 연안항 29개, 어항 394개, 어촌정주어항 595개

II. 해양사고 현황 및 여건변화

1. '13년 해양사고 현황

◆ (선박) '12년 대비, 사고는 12.1%(726 → 638건) 감소

- 사망·실종자는 14.9%(17명) 감소한 97명 발생

◆ (해안) '12년 대비, 사망자가 29.4%(187 → 132명) 감소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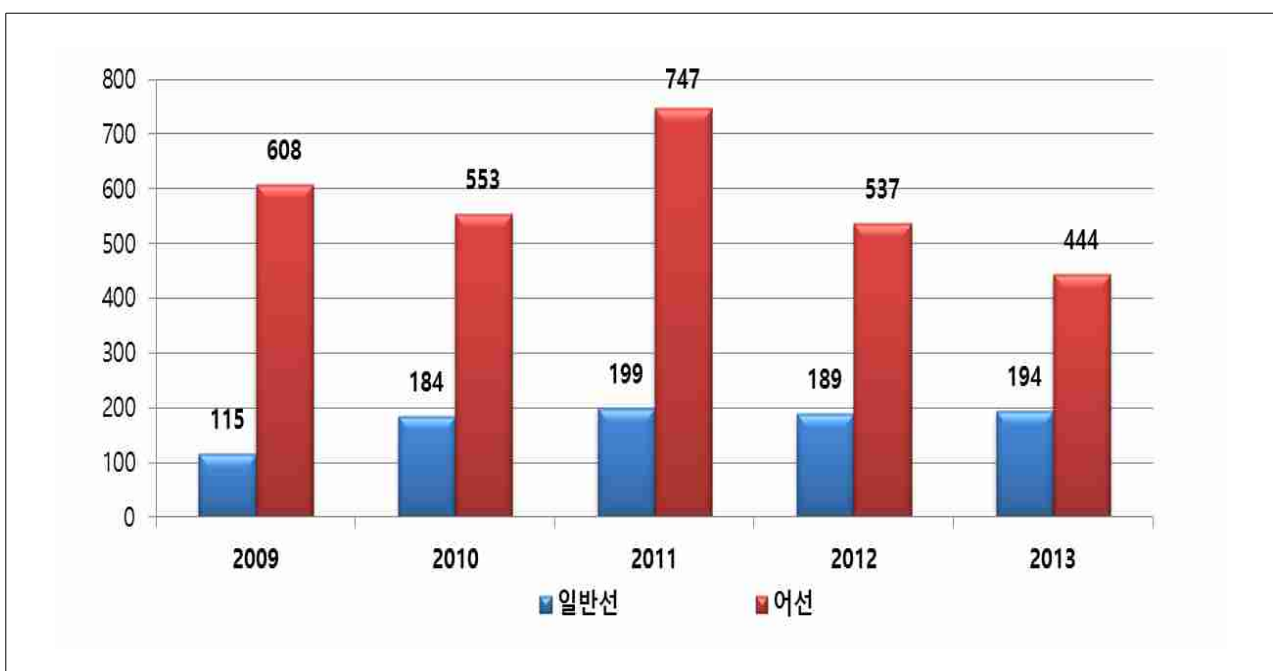
가. 선 박

□ (전체) '13년 해양사고는 전년대비 12.1%(726→638건) 감소

○ '11년 946건이 발생한 이후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일반선·어선 해양사고 현황 >

(단위 : 건)



주 : '13년 해양사고 통계는 잠정치 임

□ (사고율) '13년 선박 100척당 1척에서 사고 발생

(단위 : 척, 천톤, %)

구분	합계			일반선			어선		
	등록 척수(천톤)	사고 척수	사고 율	등록 척수(천톤)	사고 척수	사고 율	등록 척수(천톤)	사고 척수	사고 율
2009	86,087 (14,512)	915	1.1	8,374 (13,917)	190	2.3	77,713 (595)	725	0.9
2010	86,015 (14,867)	961	1.1	9,041 (14,266)	289	3.2	76,974 (601)	672	0.9
2011	85,025 (14,278)	1,197	1.4	9,396 (13,671)	309	3.3	75,629 (607)	888	1.2
2012	84,790 (13,670)	941	1.1	9,435 (13,059)	288	3.1	75,031 (610)	653	0.9
2013	84,391	818	1.0	9,360	282	3.0	75,031	536	0.7
전년대비 (증감률)	△399 (△0.5)	△123 (15.0)	-	△75 (△0.8)	△6 (△2.1)	-	-	△117 (△21.8)	-

주: 일반선(레저지구 제외)은 '13년말 기준이며, 어선은 '12년말 기준임

□ (선종별) '13년에 어선사고가 65.5%, 일반선박은 34.5%를 차지하였고, 어선사고 비중이 줄고 유조선·화물선 사고는 증가

○ 전년대비 어선사고 선박은 17.9%, 일반선박은 2.1% 감소

(단위 : 척, %)

구분	어선	일반선박						합계
		소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기타	
2009	725	190	7	83	18	35	47	915
2010	672	289	18	107	42	65	57	961
2011	888	309	17	96	37	75	84	1,197
2012	653	288	24	86	39	65	74	941
2013	536	282	18	93	49	54	68	818
합계	3,474	1,358	84	465	185	294	330	4,832
5년 평균 (비중)	695 (71.9)	272 (28.1)	17 (1.7)	93 (9.6)	37 (3.8)	59 (6.1)	66 (6.8)	966 (100.0)
전년대비 (증감률)	△117 (△17.9)	△6 (△2.1)	△6 (△25.0)	7 (8.1)	10 (25.6)	△11 (△16.9)	△6 (△8.1)	△123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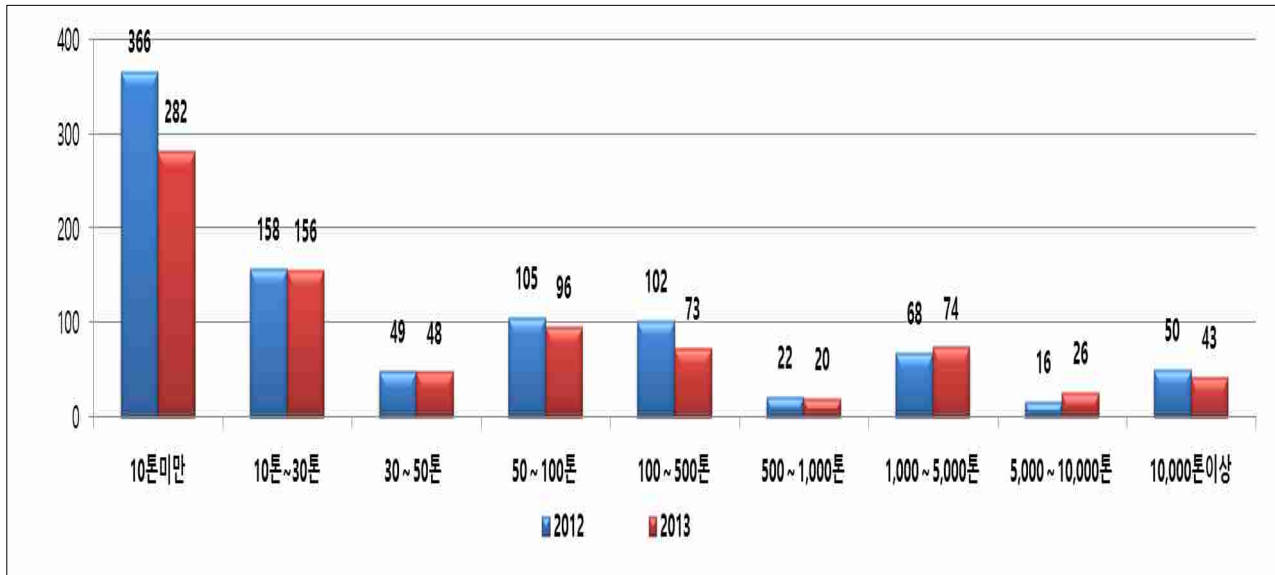
주: 기타는 부선 및 기타선임

□ (규모별) '13년 100톤 미만 사고선박이 전체사고의 71.1% 차지

- 전년대비 100톤 미만 선박사고는 14.2%(678→582척), 100톤 이상 선박사고는 8.5%(258→236척)가 감소

< 전년대비 선박규모별 사고현황 >

(단위 :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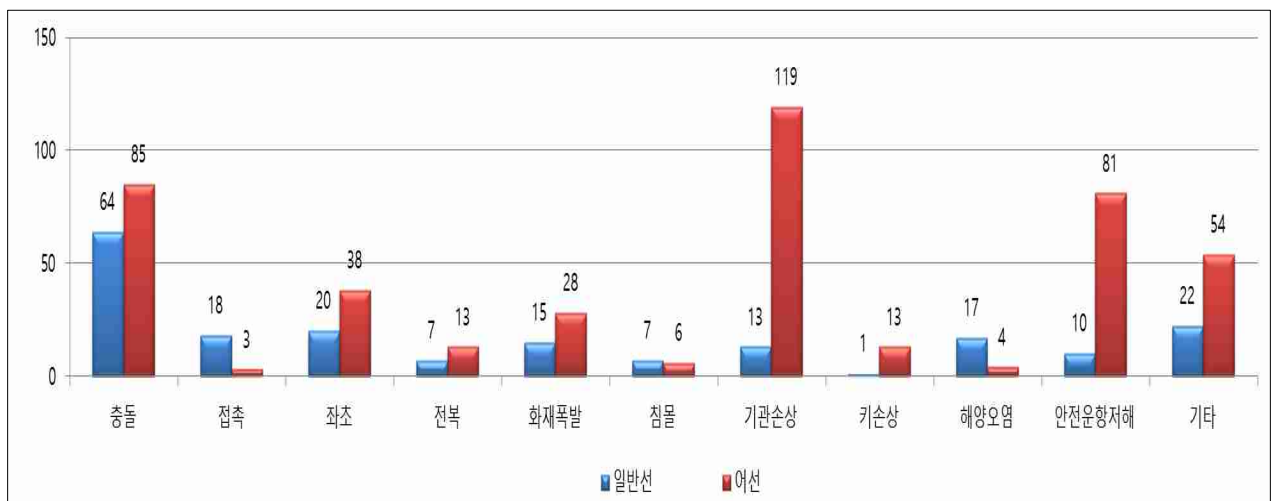
주: '12년 톤급 미상 5척 제외

□ (유형별) 충돌, 기관손상, 안전운항저해 사고 순으로 발생

- 일반선박에서 가장 취약한 사고유형은 충돌이며, 어선은 기관 손상, 안전운항저해로 나타남

< 사고 유형별 사고현황(일반선/어선 비교) >

(단위 : 건)



□ (주요 사고) 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 등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해양사고는 '13년 216건(일반선 80건, 어선 136건) 발생

○ 주요사고는 전년대비 10.7%(242 → 216건) 감소

(단위 : 건, %)

구분	일반선				어선				합계
	인명 피해 ¹⁾	전손 ²⁾ 등	해양 오염	소계	인명 피해 ¹⁾	전손 ²⁾ 등	해양 오염	소계	
2009	22	23	2	47	68	76	-	144	191
2010	28	33	5	66	74	71	2	147	213
2011	33	24	8	65	117	118	0	235	300
2012	31	31	7	69	88	84	1	173	242
2013	33	30	17	80	77	55	4	136	216
총합계 (비중)	147 (12.7)	141 (12.1)	39 (3.4)	327 (28.1)	424 (36.5)	404 (34.8)	7 (0.6)	835 (71.9)	1,162 (100.0)
5년 평균	29.4	28.2	7.8	65.4	84.8	80.8	1.75	167	232.4
전년대비 (증감률)	2 (6.5)	△1 (△3.2)	10 (142.9)	11 (15.9)	△11 (△12.5)	△29 (△34.5)	3 (300.0)	△37 (△21.4)	△26 (△10.7)

주 1) 인명사상 : 부상(1명이상) 및 사망·실종자 발생 사고건수

2) 전손 등 : 실제전손, 추정전손, 침몰 후 인양 및 종파 등 피해규모가 큰 사고건수

3)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재 구성

□ (인명사상) '13년 인명사상은 총 265명(일반선 39.2%, 어선 60.8%)

○ 사망·실종자 수는 1983년(75명) 이후 최초로 두 자리수인 9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4.9% 감소(114→97명)

(단위 : 명, %)

구 분	일반선		어선	
	사망·실종	부상	사망·실종	부상
2009	36	65	71	71
2010	46	14	130	57
2011	41	36	107	96
2012	30	43	84	75
2013	28	76	69	92
5년 평균	36	47	92	78
전년대비 (증감률)	△2 (△6.7)	33 (76.7)	△15 (△17.9)	△17 (△22.7)

- 지난 5년간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한 사고 유형은 충돌, 인명사상, 화재폭발, 침몰, 전복사고 순

(단위 : 명)

사고종류	상선					어선				
	'09	'10	'11	'12	'13	'09	'10	'11	'12	'13
충돌	35	21	25	10	48	77	86	90	49	85
접촉	3	1	7	22	22	0	1	9	3	1
좌초	0	0	0	0	0	1	2	3	21	13
전복	1	2	10	1	5	25	21	8	14	2
화재폭발	2	0	11	23	12	9	16	10	20	22
침몰	5	10	0	1	0	13	48	14	2	3
기관손상	0	0	0	0	0	2	0	1	0	1
인명사상	49	26	23	16	16	13	13	67	46	33
기타	6	0	1	0	1	2	0	1	4	1
합계	101	60	77	73	104	142	187	203	159	161

□ (원인별) '13년 사고의 82.6%가 선원의 인적과실로 발생

- 경계소홀 · 당직태만(53.8%)이 인적과실의 대부분을 차지

(단위 : 개)

구분		일반선					어선				
		'09	'10	'11	'12	'13	'09	'10	'11	'12	'13
인적 과실	경계소홀, 당직태만	42	58	73	53	59	74	79	66	94	71
	묘박,계류의 부적절	-	2	-	-	-	-	-	-	-	-
	선내안전수칙 미준수	5	11	7	6	7	7	8	7	11	8
	선위 확인 소홀	4	15	7	5	1	3	4	4	1	6
	조선부적절, 침로선정 불량	17	17	12	19	11	2	1	3	3	3
	항해법규 위반	21	21	14	3	-	29	20	20	-	2
	항천대비, 대응불량	5	8	4	9	2	7	9	6	2	2
	기관설비 취급 불량	-	4	4	6	2	11	19	8	12	4
	여객, 화물의 적재불량	-	-	1	2	-	2	4	3	2	-
	출항준비불량 등	8	6	11	16	9	6	6	3	8	13
	소계	102	142	133	119	91	141	150	120	133	109
취급 불량	선체, 기관설비 결함	4	3	1	4	2	2	2	-	1	2
	화기취급 불량, 합선 등	2	1	1	3	2	9	9	5	4	7
	소계	6	4	2	7	4	11	11	5	5	9
항해 인프라	항해지원시설 등 부적절	-	-	-	-	2	-	-	-	-	-
	수로조사 불충분	2	1	-	-	-	-	-	-	-	-
	소계	2	1	-	-	2	-	-	-	-	-
환경	기상 등 불가항력	1	2	1	1	5	1	3	-	-	1
기타	운항관리 부적절 등	10	8	8	6	5	7	7	12	1	16
합계		121	157	144	133	107	160	171	137	139	135

주 : 해양사고 원인은 재결서 기준으로 '13년은 잠정치 임

< 주요 사고 사례 >

	<p>□ 화물선 푸셴하이 좌초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13. 7. 2. 21:37/생도 인근 • 선박상세 : 31,643톤(파나마 국적) • 사고개요 : 부산 남외항 정박지 진입 중 생도에 좌초 • 피해사항 : 선체 중앙부 절단·선수부 침몰
	<p>□ 어선 709동남호, 유람선 그랑프리호 충돌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13. 8.11. 11:05 / 거제도 남방 • 선박상세 : 어선 173톤(선원 10명) 유람선 29톤(선원 2명 및 여객 104명) • 사고개요 : 양 선박이 항해 중 충돌 • 피해사항 : 여객선의 여객 28명 부상 및 선수부 파손
	<p>□ 폐기물운반선 7태창호 화재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13. 9.14. 11:05/울산항 정박지 • 선박상세 : 24톤(선원 2명) • 사고개요 : 정박 중인 유조선으로부터 화물창 세정수 이적 중 7태창호 3번 탱크에서 화재 발생 • 피해사항 : 1명 중상, 갑판 및 조타실 소손
	<p>□ 여객선 아라퀸즈호 화재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 '13. 7.20. 19:35/후포등대 인근 • 선박상세 : 3,403톤(선원 14명, 여객 244명) • 사고개요 : 항해 중(울릉도→포항) 기관실에서 휴대용 펌프로 유류 이송 중 유류가 주기관 배기관으로 분출되어 화재 발생 • 피해사항 : 3기사 중상(화상), 기관실 천장 등 소손

《 육·해상 교통사고 인명피해 비교 》

◆ 대(척)당 사고율은 선박이 자동차의 12분의 1에 불과

□ 최근 5년간 자동차·선박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천만대이며 인명피해 사고건수는 22만여건, 인명피해는 35만여명(사망 5,567명, 부상 347,850명) 발생
- (선박) 국내운항척수*는 10만5천여척*이며 인명피해 사고건수는 99건, 인명피해는 272명(사망·실종 136명, 부상 136명)

* 국내운항 척수는 국적선, 레저기구, 국내기항 개별 외국선박 포함

□ 등록대수(국내운항척수) 대비,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율과 인명피해율은 자동차가 선박보다 각각 12배, 7배 높은 상태

* 전체 사망·실종자 658명 중 침몰·전복·해상추락에서 580명(88.1%) 발생(최근 5년)

【 1천대당 분야별 사고율 비교 】

구 분	해 상	육 상	철 도
인명 피해 사고율(건) (사고건수/등록대수·국내운항척수)	0.9	11.4	9.3
인명 피해율(명) (인명 피해 자수/등록대수·국내운항척수)	2.6	18	9.8

* 철도는 자살자가 전체 사망자의 75%를 차지

나. 해안사고

□ (장소별) '13년 해안사고는 전년대비 29.4%(187→132명) 감소

- 대부분의 해역에서 사고가 감소하였으나 해수욕장은 전년대비 70%(10→17명) 증가

(단위 : 명)

구분	계(명)	해상	해수욕장	항포구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갯벌	기타
2010	227	88	14	50	51	17	2	5
2011	316	159	9	45	46	26	10	21
2012	187	100	10	18	20	24	5	10
2013	132	70	17	14	11	11	6	3
합계	862	417	50	127	128	78	23	39
(비중)	(100.0)	(48.4)	(5.8)	(14.7)	(4.8)	(9.0)	(2.7)	(4.5)
4년 평균	215.5	104.25	12.5	31.75	32	19.5	5.75	9.75
전년대비	△55	△30	7	△4	△9	△13	1	△7
(증감률)	(△29.4)	(△30.0)	(70.0)	(△22.2)	(△45.0)	(△54.2)	(20.0)	(△70.0)

□ (유형별) 익수자는 전년대비 7.6%(66→61명) 감소하였으나,

- 고립자, 추락자는 각각 50%, 2.1% 증가

(단위 : 명)

구분	계(명)	익수자	고립자	표류자	추락자	기타
2010	227	45	0	0	23	159
2011	316	66	0	1	54	195
2012	187	66	2	0	48	71
2013	132	61	3	2	49	17
합계	862	238	5	3	174	442
(비중)	(100.0)	(27.6)	(0.6)	(0.3)	(20.2)	(51.3)
4년 평균	215.5	59.5	1.25	0.75	43.5	110.5
전년대비	△55	△5	1	2	1	△54
(증감률)	△29.4%	△7.6%	50.0%	-	2.1%	△76.1%

2. 해양안전 환경 및 여건 변화

- ◆ '14년도는 해상교통량 증가, 경쟁적 조업, 해양관광·레저 다변화, 인력 수급 불균형, 기상이변 등으로 안전여건은 지속 악화 예상
- ☞ '선박'과 '바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 필요

□ 세계경제 회복으로 해상교통량 증가 등 안전 환경 다변화

- (외향) '14년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라 해상물동량과 선박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18천TEU급 '컨'선 등 선박의 대형화도 가속화 전망

* '14년 세계경제가 3.6% 성장 전망(우리나라 3.7-3.9%내 외, IMF)

** 무역항에 입출항한 선박척수는 '10년 40만척에서 '16년 43만척으로 증가 예상(KMI)

- (내향) 연안화물시장은 영세 선사 난립*, 선박 노후화** 등으로 연안 선사의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증대

* 연안화물선사의 82%(718개중 592개)가 자본금 10억 미만의 영세업체

** 연안화물사의 52%(2,013척중 1,062척)이 20년 이상 노후

- (수산) 어선감척('07~'12년 1,280여척)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조업경쟁,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사고 가능성 여전히 잠재

* 연근해어선 47천척 중 21년 이상 노후어선 : '12년 6천척(12%) → '17년 15천척(32%)

- (여객·레저) 주 5일제 정착, 크루즈선의 입항증가*, 해양관광 증대** 및 낚시 등 해양레저 활성화로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지속증가

* 크루즈 입항횟수 : '12년 226척 → '13년 409척 → '15년 635척 예상

** 어촌체험마을 및 해양관광객 수(천명) : '07년 151,543 → '12년 242,179(59.8% 증가)

□ 종사자의 인력수급 불균형 지속과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 해양대 정원증원, 오션폴리텍 등으로 고급 선원양성은 소폭 확대되었으나 외·내항간 수급 불균형과 외국인 고용*은 지속 확대 예상
- * 외국인 선원 고용은 '00년 7,639명에서 '12년 21,327명으로 연평균 8.9% 증가
- ILO 해사노동협약 발효('13.8.20)에 따라 선원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공급에 초점을 둔 종사자 직업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안전관리 기법과 리더십 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 국제적 안전기술 규제와 연구개발 경쟁 심화

-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양사고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선박 기술기준 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e-navigation, 극지해역 선박운항기술, 친환경선박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어 新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기상 악화

- 최대 순간풍속의 증가*, 겨울철 태풍급 북서풍 등 과거에 비해 해양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해양사고의 발생 가능성 증가
- * 지난 '90년대와 '00년대 비교시 최대 순간풍속이 6.1~11.8m/s 증가

□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통합 안전행정 필요성 증대

- 여객선·크루즈선·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이용, 바다낚시, 갯벌 체험 등 일반국민의 바다이용이 한층 다변화·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종사자 중심의 안전에서 탈피하여 선박과 바다이용자 전체 대상의 정책개발과 민·관, 해양·수산 각계의 역량 결집을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안전컨트롤 타워 필요

Ⅲ. '13년 성과 및 반성

◆ (성과) 사람·선박 등 6대 안전요소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83년 이후 30년만에 사망·실종자 수 100명 미만('13년 97명) 달성

- ① 해양사고 30% 감소대책('13.4월 수립) 등을 통해 선박, 해안(해수욕장, 갯바위 등)을 망라한 범정부 통합 해양안전 관리체제 구축
- ② 해양안전실천본부 설립('13.7), 해양안전헌장 제정('13.7), 공중과 홍보, 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③ IMO A 그룹 이사국 7연속 진출('13.11) 및 미국 Qualship 자격 회복('13.5)으로 국적선의 최우수 안전등급 획득·유지(EU, 아·태, 美)
- ④ e-Navigation 도입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적선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Zero**' 달성

◆ (반성) 지속적인 사고감소를 위해 일부 예방·사후관리 부족, 정부 주도의 안전문화, 해안·낚시 등 안전 미비점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

가. 과제별 주요성과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인적요인 관리) 「휴마린 포럼」 창설('13.5), 세미나 개최('13.6,11)로 인적요인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정책기반과 업계 공감대 확산
- (현장교육) 어업인·선원 안전(조업) 지도·교육, 사고사례 책자(1천부) 발간, 해양사고 교훈전파(연 74천명) 등을 통해 종사자 역량향상 유도
- (해기능력) 예인선 신규 항해사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예인선 조종 시뮬레이터를 도입(1,119백만원)하고 실무형 교육 시행
- (인력양성)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14년부터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오션폴리텍 교육('13년 229명)을 통해 우수 인력 양성
 - * '14년 60명 증원을 확정, '15년부터 기재부 등 관련부처 추가 협의 추진
- (외국인 선원)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소」 설치('13.1)로 고충 사항을 해소하고, 어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복지증진) 지자체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선원복지회관 신축(삼천포항, '13.11),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금, 맞춤형 복지비 등 지원(선원 약 6천여명)
- (사고조사) 조사·심판 전문훈련*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 능력을 제고하고 징계집행 유예 교육(39명)으로 사고 재발가능성 차단
 - * 조사관·심판관 전문교육('13.9월), 연안승선훈련(4회), 원양승선훈련(2회)

- (외항선) 취약선박 특별관리, 현장교육 등을 통해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미국 Qualship 지위 획득('13.5)

* '10년 28척 → '11년 26척 → '12년 13척 → '13년 5척

- (내항선) 내항선 선대구조 개선자금*(4.5억원) 지원,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예부선, 유·도선 등 집중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 일부(3%)를 국고로 보조

** '13년 '백아도', '쉬미항', '옥도', '말도'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공사 시행

- (어선) 기관고장·화재예방 선박검사 강화, 어선·낚시어선 안전점검, 노후엔진 대체 지원(35억원), 이동수리소 운영(부산·울산 등), 구명동의 (15백개)·방수복(32백벌) 보급(충남도) 등 추진

- (항해안전성) '레이더*', '항해당직 경보장치**' 설치확대와 야간 식별이 가능한 예인줄 개발('13~'15) 등 충돌사고 예방 추진

* 레이더('13.1.1~) : 총톤수 300톤 → 100톤 이상(약 900척 설치 강제화)

** 항해당직경보장치('13.7.1~) : 총톤수 3,000톤 → 500톤 이상

- (검사강화) 선박검사 강화 방안을 시행('13.5)하고, 검사원 별 「My Ship」 제도를 도입('13.6)하여 어선 화재사고와 기관고장 최소화 도모

- (우수사업장) 레저선박의 대형화와 건조기술 발전추세에 맞춰 우수제조 사업장의 지정 대상* 확대 및 지정 설비요건 개선

* 소형선박(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체

→ 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

- (범정부 안전대책)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선박과 해안(해수욕장, 갯바위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안전대책* 마련

* 해양사고 30% 감소대책('13.4), 계절별 해양안전종합대책(연 4회)

- 해양안전 종합관리 TF*를 구성('13.4)하여 분야별 대책의 이행실태를 민·관 공동으로 지속 점검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 제고

* 해수부, 해경청, 지자체, 선박검사대행기관, 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 등 참여

- (선사역량) 내항선 안전관리 우수사업자 선정·공표('13.4, 5개사), 내항선 안전관리 컨설팅('13.4~12, 18개사) 및 선박 안전관리 협의회 창립('13.7) 등을 통해 선사의 안전관리 능력 강화 유도

- (현장관리) VTS 시설(울산·제주센터 등)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자격 인증 전문교육(총 5회 69명)을 통해 관제사 역량 강화

* 기간/예산/기관 : '13.3.4~10.18 / 139,641천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안전진단) 대형부두 건설(13건), 교량 부설(1건) 등 15건의 해양개발·이용사업에 대해 교통영향을 사전에 진단하여 안전향로 확보

* 사업범위 조정, 부두·선회장 설계 변경 및 추가 준설 등 안전대책 마련

- (여객선) 내항여객선에 특화된 안전운항 시책을 수립('13.8)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항여객 안전운송체계 구축

- (위험물 하역)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13.11), 태풍대비 현장점검('13.8, 울산·포항) 등 현장위주의 대책으로 사고 제로 달성

* 해수부, 지방청, 항만공사 등 참여

- **(e-Navigation)** IMO 국제 규범화에 대비하여 정부 대응체제 마련, 기술개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국가적 종합대응 추진

* 경제장관회의 보고('13.11), 기초연구 수행('13.12), 국제회의 의제제출·발표(7회)

- **(다중이용선박)** 계절별 맞춤형 현장관리, 설·추석 등 명절 대비 안전점검, 정부합동 특별교통관리 등을 통한 여객선 안전 확보

- **(통항안전)** 입출항 선박 관제, 장기정박선박 닛 끌림 방지, 항만통항 위해요소* 개선, 불법어망 등 장애물 제거, 경인아라뱃길 순찰, 교통 질서 단속 및 남해권(여수, 마산 등) 항로표지 기능변경 등 추진

* 부산신항 방파제 밖 수역 서측항로 17m 수심 확보(부산청, '12.9~'14.3)
항내 운항질서 관리를 위한 단속강화 및 어업인 단체 협조홍보(충청남도) 등

- **(정보제공)** 모바일웹 기반 선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3.11), 기상정보 등 데이터 연계를 통한 민간의 효율적 안전관리 지원

- **(기상·해양정보)** 해양기상부이 설치('13.6, 신안군), 선박 기상관측망 운영 등을 통해 이상파랑, 이안류, 폭풍 가능성 예측 및 사전전파

- **(해양관측)** 국가해양관측망 85개소에서 1일 70만건의 조위, 수온 등 해양정보 생산, 연안해역 19,948km²(전체 연안해역의 62%)와 국가어항 98개(전체 109개)의 조사를 완료하는 등 안전한 해양이용 토대 제공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해사외교) IMO A 그룹 이사국 7연임 진출('13.11)과 양·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해사분야 선도적 위상 제고

* 싱가포르(1월), 중국(5월), EU(6월), 호주(7월), 일본(10월), 아·태 해사안전 기관장회의(7월), 아·태항만국통제위원회(1·10월)

- (국제공조) 해적행위 예방·감시·퇴치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 주도 등을 통해 선박의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공고화

- (안전문화) 민·관 협치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 출범과 해양안전 헌장 선포('13.7), '해양안전의날 지정', TV·라디오 홍보('13.7), 국민 참여형 공모전 개최, 가두·SNS 캠페인 등 국민의식 개선 추진

* 중앙본부에 해양수산 노동계, 업계, 공공기관 등 44개 기관(11개 지역본부, 375개) 참여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 (사고대응) 해양수산분야(해수욕장 포함)를 포괄하는 사고대응체제 구축, 매뉴얼 정비, '해수부'~'해경청'간 사고영상 연계('13.1) 등을 통해 관계기관 협업기반의 위기관리체계 정립

- (해적대응) 해적위험해역 운항 국적선 24시간 모니터링(452척), 선원 대피처 설치 의무화('13.6 발효), 청해부대 아덴만 파견, 민·관·군 합동훈련(2회) 및 해적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적피해 제로 달성

- (구조구난) 국가·지방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긴급환자 후송, 익수자 구조 및 해상안전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 (오염방제) 대규모 오염에 대비한 기동대응팀 구성,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등 민간 대응기반 강화 및 대형 방제선(300톤급, 2척) 확보 등을 통한 방제인프라 강화

《 월별 해양안전 주요 추진사항 》

월별	주요 내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국적선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종합대책 수립(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유럽, 호주 등 기항선박 운항모니터링 및 중점관리선박 지정·점검 등 ○ '13년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시행계획 수립(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불량선박에 대한 중점점검 및 점검 우선 순위 부여 등 ○ '13년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운영계획 수립(1.8) :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성 강화, 종사자 안전관리체제 이행력 제고 등 ○ 제23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참가(1.2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1.30 3개월 동안 Paris MOU와 공동으로 “주추진기 및 보조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결정 등 ○ '13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추진계획 수립(1.28) : 기관사고 예방, ISM 점검 강화 및 사고 취약선 특별관리 등 ○ '13년 해사안전 정책방향과 비전 공유 설명회 개최(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사 등 참여 ○ 해양사고 방지 안전관리 현장점검(1.23 ~ 25)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종사자 안전관리체제 특강(2월~, 8회) : 초임 선·기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제의 이론과 실무 교육 ○ 2013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고시(2.1) ○ 2013 항만국통제관 교육 계획 수립(2.8) ○ 봄철 해빙기 해사안전 종합대책 수립·시행(2.26)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여객선 상반기 일제점검 시행(3월중) : 전년대비 구명, 기관, ISM 분야의 결함률 증가(척당 6.7건 결함)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선 안전관리 컨설팅 운영(4.8~) : 5척 미만의 내항선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제 이론교육, 매뉴얼 적정성 검토 등 안전컨설팅 시행 ○ 내항선 안전관리 우수사업자 선정(4.26) : 5개 선사 및 안전관리대행사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고 소속선사의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1년간 면제 ○ 해양사고 예방 긴급 대책회의 개최(차관 주재,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지방청, 해경청, 선주협회, 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선사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연수원, 항만공사 등 ○ 해양사고 30% 감소대책 마련(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출범이후 어선, 레저선박 등 전 해양수산분야를 포함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시행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 마린 포럼 창립(5.29) : 인적요인의 연구 활성화 및 인간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유도 / 세미나 개최(6월, 11월) ○ 해양안전현장 제정을 위한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 ○ 제1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개최(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소방방재청, 해경청, 지자체, 선주단체 등 ○ 제14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5. 23) ○ 여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수립·시행(5.30) ○ 미국 해안경비대(USCG)로부터 선박안전관리 최우수국가(Qualship21) 지위 획득

월별	주요 내용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5.23) 및 훈령(6.25) 개정 : 내항선의 부적합 보고 의무와 내부심사 면제(안전관리자의 월간 방선으로 대체), 시운전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시행 의무화 등 ○ 해양안전 관계관 회의 및 제2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회의 개최(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부산시, 선주단체, 선박검사대행기관 등 ○ 상반기 항만국통제 관련 선사 설명회 개최(6.28) ○ 여름철 해양안전분야 현장점검(6.28, 7.4 ~ 24)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안전관리자 협의회 출범(7.19) : 안전관리자 전문성 향상 및 현장 위주 정책 개발 ○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계획 수립(7.10) : 입·출항 시 집중관제 실시 및 적극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선박별 맞춤형 점검 Checklist 작성·배포 ○ 해양안전실천본부 출범을 위한 발대식 개최(7.19) 및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대식) 해양안전현장 선포, 해양안전엠블럼 소개 등 - (해양안전캠페인) 동해어업관리단·해경청·부산 소방본부 합동 안전장비 전시 및 구명동의 착용 시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주관의 ‘찾아가는 응급심폐소생술 교실’ 운영 및 해양안전 퀴즈대회 개최 ○ 제21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관 세미나 개최(7.22~26) ○ 제3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개최(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선주협회, 한국선급, 위험물검사원 등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지역본부 구성완료(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지역본부, 375개 기관·단체 참여 ○ 제4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개최(8.9)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항만국통제 중점점검(CIC) 실시(9.1~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주추진기 및 보조기관 등 기관분야 점검 ○ 가을철 안전한 바다조성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대비 선박안전강화 등 5대 대책 수립·발표 ○ NIR 시행 대비 항만국통제관 교육 실시(9.5~6) ○ 국제여객선 하반기 일제점검 및 한·중 합동점검 시행(10월중) : 소화, ISM을 제외한 전 분야의 결함률 증가(적당 4.3건 결함) ○ 제1회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 및 제4회 해양안전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13~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과 함께하는 해양안전캠페인이라는 구호로 시작 ○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 수립·시행(9.11) ○ 제5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개최(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중해심, 해양수산연수원, 수협 등

월별	주요 내용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참가(10.2~3) ○ 해양안전실천본부 운영위원회 서면심의(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실천본부 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안전현장 활용계획, '13년 하반기 지역별 안전캠페인 방안 ○ 민관 합동 해운선사 방선운동 전개(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경영자와 해수부가 함께 방선에 참여하여 일선현장에서의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점검 실시 ○ 제6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개최(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지방청, 수협, 선박검사대행기관 등 ○ 제24차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위원회 참가(10.25~31)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마린 포럼 세미나 개최(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포스터 공모전 및 해양안전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 제7차 해양안전 종합관리 T/F 개최(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중해심, 지자체, 선주단체, 수협 등 참여 ○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 현장점검(11.12~14)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해양안전종합대책 시행(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풍랑·화재로 인한 사고예방에 총력 ○ 음주운항 예방 종합대책 시행(12.3) : 수상레저기구 음주기준 상향(0.08→0.05%), 음주측정 거부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1회위반시 50만원→200만원) 등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해양안전현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 NIR 시행 대비 선사 대상 설명회 개최(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 지원용 NIR 리플렛 배포 등 ○ 종장기 해양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 마련(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의식 일깨워 해양안전문화 정착

나. 반 성

- 어선, 예부선 등의 사고 감소로 전체 해양사고가 전년대비 12.1% 감소했으나, 화물선·유조선은 오히려 각각 8.1%, 25.6% 증가
 - 해운경기 침체, 해상인력 수급의 불균형, 선박 노후화 등 안전경영 환경 악화와 미흡한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요인
- ☞ 산업 측면에서의 지속적 정책지원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 안전경영 및 해양사고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

- 유류오염, 시운전선박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의 사고 발생
 -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사고 교훈을 정부·민간으로 환류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
- ☞ 해양안전 정책·제도의 사후 관리와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제도화 노력과 해양사고 관련 정보의 적극적 제공 필요

- 해양레저, 해수욕장 등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분야별 관리체계는 미흡
 - 관리주체의 분산, 인력·예산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관리 곤란
- ☞ 각 계층별 새로운 접근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해수욕장 등 분야별로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필요

- 해양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여전히 부족
 -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양안전문화 활동을 접할 기회가 없는 실정
- ☞ 지역본부를 통해 지자체·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문화사업 확대 필요

IV. '14년 해양사고 30% 감소대책

1. 목표 및 비전

비전

국민이 행복한 선진 해양안전강국 실현

정책
목표

◆ '17년까지 해양사고 30% 줄이기

- (선박) 사고 605건, 사망·실종자 100명 內 억제
 - * 주요사고(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 200건 內 억제
- (해안) 사망자 223명 內 억제

5대
추진
전략

해양안전
사각지대 개선

- 유류오염 등 최근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 이용자 중심의 해양사고 정보 개방

해양사고
예방기능강화

- 해사안전 감독관제 도입
- 전기어선 보급 및 해양재난관리법 제정 검토

해양안전교육
전문화대중화

- 해양안전 리더 양성
- 일반국민 대상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센터 설립

바다이용자
맞춤형 관리

- 해수욕장, 갯바위, 갯벌 등 해안가 사고방지
- 낚시어선 및 마리나 이용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양안전문화
진흥

- 해양안전실천본부 본격 운영
- 해양안전 정보 상시제공 및 신산업 창출

6대* 분야별 안전대책

* ① 종사자, ② 선박, ③ 안전관리체제, ④ 교통환경, ⑤ 국제협력, ⑥ 비상대응

2. 추진전략

전략 1 해양안전 사각지대 개선 및 정책 환류체계 구축

< 실태 진단 (주관기관 : 해수부) >

- ◆ 유사사고* 방지와 안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 재발방지책 마련, 정책 환류체계의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기능 강화 필요

*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유출('14.2),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14.2), 시운전선 충돌('13.12)

□ 유류 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도선과정에서의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도선 매뉴얼(접안방법 등) 제정, 도선계획 사전 제출, 도선면허제도* 개선 및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도선면허 유효기간 설정, 면허체계 세분화(2 → 4단계) 등

- 송유관 자동차단밸브 비상전원 설치,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하역시설 운영 안전성 인증 및 기상악화시 해상급유 가능범위 재검토 추진

□ 시운전 선박(16개 조선소, 연 4백여척)의 안전관리 강화

- '지방청 - 도선사 - 조선소'간 협의체를 통해 선박통항 밀집해역을 시운전 금지구역으로 설정('14.상)하고 최저승무기준* 마련

* 「선박직원법」 개정('13.10월 국회 제출)에 대비하여 시행령 개정('14.12월 공포)

□ 이용자 중심의 해양사고정보 개방

- 해류, 파랑 등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4. 부산·광양) 및 사고위험정보*를 수록한 해양안전지도 제작('14년 부산 등 시범추진)

* 갯바위·갯골·방파제 등 우범지역, 이안류·조류, 물놀이사고, 선박사고, 오염정보 등

□ 해양안전 문화지수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 정부정책의 효과 등을 측정하여 반영하기 위해 '해양안전 문화지수' 개발 및 안전사업 지원을 위한 '시범도시' 지정('14년 방안연구)

* 사고이력, 안전수칙 준수 등 지역·개인의 안전역량을 고려하여 측정항목 도출

전략 2 해양사고 예방기능 강화

< 실태 진단 (주관기관 : 해수부) >

- ◆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 시행,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및 사고다발 유형*에 대한 근본대책 필요
- * '13년 어선사고의 26.7%가 기관고장에 기인

□ 해사안전 감독관제 도입

-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박·선사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 감독관제' 도입
- * 「해사안전법」 개정 및 세부 업무절차 마련 추진('14)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안전 브랜드화 추진

- 우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혜택 제공방안 마련('14)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13.12. 국회제출)의 공포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기관고장 예방을 위해 전기어선 점진적 보급

- 어선(바지락 채취선 등)의 기관고장 저감을 위해 1톤급(4.5KW), 3톤급(15KW) 어선을 점진적으로 전기어선으로 대체('14년 40척, 예산 6억원)
- * 대체 비용 분담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해양재난 대응능력 강화

- 선박사고, 오염사고, 태풍·해일, 적조 등 해양재난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재난관리법」 제정* 및 조직기능 재편 검토
- * 11개 법률에 분산 규정된 해양재난관리규정을 1개 법률로 통합 관리
- 해양오염사고 경보발령 절차 간소화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실무 매뉴얼 개정('14.4)

< 실태 진단 (주관기관 : 해수부) >

- ◆ 해양사고의 약 90%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리더십 배양과 역량제고 교육은 미미
 - * 기존의 교육은 종사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 치중
- ◆ 일반국민의 바다이용이 증가함에도 대국민 대상의 체계적 교육은 없어 안전한 바다이용을 확보하는 데 한계

□ 현장 종사자에 대한 해양안전 리더교육 추진

- 해양안전교육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14.3)하여 각 분야*별 해양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전문지식, 리더소양 등) 개발
 - * (주요대상) 선박종사자, 선주, 안전관리 책임자, 해양레저산업 종사자, 항만시설 운영자, 해수욕장 시설관리자, 정부 및 교육기관 안전담당자 등
- 단기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중단 없는 교육 실행을 위해 '중장기 해양안전교육 추진방안' 마련('14.12월)

□ 일반국민 대상의 해양안전 교육 대중화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성인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을 통해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실시('14.6~)
 -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 사고별 대응방안,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을 연령·수준별로 교육
- * 강사, 교재, 일정 등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방안 마련('14.5월)
전국 20개 해양교육시범학교(초12, 중6, 고2)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가칭) 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 설립 추진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해양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국민체험센터 설립(타당성 검토 '14.하)
 - * 해양안전체험시설 근거 마련을 위해 의원입법 발의('13.10)

< 실태 진단 (주관기관 : 해수부, 지자체) >

- ◆ 해수욕장, 갯벌 등 해안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경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간 안전업무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혼선 발생 우려
 - * '13년 해수욕장에서 20명의 사망사고 발생
- ◆ 낚시어선과 마리나 항만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는 미미
 - * 낚시어선 신고/사고 : ('10) 4,060건/11건 → ('11) 4,359/20 → ('12) 4,708/21

□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정립 추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3.7.2. 의원발의)을 제정 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정립('13.12월 현재 상임위 소위 계류중)
 - 법률 제정 경과에 맞춰 하위법령, 해수욕장 안전관리 기준 등 수립
- 지자체·해경·소방방재청·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일제 점검 및 안전 위험요인 사전 제거
-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안전표지판 정비 및 '해수욕장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 제작·배포

< 주요 지자체별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시	○ 피서철 종합상황실 운영, 안내표지판 제작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전라남도	○ 소방서·해경·수상안전요원·시군·주민 등 합동 안전팀 구성 ○ 여름철 해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기간 운영 및 해파리 예찰 ○ 종합안내소 운영(해변홍보 및 안내, 안전관리, 민원해소 등)
경상남도	○ 해수욕장 개장 기간내 행정봉사실 운영 - 해수욕장 시설 및 장비 점검, 위험요소 사전 제거, 안전사고 예방 홍보용 간판 및 현수막 게시, 안전방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 유관기관 협력(소방서·해경·시민안전요원·보건소)을 통해 사고 접수,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갯바위 · 갯벌 · 방파제 등 해안가 사고 방지 (지자체)

- 어항시설(방파제 등), 갯바위 등 해안가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 정비를 통해 낚시통제구역설정, 안전장비 및 경고판 설치 추진
- 어항 낚시어선업자, 낚시동호회 등과 공동으로 위험지역 낚시행위 금지 지도 · 계도 및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홍보
- * 레저보트, 관광객 등을 위해 긴급대처요령, 비상약품 비치 운영(어업관리단)
- 기상해일 등 조기경보를 위해 지자체 · 기상청간 정보 공유, 피해 예상지역 육 · 해상 순찰, 사고 우려시 신속 대피 및 출입통제 시행

< 어항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어촌어항법) >

- ◆ 국가어항 (안전관리기관 : 해수부,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 지방어항 (안전관리기관 : 시 · 도, 관리청 : 광역시장, 군수)
- ◆ 어촌정주어항 (안전관리기관 및 관리권자 : 군수 · 구청장)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낚시어선의 안전검사 강화, 구명동의 상시 착용 의무화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추진('14)
- 갯바위 허용 구역 외 낚시금지 이행실태 점검 및 계도(연중)
- 낚시어선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현장 중심 · 사례위주의 참여형 전문교육 실시(약 44백명, 연중, 1·4분기 집중)

□ 마리나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계류시설, 선박, 이용자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민간 차원의 '마리나 안전관리 규정'과 '재난 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
- 마리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 제반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실시

< 실태 진단 (주관기관 : 해수부) >

- ◆ '13.7월 민·관 협업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해양안전문화 사업 추진 필요
 - * 해양안전실천본부 : (중앙) 44개 기관·단체 / (11개 지역본부) 375개 기관·단체
- ◆ 그간 해양안전 정보는 통신설비를 갖춘 산업용 선박위주로 제공되어, 요트, 바다낚시 등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은 미흡
- ◆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절실

□ 해양안전실천본부 운영을 통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 해양안전 문화활동의 추진주체로서 실천본부에서 '해양안전의 날' (매월 1일) 등을 통해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연중)

* 해양수산 합동 취약분야 자율 안전점검, 현장 안전교육, 포스터·UCC·웹툰 공모전 및 종사자 대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 '14년 실천본부 운영방향 정립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반기별)

* 문화활동의 방향 정립, 실천과제 도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 : 해수부장관, 민간 1인 / 위원 : 각 계의 장 34명)

< 주요 지역본부별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설치, 홈페이지 개설 등 운영규정·계획 마련 ○ 해양안전 사진 공모전(3분기) 및 안전달력 제작(4분기)
인천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의견 청취 등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간담회 개최 ○ 낚시 유·어선 종사자·이용객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평택당진 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계, 항만운영업계, 해상종사자 및 청소년 대상 현장 해양안전 교육 추진(분기별) ○ 해양안전수칙 등 문화홍보물 제작·배포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강원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의 날 계기, 해양수산분야 합동 캠페인 전개 ○ 안전관리 경험·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계절별 맞춤형 대국민 캠페인 실시
전북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종사자(어업인 포함) 참여 해양안전 현장 캠페인 실시 ○ 참여기관의 해양안전 관련 행사(사업) 시 지역본부 참여 및 지원
경북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현장 게시(홈페이지, 여객선터미널, 방파제 등) ○ 해양안전 가두캠페인 전개(여객선터미널, 무역항순회교육 병행) ○ 어선안전 필수 핸드지침 제작·배포
경남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지역본부 조직 재정비(수협·요트학교·조선사 포함) ○ 선박종사자 대상 안전캠페인 전개 및 대중매체 활용한 홍보 추진

□ 해양안전 정보 상시제공 기반 구축

- 바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와 해양재난·안전정보 제공 관련 업무협약 체결('14.상)
- 해상교통관제센터(VHF 무선전화), 종합상황실(AIS단말기, 문자방송)을 통해 기상상황, 해상교통상황 등 해양안전정보 추가 제공 추진
- 주요 해양수산 기관·단체에서 제작한 각종 교육자료 통합 서비스 제공('14.상, 해수부 홈페이지)

□ 해양안전문화 기반 新 산업 창출

- 해양안전을 상징하는 캐릭터 등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해양안전 인식 제고 추진
 - * (사례) 교통안전(로보카 폴리, 현대자동차), 전기안전(꼬꼬마 케리, 한국전기연구원)
- 해양안전 캐릭터 개발 추진계획을 마련('14.상)하고, 캐릭터 개발 및 대국민 홍보 실시('14.하)

V. 6대 안전분야별 추진계획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중점 1-1 인적오류 기인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내실화

주관기관	해수부, 중앙해심, 공공기관	협업기관	-
------	-----------------	------	---

가.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원인의 약 90%가 종사자의 인적오류에 기인하고 있어,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필요

* (추진사항) ‘휴 마린 포럼’ 창설(’13.5, 29개 기관·단체 참여), 세미나 개최(2회) 및 인적오류 기인 해양사고에 대한 통계적 분석체계 구축 연구(’13)

☐ 추진계획

- 인적요인(Human Element) 관리 역량 강화
 - 인적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휴 마린 세미나’ 개최 (상·하반기) 및 인적요인 회보 창간·배포
-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개발(R&D) 추진
 - 소형·내항선 종사자 교육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개발(’14.10)
 - 해양수산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상종사자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4.3)

- 해양사고의 인적오류 분석체계 선진화
 - 해양사고를 야기한 인적오류 원인 세분화 및 주요 사고에 대한 인적오류 사례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14.4~)

나. 해양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화

□ 배경 및 필요성

- 종사자 인적오류에 의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 교육, 사고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절실
 - *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집체·방선교육(39천여명),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35천여명)

□ 추진계획

- 해양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내실화 추진
 - 선·기장 리더십, 상황인지 능력, 인적오류 이해, 안전관리실무 등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추진
 -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100백만원)
- 인적오류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순회·방선 교육 시행(연간 12천명)
 - 전국 31개 무역항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 방선교육, 여객선·유조선에 대한 특별 교육 실시

< 지방해양항만청·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 내항선 안전관리 개선계획 수립 및 설명회(1월)
	○ 어선-일반선박 간 사고예방을 위한 T/F 구성 및 합동교육 시행(연중)
	【제주해양관리단】
	○ 내항화물 및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안전교육(연 2회)
인천청	○ 선종·운항구간 등 선박특성에 맞춘 방선 교육(연중)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중점 교육 대상을 선별하여 시행 - 항해기기 숙지도, 레이더 판독법 등 실무교육 위주 ○ 전문교수 초빙 종사자 집합교육(100여명) ○ 해양수산계 학교 학생 대상 해양안전 특강(2회) ○ 선박안전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연 6회) - 신규 안전제도, 선박검사·항만국통제, IMO 동향 등 * 선박검사관, 선박검사대행기관(2), 기타 관련 기관 등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항 선박 종사자 교육 실시(연간 400명) - 면허 비대상 선박 종사자, 사고빈도가 높은 취약선박 등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예부선 종사자 대상 순회교육(반기별) ○ 예부선 종사자에 대한 방선교육(연중)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해역 취약선박 종사자 대상 집중 교육 - 공사용 예부선, 연안유조선, 20년 이상 내항화물선 ○ 국제여객선 등 동해지역 기항 외항선 종사자 교육(100명) ○ 무역항 순회교육(2회, 호산항/동해항)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선종별 특화된 방선교육(연중, 350명) ○ 선박 종사자 집체교육(2회, 70명)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선 등 내항취약 선박 방선 및 집체교육(300명)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선 등 취약선박 대상 체감형 전문교육(500명) - 항해당직요령, 기상악화 시 피항법 및 예부선 조선 요령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 및 안전업무 종사자 방선 및 집합(2회)교육(480명) - 충돌예방규칙, 레이더 판독법 등 교재 제작 배포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부선, 소형선박 등 육해상 종사자 특별 교육(반기별) - 구역별 위험요소, 경계사항, 주요공사 현황·계획 등 * 항만공사, 조선블록 운반용 예부선 종사자 등 ○ 선종별 다양한 체험형 방선교육 - 레이더 판독법, 울산항 통항 특성 등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박 대상 사고예방 방선·순회교육 실시 - 충청권역 선박 안전운항 자료, 항해당직요령, 기상악화 시 피항법 및 예부선 조선 요령
여수광양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교육 자료 배포

다. 어업인 등 종사자에 대한 사고방지 정보 제공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어업인, 선원 등 종사자에게 사고 사례 등 안전정보의 지속적인 제공 필요

* (추진사항) 어업인에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시특보(2회)와 수협중앙회의 연근해조업정보지(매월 2회, 13,000부)를 전파

□ 추진계획

-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정보 지속 전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시특보를 어업인에게 전파

* 해양안전예보 전파 12회, 수시특보 전파 2회

- 수협중앙회 연근해조업정보지를 통해 어업인에게 사고사례 전파

* 매월 2회(13,000부) 우편으로 배포

-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현장에서 어선(VHF, SSB 등 활용)에 계절별 기상특성, 주요 사고사례 등 안전정보 제공(어업관리단)

- 해양안전과 수선정보에 대한 국민 및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목포 KBS1 라디오)을 통해 안전관련 정보 송출(서해어업관리단)

- 사고·준사고 사례 등 전파를 통한 종사자 경각심 고취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13년 주요사고 사례와 교훈을 담은 교육자료* 제작·배포

* 사고유형별 중대 해양사고 사례, 사고 원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사점 등을 알기 쉽게 수록

- 선사로부터 제출된 '13년 준해양사고 사례 책자 발간('14.상)

라. 해양사고 관련자의 징계집행 유예 직무교육 시행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 처분자에 대해 징계를 직무교육으로 대체하여 해양사고 관련자에 의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 (추진사항) 해심법 개정 통해 징계집행 유예제도 도입('11.12.16. 시행), 세부 업무기준과 절차 마련('12.4.5, 훈령 개정)

□ 추진계획

- 사고 관련자의 사고재발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해양사고 유형별 교육과정 세분화*

* (선박운항사고 예방 과정) 충돌, 접촉, 좌초, 침몰, 전복 등 10개 과정
(선박재해사고 예방 과정) 화재·폭발, 기관손상, 해양오염사고 등 3개 과정

- 직무교육 이수자 확대를 위해 조사·심판 과정에서 제도 홍보

【 징계집행 유예제도 개요 】

- ◆ (정의) 해양사고 발생시 해당 해기사에게 업무정지(1~3개월)의 징계 대신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그 기간동안 징계집행 유예하는 제도

* 근거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11.12.16. 시행) 제6조의2

- ◆ (운영방법) 재결시 업무정지 1~3개월별로 각각 12시간/18시간/24시간 직무교육을 3개월~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이수

* 교육내용 : 선박운항사고 예방교육과 선박재해사고 예방교육 2종

중점 1-2 선원 고용여건 개선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선주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시 해양대학교 등 대학교 졸업자를 선호하여 해사고 등 고등학교 졸업자 편입비율*이 저조

* 최근 3년('10~'12)간 해사고 편입 비중은 19.7%(총 2,600명 중 511명 편입)

☐ 추진계획

- 해양계열 고등학교 졸업자 편입율을 차년도 선주단체 별 인원 배정에 적용토록 개선방안 마련('14년 상반기)

중점 1-3 선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주관기관	해수부, 중앙해심, 지자체	협업기관	-
------	----------------	------	---

가. 선원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시설 확충

□ 추진현황

- 선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금, 결혼예식비, 순직선원 장제비, 맞춤형 복지비 지원 등 추진('13년 5,677명 지원)
- 삼천포항 선원복지회관 신축 준공('13.11) 및 군산 비응항 선원복지회관 설계 완료('13.12)

□ 추진계획

- 선원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활성화('14년 52억)
 - 선원 자녀 장학금·결혼예식비 지원, 맞춤형 복지비 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 등 선원복지사업 지속 시행
- 군산 비응항 선원복지회관 건립(연면적 600㎡) 및 감천항 원양선원회관 증축(3층→5층, 528㎡) 추진

* ('14년 예산) 비응항 준공 사업비 1,990백만원, 원양선원회관 증축사업비 470백만원

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시행

□ 추진현황

- 해양사고관련자 권익 보호와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선심판변론인 선정지침 마련('13.2)

* 국선심판변론인 참여 심판 실시(선정 66건)

□ 추진계획

-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국선심판 변론인 제도 운영

-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최신화 및 관련 정보 대국민 공개

* (공개방법)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 www.kmst.go.kr

【 국선심판변론인제도 】

- ◆ (정의)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국선번호인제도와 유사)

* 근거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11.12.16. 시행) 제30조

- ◆ (대상) 사회적 약자(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자 등)

* 해심의 직권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능

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안정적인 어업활동지원을 위해 어업인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의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해수부는 수협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료의 15~70% 지원 ('14년 77,523백만원)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지자체	주요 추진사항
부산광역시	【 남구 】 ○ 연근해 어선 보험료 12척 지원(보조금 교부 6, 12월 / 11백만원)
	【 사하구 】 ○ 구내 84척 532명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36백만원) ○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업인(124명)에 대해 공제비 지원
	【 강서구 】 ○ 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 어선규모별 차등지원(11백만원) ○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 어업인 지원(39백만원)
인천광역시	○ 재해보험료 지원(180백만원, 웅진군 등 8개 기초지자체)
경기도	○ 1인당 자부담 보험료의 35.6%지원(147백만원) - 순수 부담금액에 대하여 영세한 어업인 위주 차등지원
강원도	○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험료 지원(792백만원)
전라북도	○ 연근해 어선원 1,500명 대상 재해보험료 지원
전라남도	○ 보험료 중 국고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400백만원)
경상남도	○ 어선 규모별 차등지원(600백만원) - 30톤 미만 20%, 30~50톤 15%, 50톤 이상 10%
제주특별자치도	○ 영세 어업인 위주로 규모별 차등지원(431백만원) - 순수부담액의 최고 50%

중점 1-4 외국인 선원의 근로 여건 향상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외국인선원 권익 보호

☐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 선원 송입 과정에서의 부당한 계약체결 방지와 선상폭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으로 외국인 인권사고 예방

☐ 추진계획

-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등 결정시 정부의 역할 강화
 -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송입업체에 대한 종합평가제 도입
 - 송입 비용,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이탈율 등 송입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미달 업체 퇴출 추진
- 외국인선원 폭행 등 인권발생시 가해자에 대해 선원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외국인선원 고충 상담소 운영

☐ 추진배경 및 현황

- 기존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외국인선원의 권익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외국인선원 고충 상담소(대면상담 등)'로 전환

* '13.1월 1개국(인도네시아)으로 서비스 시작 후 '13.11월 3개국(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으로 확대 시행

☐ 추진계획

- 국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 선원 고충 상담소 지속 운영

중점 1-5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협업기관	-
------	----------	------	---

□ 추진현황

○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험·참여형 교육 실시

- * (25톤 이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위탁교육(6회, 522명),
수협 안전조업 전문강사 출강교육(34회, 3,338명)
- (25톤 미만) 수협 안전조업 전문강사 출강교육(327회, 32,763명)

□ 추진계획

○ 어업 종사자 안전교육 및 상설교육장 시범운영 추진

-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어항에서 어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업 교육 시행

* (목표인원) 38,333명(기관 위탁 3,292명, 강사지원 순회교육 71개조합 35,041명)

- 안전사고, 조업장비(데릭, 조상기 등) 및 어구장비(주낙 바늘, 와이어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안전관리 교재 개발·보급(서해어업관리단)

- 도서지역 어업인 간담회시 1인, 부부조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홍보 실시(동해어업관리단)

- 교육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한 재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상설교육장(인천, 포항) 시범운영

○ 어선 위치발신장치 사용법 교육 강화

- 위치발신장치가 충돌 등 사고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어업현장 방문 및 어업통신국 체험·견학행사시 교육 시행(134회, 1만명)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광역시	<p>【 중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강서구 / 수영구 / 기장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특보 시 출입항 및 대피요령, 해양사고 사례, 구명동의 상시 착용 등 교육·홍보(특히 낚시어선에 대해 시행)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한기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 제도변경 사항, 어선안전 사고 예방 및 조업질서 교육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54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연안 시·군 어업인 대상 조업지도 및 안전교육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전개, 구명동의 착용 계도 ○ 낚시 성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3~4월) ○ 금어기를 활용한 어선 안전점검(7~8월) ○ 낚시어선업자 대상 안전집합 교육(11~12월)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항, 태안항 종사자 순회교육 참여 지원 ○ 어선원 대상 어한기 어촌계 순회 교육 지원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16개 연안 시·군 어업인) ○ 선박피해 예방교육 및 구명동의 착용 계도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협회에 찾아가는 순회교육 실시 ○ 어선 안전의 날 안전 캠페인 및 계절별 선박피해 예방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교육(6개 수협, 2,000명) 및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주관기관	해수부, 해양수산연수원	협업기관	교육부
------	--------------	------	-----

가. 우수 해기사 양성 확대

□ 배경 및 현황

- 신조선 공급 증가, 신규 산업영역 확대 등에 따른 해기사 수요 증가에 비해 양성인원 제한으로 해기사 수급 불균형 발생
- 향후 해양산업분야의 새로운 해기사 인력 수요(해양플랜트서비스 및 선박관리업 등) 확대 등으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 예상
- * 우리나라 해기사는 '20년 약 6.9천명, '30년 약 7.1천명 부족 예상
관계기관 협의·공청회 등을 통한 해양대학 정원증원('14년 60명)

□ 추진계획

- '15년도 해양대 해사대학의 정원 195명을 증원하고, '17년까지 총 500명 증원 추진
- 교육부,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국회 등과 협의 추진
- 해운업계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한 고급 해기사 양성 지속 추진
- * '13년 총 209명(원양어선 21, 외항상선 150, 내항상선 38) 수료, 취업률 90.9%

<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

구 분	외항상선 3급	원양어선 3급	내항상선 5급
교육인원	150명 (항해 75명/ 기관 75명)	30명 (어업 15명/ 기관 15명)	30명 (항해 15명/ 기관 15명)
교육기간	9개월 3. 3 ~ 11.28	8개월 3. 3 ~ 10.31	5개월 8. 11 ~ 12.19
	(육상6월 + 승선실습3월)	(육상6월 + 승선실습2월)	(육상4월+승선실습1월)
수료 후 특전	교육과정 수료(이론교육 6월) 및 승선실습 1년 총족 후 해당면허 취득		교육과정 수료 후 해당면허 즉시 취득
협력기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나. 새로운 운항시스템 및 운항기술을 습득한 해기사 양성

□ 추진현황

- 북극항로 운항에 대비하여 극지운항기술을 습득한 해기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 기관(해양수산연수원)의 역량 강화 추진

* ‘Ice Navigator 국제교육기관’ 인증·등재를 위한 자체연구 및 한-러 해운 협력회의 참석('13.9), 러시아 마카로프 해양대학 연수('12) 등 추진

- 국제항해 선박 종사자의 대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교육과정’ 개발

* 표준해사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3과목에 대해 각 40시간씩 총 120시간 운영,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교육 실시

□ 추진계획

- 극지항해 운항기술 보유 해기사 양성을 위한 Ice Navigator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교원 양성 추진

-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북극해 운항선박 승선, 러시아 현지 방문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극지해역 Ice Chart 독도법, 빙하구역 식별요령, 항해 시뮬레이터 개발, 극지 운항항로 계획수립 기법 등

- 국제항해 종사자 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영어 의사 소통능력 강화 교육과정 지속 운영

* 표준해사영어(해사영어 포함)과목에 대해 80시간 운영

다.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및 해외진출

□ 추진현황

-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13년 240명) 및 외국선박 관리 유치 추진

* 일본 선박 관리 유치를 위한 해외설명회 실시('13.6월 이마바리)

□ 추진계획

- 선박관리 산업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해 국내 선박관리 분야 전문 인력 300명 양성 추진(상·하반기 2회, 선박관리산업협회 위탁)
- 선박관리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설명회 개최(일본)

일반 1-1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 교육체계 확립

주관기관	해경청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면허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면허 획득 면제교육의 엄격한 운영 필요

□ 추진계획

- 면허시험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시험업무 종사자 정기교육, 시험 감독관 교류배치, 시험장 지도·점검, 전자채점 시험장 확충 등 추진
 - * 종사자 교육(2월), 지도·점검(5월, 11월), 전자채점 시험장 확충(4개소→6개소)
- 조종면허 보급을 통한 수상활동자 안전의식 고취와 면제교육 제도 확립을 위해 면제교육 관리지침 개선, 교육기관 신설 및 강사 교육 시행
 - * 관리지침 개정(1월), 강사교육(2월), 교육기관 지도(5월, 11월), 교육기관 신설(연중)

2. 선박 안전성 강화

중점 2-1 중·소형 유조선 안전 제고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화주·선사 간 협력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추진현황

- 내항 유조선의 폭발·화재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와 위험물 취급 화주(4대 정유사*)간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12.4.2)

* SK 에너지, GS 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 추진계획

- 선·화주 간 선박 안전관리 노하우를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반기별)
- 휘발유 등 고위험 화물 양하 후 화물창 세정시간 준수여부, 선원 휴식시간 부여 상태 등 업무협약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 시행

나. 내항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체화 유도

□ 추진현황

- 정유사의 자체 안전규정 개정을 통해 내항 소형 단일선체 유조선(108척)을 이중선체로 개조(또는 감축) 추진

* 중·대형 유조선(5천 DWT톤 이상)은 단계적으로 이중선체 旣 의무화(∼'11.1)

□ 추진계획

- 내항 소형 유조선(5천 DWT톤 이하)의 자율적인 이중선체화 유도를 위해 해수부, 선사, 정유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반기별)
- 정유사 자체 기준 개정 현황, 이중선체 개조 실적 및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 점검

중점 2-2 내항선·어선에 안전관련 항해장비 설치 확대

주관기관	해수부, 부산시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 운항자(선장·항해사)의 졸음운항으로 인한 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 확대 필요

* 최근 5년간('08~'12) 전체사고(3,612건) 중 충돌사고가 22.8%(1,201건) 차지

- 5톤 미만 어선은 통신설비(VHF)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해 중 일반선박과 충돌 위험시 상호 통신할 수단이 없는 실정

- 또한, 사고발생 시 통신수단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상태

□ 추진계획

- 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대상 확대(3,000톤→ 500톤 이상) 추진

* '14년 상반기까지 국제항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약 180척)에 대해 설치 (3~12분 간격 리셋이 없을 경우 알람 작동)

- 어선에 무선 통신설비(VHF-DSC) 설치대상 확대 추진

- 現 5톤이상 어선(8,459척) → 2톤 이상(28,360척)으로 확대

- 무선설비 설치면제 대상 어선에 대한 자동위치 추적 시스템 및 무선 통신설비(VHF-DSC) 설치 지원(부산시)

중점 2-3 해양안전 기술개발 추진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新 기술개발(R&D)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IMO 등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양안전 및 환경 신기술 개발·투자 필요

* R&D 예산(백만원) : '11년 9,650 → '12년 10,203 → '13년 13,475 → '14년 18,800

□ 추진계획

- 해사안전 미래 산업기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14.4) 하고 기술개발 후속조치로 국제회의 의제개발, 특허 출원·등록, 정책연구 만족도 평가 추진
- IMO의 극지운항선박코드(Polar Code) 제정 추진('16년 발효목표)에 따라 극지운항선박을 위한 항행안전기준 개발('14.12)

< 연구과제 목록 >

분야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연구비 (백만원)
해양안전 기술개발	해양안전실현을 위한 차세대 VTS 기술개발	'10.5-'16.4	11,100
	[종료] 지능형 해양사고 예방 및 구난기술 개발	'08.9-'14.8	6,600
	IMO 선박안전 및 환경규제 대응 정책연구	'11.12-'16.8	500
	[신규]해양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기반연구	'14-'18	7,500

분야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연구비 (백만원)
	[신규]극지역 운항선박의 항행안전 핵심기술개발	'14-'18	9,000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TCS 시스템 구축	'11.10-'17.7	22,000
	선박배출 대기오염원(PM, BC)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	'12.11-'17.8	10,000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 기술 개발	'11.9-'16.8	1,000
	상시공모과제(국제협약대응, 해사안전시설분야) (1)다관절 파공봉쇄장치 개발 (2)레이저다이오드를 이용한 해상 등명기 기술개발 (3)육지 초인용 LED 등명기 기술개발 (4)야간식별 예인줄 개발	(1)'12.-'15. (2)'13.-'15. (3)'13.-'15. (4)'13.-'15.	-
선박평형수 관리기술 개발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장치 개발	'09.1-'15.8	2,950
	USCG기준 부합 BWTS 핵심기술 개발 및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	'13.4-'18.3	12,000
해양교통 기반시설 기술개발	DGNSS 서비스 성능강화 및 항만 PNT 모니터링 기술 개발	'12.12-'15.11	2,300
	[종료]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기술개발	'11.12-'14.12	2,200
	[종료] 광역보정시스템(WADGPS) 구축 기술개발	'10.10-'14.9	3,750
	[종료] DGNSS 보정서비스 신뢰성 기술개발	'11.8-'13.8	800
	[종료] DGNSS 응용기술개발 기획연구	'12.11-'13.6	50

나. 야간 충돌예방을 위한 예인줄 개발·보급

□ 현황 및 문제점

- 야간, 악천후 시 예인줄의 식별이 어려워 다수의 해양사고 발생
 - * 최근 5년간('08.~'12.) 예인선의 예인줄 관련 해양사고는 약 40건 발생
- 육안·레이더로 식별이 용이한 예인줄이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선제적 개발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산업화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일정한 거리에서 레이더에 잘 감지되고, 야간·시계 제한 시 육안으로 식별이 매우 용이한 '특수 예인줄' 시제품 개발('14.하)
 - 현장 시범적용 후 新 예인줄의 국내 의무화 추진('15. 하)



중점 2-4 노후 선박의 안전검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시, 강원도	협업기관	-
------	----------------------------	------	---

가. 노후선박 및 어선에 대한 검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노후선박은 선체두께 측정, 매년 상가검사에도 불구하고 선체외판의 균열·파괴 등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이 가능성이 큰 실정
- 노후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운항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선박 종사자가 본선의 안전을 자체진단 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추진계획

- 노후 선박*별로 'MY SHIP' 제도를 운영하여 검사원이 담당 선박에 대한 주기적 검사, 이력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 지속 확인 추진

* 길이 24m 이상, 선령 30년 이상 선박

- 사고취약설비에 대한 검사강화 및 사고이력관리 DB 구축
- 노후선박의 각종 설비에 대한 '선박검사 무료특진 서비스'와 선박 검사정보 제공 서비스인 「SHIP INFO*」 지속 실시

* 소유자가 선박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특진진단 결과보고서' 발급

- 노후선박 운항체계 개선 지원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선박 종사자의 자가진단을 위한 안전점검표 개발 지원(한국선급)

- 본선 선원과의 간담회 개최(입거 검사시)

- 선박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 사례집 발간(매년)

나. 선박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선박안전기술공단)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검사 관련법령과 기준이 수시로 제·개정됨에 따라 검사원이 최신 검사기법·기준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필요
- 선박검사의 신뢰도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검사에 필요한 최신 장비와 인프라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직무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 선박안전기술공단내 직무보수 교육 활성화
 - 트라이볼로지(윤활학) 교육 등 직무 전문화 위탁교육 확대
 -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국제협약검사 등 새로운 국제협약과 검사 기준에 대한 교육 실시
 - 최신 검사기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규 도입한 검사장비 활용방법 및 판독요령 등에 대한 교육 추진
- * 발전기 전압검사를 위한 ‘내전압시험기’, 선체재료(FRP 등) 시험용 ‘디지털 온도측정기’ 등

다. 노후기관 교체 및 노후어선 감척

□ 현황 및 문제점

- 노후어선은 기관 고장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의 대체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전체어선 75,031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이 12,704척(16.9%) 차지

□ 추진계획

- 해양사고 예방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자금* 지원(전체 사업척수 '13년 350척 → '14년 390척)

* 용자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 상환(연리 3%)

< '14년 지자체별 사업내용 >

시군별	사업량 (척)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부산	33	1,116,600	335,000	335,000	446,600	
인천	20	666,700	200,000	200,000	266,700	
울산	14	456,700	137,000	137,000	182,700	
경기	17	576,700	173,000	173,000	230,700	
강원	34	1,156,700	347,000	347,000	462,700	
충남	23	773,300	232,000	232,000	309,300	
전북	24	816,700	245,000	245,000	326,700	
전남	107	3,566,700	1,070,000	1,070,000	1,426,700	
경북	18	620,000	186,000	186,000	248,000	
경남	68	2,296,600	689,000	689,000	918,600	
제주	32	1,073,300	322,000	322,000	429,300	
합계	390	13,120,000	3,936,000	3,936,000	5,248,000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시 노후어선 감척 우선 추진('14년 총 450척)

< '14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

시군별	사업량 (척)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부산	42	1,722,000	1,377,630	344,400	
강원	17	697,000	557,600	139,400	
충남	80	3,280,000	2,624,000	656,000	
전북	2	82,000	65,600	16,400	
전남	100	4,100,000	3,280,000	820,000	
경북	42	1,722,000	1,377,600	344,400	
경남	154	5,945,000	4,756,000	1,189,000	
제주	22	902,000	721,600	180,400	
합계	450	18,450,000	14,760,000	3,690,000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라. 어선 기관실 화재방지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 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어선이 화재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FRP)재질로 건조
 - 특히 10톤 미만과 '06.7월 이전 건조된 어선은 기관실내 난연성 수지 도포 면제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

□ 추진계획

- 화재에 취약한 FRP 어선의 기관실에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 어선설비 기준 개정 추진('14년)

마.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및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어선은 잦은 입출항과 바쁜 조업일정 등으로 기관정비 소홀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실정
- 어선의 노후화로 저효율 노후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증가 우려

□ 추진계획

-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계획 수립·시행(부산시)
 - 소형어선(선외기) 엔진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점검(연로필터, 점화 플러그, 유압실린더캡 등) 및 부품 무상교환 추진
 - * 1인 1회 5만원 이하 범위에서 무상교체, 초과부분은 어업인 부담
-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유류절감장비 등 장비 현대화 지원(강원도)

중점 2-5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선박용물건 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선박용 물건은 1회 형식승인만으로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어 기준에 부적합한 부품·재료의 사용 가능성 상존
- 제조사양서·구조도면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절차가 없어 국제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식별 곤란

☐ 추진계획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 지정 추진(선박안전법령 개정)
 - * IMO 권고* 및 미국·EU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
- 제조사양서·구조도면 등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승인 절차 도입

나. 레저선박(선체) 형식승인 시험기관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레저선박(선체)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기관이 없어 형식승인을 받거나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건조업체가 없는 실정

* 우수제조사업장 지정 시 건조검사 간소화로 건조기간·비용절감 효과 발생 기대

□ 추진계획

- 레저선박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제도’ 활성화 유도

*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해수부 고시)」 개정('13.9)

- 레저선박 선체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및 형식승인 업체 지정 추진(신청시)

중점 2-6 안전취약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건조 자금 지원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외항선사의 안전경영을 위한 금융기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해운업계의 안전경영을 위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금융 등 다각적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14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 지원 및 P-CBO* 발행을 통한 중견·중소선사 신규 회사채 발행 지원

*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증권(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해운보증기금 설립 검토 및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해운·금융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운금융 포럼' 활성화 추진

나. 내항선박의 신조자금 지원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 일부(3%)를 국고로 보조하는 이차보전사업 시행을 통해 '13년 10척의 내항선 신조 지원('13년 예산 4.5억원)
- 영세한 내항선사의 자본력을 감안하여 대출규모 확대 필요

□ 추진계획

- 내항선박 신조자금 계속 지원
 - '14년 지원대상 사업자 · 선박 공모('14.1) 및 선정('14.2)
 - 신조자금 대출('14.3) 및 이차보전금 지급('14.4)
- 대출규모의 지속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일반 2-1 내항 취역선 현장 안전점검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현 황

- 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내항선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내항화물선 안전 전담반' 운영 중('11~)

□ 추진계획

- 예부선, 유조선, 노후 화물선 등 내항선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선박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속 실시
 - * 필요시 검사대행기관(KST, KR)과 합동점검 시행
- 해사안전감독관제와 연계한 내항선 안전점검 절차 마련('14. 상)
 - *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을 위한 해사안전법 시행 시기에 맞춰 훈령 제정·고시
 - ※ '내항화물선 안전 전담반'을 확대·개편하여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장비 작동법, 승무정원 적정성 등 점검 <p>【 제주해양관리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운반선, 모래운반선 및 내항화물선 취역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관의 승선선종 및 경력 등을 고려, 선사(선종)별로 전담반 구성 ○ 월별·선종별 중점 점검사항 지정 운영 ○ 선원의 비상대응능력 및 자체 선원교육 실시여부 등 확인

기관명	주요 추진계획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고위험군인 예인선, 노후화물선 집중점검 ○ 유조선 작업절차 준수여부 점검 등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선종별 정기 점검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 항해, 소화 등 안전설비 집중점검 및 승무정원 적정성 확인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선, 예부선 등 선종과 운항환경에 따른 점검항목 설정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인선, 연안유조선, 내항화물선에 대해 선박운영 및 설비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 시행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화물선, 항내 공사작업선, 역무선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현장점검 시 선원 안전교육 실시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인선, 연안유조선, 20년 이상 내항화물선, 항내 공사작업선 및 역무선 정기적 점검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순위 차별화 및 My company 제도운동을 통한 집중관리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유조선 등 상시방선을 통해 위해요소 제거

일반 2-2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해상 위험물컨테이너 수출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물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에 의존(중량기준 약98%)

* 수입 약 272천TEU, 수출 약 265천TEU
(수입은 매년 약 11.4% 증가, 수출은 매년 약 14.6% 증가)

- 국제적으로 위험물 운송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사고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 추진계획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정비
 - 소량위험물이 수납된 컨테이너의 표시·포장요건 등 제36차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사항 반영

- 부산신항의 위험물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전담요원 지정(부산청)

* '13년 부산항 총 물동량의 61.4%(19.1% 증가) 신항에서 처리

일반 2-3 소형어선의 생존성 강화 (저체온증 방지)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어선원들은 조업 중 구명동의끼를 착용하지 않고, 특히 겨울철은 구명동의를 착용하더라도 체온저하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한 실정

* 바다추락시 생존가능시간 : 수온 0도 이하 15~45분, 4~10도 1~3시간

□ 추진계획

- 해상 추락에 대비하여 조업 중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추진
 - 착용성이 좋은 구명동의를 보급(14년 56백개)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통해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 저체온증 방지를 위한 소형어선용 구명장비 개발·보급
 - 저체온증 방지 구명동의 개발(R&D 2차년도 추진, 과제선정 '13.12)
 - 간이 구명뗏목 개발(R&D 2차년도 추진, 과제선정 '13.9)

일반 2-4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현황 및 문제점

-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선박이용 시 충분한 편의 시설 및 안전시설 확보 필요

* 국고여객선(신해5호) 대체건조 시 장애인 화장실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 추진계획

- 국고여객선 건조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고려한 선박의 설계 및 건조 활성화 추진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지원 검토

3.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중점 3-1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추진현황

- 선사의 자율적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내실화 방안 추진('13.1)
 -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선박 안전관리 체제 요건 간소화로 시스템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
- 영세선사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 도입('13.4~, 16개사)
 - * 선사 안전관리 매뉴얼 검토,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선사의 특성에 맞는 관리기법 권고·제안

☐ 추진계획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 제고
 - 내항선 선원의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를 위한 안전관리체제 특별 교육 실시(연 6회)
 - * 해양수산연수원 주관 연안선 직무교육 과정 활용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심사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

* 내항선 인증심사 표준 점검표 제작,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선원·선박관리 등 위임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행토록 관련 절차 개정 등

-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체제가 잘 갖추어진 내항선사를 안전관리 우수사업자(5개사 이내)로 선정 및 홍보

* 지방청 안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안전관리체제 심사절차 및 기준 개선

- 사업장 심사 시 '최고경영자'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고 대행업체 심사 시 '선주', '선원·선박관리 회사' 입회 명문화

- 안전관리(책임)자 역할수행의 적정성 집중심사

- 외국인 혼승 선박에 대한 적용 요건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인증 심사 기준 마련

○ 내항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 확대 및 효과 제고

- 업계에 서비스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나. 사고 선사·선박 수시심사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선박·선사에 대해 안전관리 체제의 적정 이행여부 등 확인 및 미비점 보완·개선 필요

□ 추진계획

○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한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한 수시심사 실시

* 사망·실종·충돌·좌초·전복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

-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심사결과 중부적합 사항 식별 시
‘선박안전관리 증서’ 회수 조치 및 사업장에 심사 필요성 검토

○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심사 결과 등을 동종 선사와
선박에 전파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선박·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시심사 【 제주단 】 ○ 해양사고의 규모 및 피해정도, 인명사상 여부,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수시인증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관할청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청과 협조체제 구축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해양안전심판원과 수시 교류 ○ 안전관리취약 사업장(선박)에 대한 심사 강화 ○ 단계적 수시심사 실시(1차 소속 사업장, 필요시 선박으로 확대) ○ 인증심사 시 선종, 항로, 선원구성 등을 고려, 실질적 이행여부 점검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를 유발한 선박, 선사에 대해 사고의 경중, 사회적 물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시심사 및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증서 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육·해상 종사자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심사 이력 관리·재분류에 따라 차기 심사시 참고하고, 종사자의 업무 친숙도 제고를 위해 노력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선사 및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실효성 점검(사고발생시) ○ 사고다발선사의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동해청	○ 등록선박 및 관할 해역내 중대사고 유발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실효성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군산청	○ 사고선박 및 결함선박 신고접수 시 방선 안전점검 및 수시심사 - 사고 및 결함발견 이후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체제 이행상태 및 재발방지 계획수립 여부 등 심사 - 외국적선 사고접수 시 항만국통제 후 결과에 따라 해당선급 특별심사 추진
목포청	○ 사고선사에 대한 수시인증심사로 안전관리체제 실효성 점검 - 사고선사의 해양사고 재발 대책 확인 병행 ○ 사고선박 및 사고선사 선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실효성 점검 및 선원 교육을 병행
포항청	○ 사고선사의 수시인증심사를 통해 선원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관리체제의 필요성 각인
평택청	○ 안전관리체제가 적용되는 국적선의 사고발생 시 수시심사 실시 ○ 사고원인 관련 안전관리체제 취약요소 적극 발굴 및 매뉴얼 반영 ○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제 수립여부 및 대처능력 검증
울산청	○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선박·사업장 수시심사 및 지도·감독 실시 - 사고 대응의 적절성 검증을 통한 선박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 관리선박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매뉴얼 보완 - 수시심사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개선활동 이행여부 지속 확인 * 선박 이력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심사결과 공유 및 선급 추가 심시 지시 ○ 선주, 안전관리책임자와 합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사고선박 수시심사(지도·감독) 시 선주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면담 및 안전관리매뉴얼 교육 병행 - 적절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개선 방향 등의 컨설팅 지원 - 차기 선박(사업장) 인증 심사 또는 선박(사업장) 방문 시 재발 방지대책 이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등 사후관리 시행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관리와 영업 이익이 충돌할 경우 안전관리대행사가 국제협약 (ISM Code*)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 상존

*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 안전관리대행사가 선주와 동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마련과 업계 분위기 조성 필요

□ 추진계획

- 안전관리대행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 개정 추진

- 해운업계의 환경변화(안전관리 주체 : 선사→대행업체)에 따라 ISM Code 상 선박의 안전관리에 최종 책임이 있는 ‘최고 경영층’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안문서 제출('14.2)

* 현재 선원·선박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안전관리대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대행사의 대표를 ‘최고 경영층’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

- 안전관리대행사에서 선원·선박 관리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근거 마련 추진(ISM Code 개정)

* 위탁업무(Delegated task) 범위와 대행업체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IMO 제안문서 제출('14.10)

○ 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 및 면허제도 도입 검토

- ‘선박 안전관리자 협의회’(13.7월 창립)의 내·외항 분과별 주기적 모임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간 안전관리 정보 공유 유도
-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위탁 시행(한국선급)
- 안전관리자의 면허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추진
- * 외국 및 타 교통분야 사례, 제도도입 시 영향, 법정 교육과의 연계 방안 등

중점 3-3 내항 여객선 및 시운전 선박 안전운항 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시책 수립·시행

☐ 배경 및 필요성

- 개정 「해운법」의 시행('12.12)에 따라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시책' 수립·시행('13.8~)

☐ 추진계획

- 내항여객선에 특화된 안전운항시책 수립·시행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 등과 연동하여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미흡사항 보완 추진

나. 신조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해상시운전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임시항해검사를 실시
- 경남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선소가 소재*함에 따라 시운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

* 경남지역 조선사 현황 : 진해(1), 고성(2), 통영(3), 사천(1), 거제(2)

□ 추진계획

-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실시 철저
 - 항행구역에 따른 선박설비* 적정수량 비치여부 및 작동상태 검사
- * 레이더, AIS 등 항해·소화 설비 등에 대한 성능 확인 강화
- 시운전선박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반기별)
 -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교환 및 안정성 제고 방안 협의
- * 지방청, 지자체, 조선소, 도선사협회 등 참여
- 선박검사관 “시운전 선박 동승 프로그램” 운영(필요시)
 - 시운전 선박의 운항 형태 및 안전대책 이행 상태 점검
 - 임시항해검사 집행의 효율성 증대 및 검사기술 향상 도모

중점 3-4 관공선 안전관리 체계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관공선(약 655척)을 운영 중이나 체계적 관리운영과 안전확보를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

□ 추진계획

- 국무조정실, 안행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관공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
 - 안전장비, 안전점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공선 안전관리기준’ 제정(총리훈령)

* 시도·부처 대상 안전관리기준(안) 의견수렴('14.1) 및 안전관리기준 제정('14.상)

- 현재 해수부 소속 관공선에만 적용하고 있는 승무원 운영 정원 기준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 추진
- 전국 관공선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14.하), 점검결과의 공유(타부처·지자체 등) 및 노후선 대체건조 등 협의·지원('14년말)

주관기관	해수부, 전남, 경남,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업기관	-
------	--------------------------	------	---

가. 지자체 관할 항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연안항·마리나 등 지자체 관할 항내에서 선박과 바다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 필요

□ 추진계획

- 항내 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시설 보강 및 항만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안전관리 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시설, 요트, 승하선 자 등 안전관리체제 정비 ○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대비 재난관리 매뉴얼 작성 ○ 마리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점검 등 안전관리 교육으로 자율 대응태세 구축 ○ 어항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보강 및 재난대비 수시 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 강화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 관리주체별 안전관리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 관리체제 정비 및 태풍 등 재난상황 발생시 시설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류시설, 요트, 승하선 자 등 마리나 안전관리 체제 정비 ○ 마리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점검 등 안전관리 교육으로 자율 대응태세 구축 <hr/> <p>【 사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交通安全 관리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선박속력 제한(5노트 이하), 지정 정박장소 선박계류, 선박출입항 신고 철저 등 <hr/> <p>【 고성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진단 및 취약지역 발굴 안전대책 수립('14.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장 및 물량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판 및 추락 방지턱 설치 - 어항시설물 관리자 공무원 및 민간인 공동 책임자 지정 운영 추진 <hr/> <p>【 남해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예방 안전점검 강화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 작업대 및 유어장 바지선 야간 경광등 설치(2개소) - 어항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10개소) <hr/> <p>【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진단 및 사고 취약지역 발굴 안전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물 관리자 공무원 및 민간인 공동 책임자 지정 운영 추진 - 선착장 및 물량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추락 방지턱 및 안전휀스 설치

나. 해양사고방지 및 전문 연구기능 강화(선박안전기술공단)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선박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사고방지 연구기능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안전부문 기술협력을 위한 학술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필리핀 교통부와 MOU체결('14.3)
- 중국어업선박검험국(ZY)와 정기기술교류회의 개최('14.5)
 - 어선관련 국제협력 방안, 어선의 안전관리 동향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등 논의
- 해양안전심판원과 정기기술교류회의 개최('14.6)
 - 어선·내항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정기 정책협의회 개최, 선원 안전교육 지원 및 안전교재 공동 개발
- 산학연 유관기관*과 협동 연구과제 발굴 추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선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및 대학

다.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안전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어선의 사고예방 경보 기능 강화를 위해 어선의 위치 파악을 위한 수협 위치 수신국(VHF-DSC) 단계적 확대 필요

* ('13년 추진현황) 남해안 지역(여수, 통영, 삼천포, 부산, 제주)에 위치수신국 설치

□ 추진계획

- 서해안 지역에 위치수신국(VHF-DSC 활용) 확대 설치
 - 인천, 태안, 군산, 목포 등 4개 지역에 운영국 시스템, 중계소 시스템 (10식) 구축 및 해당 어선에 VHF-DSC와 GPS 연동 1식 설치

중점 3-6 국적선 안전관리 우수 국가 유지 및 항만국통제(PSC)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국적선의 국제 안전평가 우수등급 유지

□ 배경 및 필요성

- 국적선사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 항만(항만국통제)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아·태,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우수등급 유지 중

□ 추진계획

- 아태, 유럽 및 미국지역에서 우수국가 지위 유지
 - 외국항 출항정지 이력 선박을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선정하여 분기별로 공표하고 외국 항만국통제에 대비한 예방점검* 등 실시
 - * 운항일정을 고려하여 선박 기항 지방청에서 점검하되 6개월 동안 국내 기항 일정이 없는 선박은 한국선급에서 특별점검
 -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입항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점검 실시
 -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 검사 강화, 검사 부실 시 선박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등 취약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사 시행
- 국적선사 간담회 개최 및 선사 안전관리 담당자 대응교육 실시
 - 아태·유럽지역에서 공동 시행하는 ‘집중점검’에 대비하여 선사 사전교육 및 ‘집중점검’ 기간(9~11월) 중 정부 지원반 구성·운영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발생 시 국내소재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 주요국가(호주 등) 점검동향 파악, 국적선 대응능력 향상교육(분기별)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 소방설비 등 각종 안전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선원들의 훈련, 장비 운용능력 및 숙련도 등 집중 점검 ○ 분기별 고시된 중점관리대상 선박 특별안전점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대행기관과 관련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 후 필요한 조치 요구 - 점검시 선박안전과 관련된 교육 병행 실시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점검시 중대결함은 출항정지, 경미한 결함은 국내 시정조치 ○ 선박점검 시 선원교육 병행으로 선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 중대결함이 선사·선급 귀책인 경우 차별적 조치를 통해 선박 검사 대행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 강화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항 PSC출항정지 선박, 중점관리지정선박, 선령 20년 이상 고령화 선박 대상으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항 PSC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및 특별심사 - 중점관리대상선박(최근 3년내 출항정지 및 고위험선박군)에 대해 3개월 주기로 점검 체계 유지 - 선령 20년 이상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 선박점검 시 선원교육 병행으로 선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대상선박의 모니터링·특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주요 결함 식별 또는 필요 시) -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결함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세점검 실시 - PSC 정책 및 주요국 동향, 최근 지적 사례 등 현장교육 실시 ○ 관내 일시 외국항 운항 선박 안전성 향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항지(일본, 중국 등) 최근 항만국통제 경향, 선박별 취약 요소를 주제로 항만국통제 대비 설명회 개최(10월) - 선박 필수 서류·증서의 최신화 및 관리 상태, 전반적인 선박설비(항해, 기관 및 구조 등)의 유지·보수 상태 특별점검 실시(3월)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점검 시 선원교육(계기·장비 작동법 실시 등) 병행으로 선원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나. 국내입항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입항 외국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각종 설비, 안전관리체제 등에 대한 점검·관리 필요

□ 추진계획

- '14.1.1부터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Tokyo-MOU)'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점검 대상선박 선정방식(NIR)에 따라 고위험선(HRS)에 대한 우선점검 실시(점검목표 29백척)

* (선박선정방식 NIR) 결함율, 출항정지율, 선사 안전관리 역량 등 종합하여 선박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식

- 안전관리 부실 편의치적국 선박 및 유류, 케미컬, 가스 등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점검 강화

- 외국적 어선에 대해서도 해양오염방지 시설관련 점검 등 실시

- 점검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인력 추가 확보 추진

- 지역내 점검률 목표인 80%의 1/2 수준인 40% 달성을 위한 인력 증원 지속 추진

- 항만국통제관 국내외 교육 주기적 시행

- 국내 워크숍(1회) 및 교환근무, 세미나 등 해외교육 실시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C 실시대상 선박선정방식(NIR)에 따른 불량선박 점검강화 ○ '14년 PSC 집중점검 실시(선원의 근로 휴식시간) : '14.9. ~ 11. <hr/> <p>【제주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부실선박 및 편의치적선 위주 점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치적선은 중위험군 선박이더라도 강화된 점검 실시 - 출항정지 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을 원칙 ○ 국제여객선(크루즈선)에 대한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발생이 큰 국제여객선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제주항 국제여객선 입항계획 : 약 14척 250회 - ISM, ISPS 분야와 소화설비 및 구명설비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짧은 정박시간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점검은 지양하고 과거 점검이력을 기초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실시 - 선박별 맞춤형 점검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점검 실시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R에 의한 고위험선은 국내 입항 매 3개월마다 다른 선박보다 우선 점검 ○ 비상대응체제 중점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시에는 시스템 숙지, 이행실태 및 비상대응훈련도 병행 실시 ○ '13년도 선박 기관설비 분야 집중점검(CIC) 분석 결과 반영 점검 ○ '13년 국가·결함성질·선급·선종별 등 분석내용을 점검에 활용 ○ 결함신고 선박에 대한 점검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 선원 및 항만이용자 등과의 협력체제 활용 ○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령 20년이상 노후선박에 베테랑 검사관 우선 배치 ○ 유류, 케미컬, 가스 등 위험물운반선 우선 점검 ○ 항만국통제연구회 개최로 유관검사기관과 검사기법 공유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 점검계획 수립·시행(1월) ○ 원거리 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점검 강화(월 1척)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R 시행에 따른 고위험선박(HRS) 입항시 우선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선박(HRS) 및 안전관리 부실 편의치적국 선박 집중 점검으로 기준미달선 국내 입항 억제 - 한·러·일 국제여객선 특별안전점검 실시(반기 1회) - 결함신고 선박, 유조선, 위험물 운반선, 외국적 어선(총톤수 400톤 이상)에 대한 점검 강화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적 선박 항만국통제 시행(목표 : 180척) ○ 신규점검대상 선정방식(NIR)에 맞춘 점검을 시행하고 신조선·고령선박에 대해서는 중점사항을 두고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조선(서류 및 설비구비 상태 등), 고령선(방화구조, 설비구동 및 관리상태 등)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우선 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선박군(High Risk Ships) 중 우선점검대상선박(Priority I)을 중심으로 강도 있는 항만국통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회 이상 포항항 입항선박 점검 강화 - 미이행선박*(Under-Performing Ships) 최우선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출항정지 된 선박 - 사고의 주요원인인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ISM분야* 중점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시 시스템 숙지, 이행실태 및 비상대응훈련도 병행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 불량지수를 감안 선별적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안전 불량지수 80이상 선박 : 44척(목표대비 20%) - 결함선박 감시체제에 따른 결함신고 선박 : 전수점검 실시 * 중대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공휴일 및 야간에도 점검 실시 ○ 취약선박 전수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R 고위험선과 평택당진항 입항 전 1개월 이내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 점검이 시행되지 않은 선박 우선점검 실시 * 중대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공휴일 및 야간에도 점검 실시 ○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정지 선박은 결함사항 시정완료 후, 출항 허용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치적선 및 고위험선박 우선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입항 선박에 대한 위험성 모니터링 실시 ○ 항만특성 고려, 위험물운반선 등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폭발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 대비 위험물운반선 점검 비율을 50% 이상 지속 유지 - 농무기, 태풍발생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시기를 초대형원유운반선 (VLCC) 및 자동차운반선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운영(6월, 8월) ○ 항만국통제관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 그룹 운영(연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사례 연구 등 선박기술연구회 지속 운영 - 선박안전 관련 실무지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학습 병행 ○ 항만국통제 회피선박 중점 모니터링·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주말 및 야간을 이용하여 입·출항이 잦은 선박 식별(1분기) - (방향) 대상 선박 선정 후 선체·항해·기관설비 집중점검(필요시)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치적선 및 NIR 고위험선 선별·우선점검 ○ 항만특성 고려, 위험물운반선 등 점검 강화

다.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성장과 항만당국, 지자체의 적극적 유치 정책으로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

*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계획’ 수립 · 지방청 시달('13.8)

□ 추진계획

- 크루즈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계획 지속 추진
 - 주요 항만별 크루즈 안전운항 지원 T/F 운영, 위해요소 개선 발굴, 입항에서 출항까지 집중 관제 등
- 크루즈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절차, 국제 공조 방안 마련 및 아·태 항만국통제 위원회 제출(9월)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 크루즈 선박 항만국통제 가이드라인 마련(9월)
	【제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선박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T/F 운영○ 주기적인 T/F 회의(연 2회)를 개최하여 크루즈선박 안전운항에 대한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 해양사고 발생 대비 구조 메뉴얼(제주해경) 및 화재진압 매뉴얼(제주소방서) 작성 및 개정 협조

중점 3-7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진단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검증체계 구축 등 제도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추진계획

- 대항기관별로 일부 상이한 안전진단 기법을 기술기준으로 정립* ('14.6.)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전문 검증체계 구축('14.12.)

* 시행지침(고시) 개정 : 의견수렴(3월) → 예고·규제심사(4~5월) →시행(6월)

-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진단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13.12월 「해사안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국회 계류 중인 해사안전법 개정안(공포일 6개월 후 시행)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되도록 개정안(대통령령) 사전 마련

일반 3-1 선박검사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주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업기관	-
------	----------	------	---

가. 취약선박별 사고 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검사 대상 선박에 대한 ‘해양사고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각 지부 마다 운영방법이 상이한 등 체계적 운영은 미흡

□ 추진계획

- 해양사고 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14.5)
 - 사고 선박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사고 이력 관리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개선
 - 통일된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사고선박 관리 추진
 - *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절차서」 및 「해양사고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방안 개선
- 해양사고 이력관리 철저
 - 사고이력 분석결과를 선박검사 시 집중 착안 사항으로 활용
 - 해양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에 승선하는 종사자는 검사 및 교육 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집중 지도

나. 어선·내항선 사고 시 기술지원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선박 손상에 의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지원 체계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사고 발생 시 침몰선박의 원인규명 등에 필요한 선박 선형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관련 자료는 사고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
- 기관 등 선박설비 사고에 대한 기술적 원인 규명체계 마련

일반 3-2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추진현황

- 관제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하여 '05년부터 국제기준(IMO, IALA)에 적합한 자격인증 교육 시행,
 - '05~'13년까지 부산, 인천 등 전국 해상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총 41회, 514명의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해 자격인증 교육을 시행
 - * (근거)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해수부 훈령 제105호)

□ 추진계획

- 해상교통관제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제사 자격 인증교육 지속 추진
 - 해상교통관제사 기본교육(신규자) 과정 시행(1회, 12명)
 - 해상교통관제사 보수교육 과정(2회, 32명)
 - 선임 해상교통관제사 교육 과정 시행(1회, 15명)
- 관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추진
 - 관제센터별 현장직무교육(OJT), 선박승선훈련, 해사영어 및 친절 교육 등 자체 직무교육 추진

일반 3-3 민간 자율적인 출항 · 운항 통제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부산시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업계,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무리한 운항을 자제토록 계몽 필요

□ 추진계획

- 민간 자율 운항통제 확산
 - 풍랑 등 기상악화 우려시 사고 취약 소형 내항선, 어선 등이 사전 자율적 피항을 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의 계도 강화
 - 안전관리체제 적용 선박의 자체 운항통제 절차의 철저한 이행 유도
- 어업인에 대한 기상특보 신속 전파 및 안전조치 지도(부산시 중구)
 - 어선·어구 안전조치 지도 및 어선 출항 통제 실시

일반 3-4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경청, 서울시, 부산시, 경남	협업기관	-
------	----------------------	------	---

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수상레저안전법」상 미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등록 기간(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한 고려 없이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에 사용한 경우로 규정
- 적법하게 등록한 경우에도 미등록 기구 이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문제 발생

☐ 추진계획

- 「수상레저안전법」의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추진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

나.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추진현황

- 어업활동이 활발한 연안해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어업인)'과 '수상레저기구'간 사고발생 가능성 증가

□ 추진계획

- 수상레저기구 현장점검('14.5) 및 안전홍보 리플렛 제작('14.6, 해경청)
 - 안전검사, 캠페인 또는 홍보활동 시 홍보물 배부 병행 실시
- 한강 수상이용 시설 확충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서울시)
 - 수상레포츠 훈련장 조성('14.3~5, 수상계류바지 20m×15m) 및 레저용 선박 공용 계류지 설치('14.3~10, 요트 50~60척)에 따른 이용자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추진
-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안전운항 지도·단속 추진(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 해녀 수중작업시 수상오토바이 등과의 충돌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수상레저안전법령 등 위반행위 적극 단속
- 수상레저 및 남해요트학교 운영 안전지도(경남 남해군)
 - 수상레저 등록선박과 남해요트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실시
 - '보물섬킵 요트대회' 안전지도 추진(1회/500척)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및 적정성 검토 규정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항내 위험물 하역자가 수립·시행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및 사후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

□ 추진계획

-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및 주기적인 적정성 검토 규정 마련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 선박 입출항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14년)
 - * 제정안 마련('14.4월), 관계기관 의견조회('14.5월), 입법예고('14.6월), 규제심사('14.7월), 법제심사('14.8월)

나. 항만공사 시행사에 의한 해양안전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공사 현장별 안전 점검자 선임과 대책반 운영으로 사고의 위험성 사전 제거 및 해양사고 예방 필요

□ 추진계획

- 항만공사 착공전 예부선 등 공사에 투입되는 선박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공사발주처·시행사·전문가와 공동으로 강구·시행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행사 및 화주와 연대하여 효율적 선박안전관리 추진 ○ 관내 해상공사 현황 및 공사작업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2월)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교육교제 개발(6월)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 해사안전 점검자 지정 및 교육을 통한 해사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 착공시 해사안전 점검자 선임 - 해사안전 사고대비 각 현장별 대책반 편성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사 시행사의 자체 예부선 등 관리 강화로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 조성 ○ 공사 현장별 해상장비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 현황, 비상(휴일, 야간 등) 근무자 현황, 비상연락체계도 - 해상장비 규모, 투입 계획 및 해상장비 피항계획 등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장비 사용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중점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장비 사용 공정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점검 - 황천 시 해상장비 대피계획 수립여부 점검 - 비상시 관제실 및 유관기관 대응 연락체계 가동여부 확인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건설현장 내 공사작업선 집중 점검을 통해 해양사고 방지 ○ 반기별 1회 합동점검 시행(항만공사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해사안전조치 시행으로 항만공사 사고예방 추진 ○ 항만공사 계획 단계시 사전에 해사안전 의견 청취 및 반영 ○ 항만공사 시행 중 상시 점검체제 유지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 지속 검토·반영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 예부선 안전관리 개선방안 적극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선단 안전관리 방안 수립 여부 확인, 피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등 항만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기상악화 시 공사용 작업선에 대한 이동명령 조치(기준, 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제 강화방안 등) 방안 마련(내규 제정) - 공사작업용 부선에 대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무선설비(VHF) 구비 권고를 통한 비상 및 기상악화 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승무정원 적정성 검증 및 승선원에 대한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에서의 선박 안전점검 실시(반기별) - 항만공사 투입 승선원에 대한 통항안전교육, 해사안전법령 준수를 위한 준법서약서 작성 등을 통한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장비 사용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중점 점검 ○ 항만공사 계획 단계시 사전에 해사안전 의견 청취 및 반영 ○ 항만공사 시행 중 상시 점검체제 유지

일반 3-6 다중이용 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협업기관	-
------	----------	------	---

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고도화(해양경찰청)

☐ 배경 및 필요성

- 섬 여행의 활성화 등 도서 방문객의 증가로 내항 여객선의 안전 수준 향상·유지를 위한 특별 관리 추진

☐ 추진계획

- 봄철, 여름철, 동절기 등 시기별, 해역별 항로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 시행
- 설·추석 연휴, 여름 피서철 정부합동 특별교통 대책본부 운영 기간 중 집중 안전관리 시행
- 지역별 안전대책 회의 개최,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등 업계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나. 국제여객선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 전년도 국제여객선 사고 유형, 원인 분석결과에 따라 취약분야 관리를 위한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14.1)

□ 추진계획

- 한/중·일·러 항로 운항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상태 점검(3,9월)
 - 선박 노후에 따른 기관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이행여부, ISM Code에 따른 업무절차의 적정성, 비상대응 상태 등 집중 점검
 -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에 대한 한·중 정부의 합동 점검 실시(9월)
- 사고다발 선박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발생시)
- 상·하반기 점검결과 및 교훈사항 공유를 위한 국제여객선사 안전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4,10월)

다.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해양경찰청)

☐ 추진현황

-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및 소방방재청 주관 내수면 유·도선 재난대비 훈련 참여(2회)

☐ 추진계획

- 봄철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유·도선 현장점검 실시('14.5)
-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가을철 대비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박 안전점검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시행('14.10)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해역별 해양교통 환경에 적합한 항로표지의 최적 배치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적정성 검증시스템 개발

☐ 추진계획

-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제품 구축 및 성능 평가
 - 기술개발 주요 일정
 - S/W, H/W 시스템 통합 : '14.3월
 - 가시화 재현 시스템 구축, S/W 통합 및 성능 평가 : '14.4월
 - 해역 및 선박, 항만별 항로표지 DB 구축 : '14.6월
 - H/W 시제품 개발 및 시스템 검증 : '14.7 ~ '14.12

나. 부표류 관리체제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효율적인 부표류(총 917기) 관리를 위해 노후된 남·서해부표관리소의 건물 및 장비의 개량 추진
 - 공장동 개량, 사무동 신축, 장비 현대화 및 부족한 야적장 확보에 따른 시설물 재배치 등 정비

□ 추진계획

- 남해부표관리소 정비공사(공장동) 추진
 - '15년도까지 남해부표관리소 종합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남해부표관리소 공장동 증축 추진
- 서해부표관리소 공장동 증축
 - 안전하고 쾌적한 부표류 작업환경을 위해 노후된 낙청기 교체, 공장동 개량 및 증축 추진

일반 3-8 경인아라뱃길 통항선박 관리 강화

주관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협업기관	-
------	---------	------	---

가. 경인아라뱃길 안전운항 체계 마련

☐ 추진현황

- 아라뱃길 운영 전담 조직 “아라뱃길운영처(1처4팀14과)” 및 요트 통항관리 전담조직 워터웨이플러스 “마리나팀” 편성·운영

☐ 추진계획

-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아라뱃길 운항선박의 효율적 통항관리 추진
 - 인천해양항만청 주관의 아라뱃길 안전운항 전담조직(해사안전TF)에 참여하여 통항선박 안전운항 지원 및 관련대책 마련
 - 사업준공 이후 경인항 선박운항(선석)회의 구성·운영으로 갑문, 뱃길구간 선박 통항순위 조정 등 안전한 선박운항 관리 도모

나. 아라뱃길 항로 개선 등 안전환경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경인항 진입항로는 급조류, 조수간만의 차 등의 영향으로 자연 퇴적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수심확보를 위한 수역유지관리 필요
- 아라뱃길은 좁은 항로폭과 복잡한 교통여건으로 선박 간 충돌, 항로 이탈 등의 사고 위험성이 있어 효율적 통항관리 필요

□ 추진계획

- 경인항 항계 내 수역의 적정 수심유지 및 선박 안전통항 여건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인천청, IPA, 수공) 협의 및 준설방안 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운영, 물관리 종합상황실 및 감문통제실 운영(24시간 상시근무)
- 수로 내 부유쓰레기 지속 수거, 결빙 시 신속한 파빙작업 등을 통한 안전한 선박 운항 여건 조성
- 다중이용선박(여객유람선·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제도, 안전장구 비치 확대 및 해양안전 공동캠페인 등 홍보 강화
- 인명구조 요원(자격보유자 3명) 상시 배치로 물놀이 사고 대처

다. 안전한 아라뱃길 갑문 운영관리 도모

□ 추진현황

- 내륙 인공수로인 경인아라뱃길 내·외측의 수위를 극복하고, 이용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 인천·김포터미널 갑문시설 운영 중

* (서해갑문) 길이 210m, 폭 28.5m, 갑실 2기, 슬라이딩 게이트
(한강갑문) 길이 150m, 폭 22m, 갑실 1기, 마이터 게이트

□ 추진계획

- 갑문시설 이용자(선장, 도선사, 요트운항자 등) 불편사항 개선 및 갑문 관제사 역량 강화로 선박사고 예방
 - 갑문 입출거 신고시간 조정, Port-MIS 신고사항 간편화 등 불편 사항 해소 및 갑문 고장 등 돌발사고 대처 훈련 실시
- 경인아라뱃길 이용 선박의 갑문 입·출거 안전 지원 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보강설치 추진
 - 야간 입출항을 위한 조명시설 개량·확충 및 갑실 내 소형선박(요트·보트 등) 계류시설 보강 및 갑벽 방충재 추가설치

일반 3-9 실효적 음주운항 예방·단속제도 마련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대상선박* 운항자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음주적발 시 보다 적어 과태료 기준의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중 ①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② 낚시 어선업 신고 어선, ③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 ④ 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선박

- 항공기와 유사한 형태로 운항하는 선박(수면비행선박, 수상비행기)의 음주기준을 항공기 수준으로 상향 조정 추진

□ 추진계획

- 음주측정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음주 적발시 최고 부과액(200만원)과 동일하게 개정('14.4. 해사안전법 시행령)

* 입안·관계부처 협의(1월) → 입법예고(1~2월) → 법제심사(3월) → 시행(4월)

- 수상항공기·수면비행선박의 음주운항 금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항공기 기준)로 상향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중점 4-1 항만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협업기관	해경청, 항만공사
------	----------	------	-----------

가. 개항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운영

□ 추진배경

- 무역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개항질서 단속업무를 수행
 - 개항 항내에서의 어로행위, 선박의 불법수리 및 소형선박의 항로 무단횡단, 정박·계류지 지정 위반 등 통항안전 저해요소 단속
- * 개항단속 실적(지방청/지자체) : ('11) 2,581건→('12) 1,985건→('13) 2,192건

□ 추진계획

- 29개 무역항에 대한 개항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14.2)
 - 순찰선 등 관공선 운용을 통한 개항내 질서위반사범 계도·단속
- * 관공선(총64척) : 순찰선(25척), 표지선(19척), 청항선(19척), 측량선(1척)
- 항만별 개항질서 중점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
 - 해수부 지침에 따라 단속 실시 및 분기별 실적 보고

○ 개항질서 특별 단속기간 설정 운영('14.5월, 11월)

- 지방청(해양환경과), 지자체 주관으로 특별 개항단속반 편성·운영

* 운영기간(2주간) : '14.5.12~5.25(상반기), '14.11.10~11.23(하반기)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 개항질서 특별합동단속 및 남외항 정박선박 안전점검(연 6회)
	인천청	○ 불법 선박수리 근절,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 위험물 하역현장 및 급유선, 주유소 안전점검(분기별) - SK석유화학 등 관내 22개 위험물 하역업체 등 대상 - 유자격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및 소화기 비치, 유지 상태 등 ○ 취약시간대(일출·일몰시, 주말) 및 인천대교, 항로, 남항지역 등 취약구역 중점단속
	여수청	○ 불법 선박수리 등 항계내 선박통항 위해요소 중점관리 및 단속 ○ 항만종사자 및 어업인을 위한 개항질서법 등 관련법령 교육 및 홍보
	마산청	○ 개항질서 단속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 실시(연중) ○ 위험물 터미널 및 급유업체의 안전관리자 간담회 실시(연 1회)
	동해청	○ 관공선 운용을 통한 개항내 질서 위반사범 계도·단속 - 항계내 공사작업선, 항내 위험물 하역(급유), 선박수리 등 점검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군산청	○ 상시 개항질서 단속 -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연 2회) - 해상 및 육상 수시 순찰 강화로 위법행위 사전 방지 - 대중매체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 홍보 실시 ○ 순찰선을 이용한 항로·취약해역 순찰(해양1호 이용),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부유물(위험요소)제거 및 위험물 하역시설 지도·단속
	목포청	○ 어망 부표설치 여부, 부두인근 조업 지도·단속 강화, 낚시 어선 및 유람선 항내 무질서 행위 근절 ○ 항내 불법 선박수리 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소화기 현장 비치 등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계몽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선박수리 등 항내 불법행위 근절<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해경, 해양수산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및 비상출동 지원 등 공조체제 유지(5월, 11월)- 개항질서 준수 취약계층(어민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선박 수리허가 시 용접공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등 확인- 순찰선 해상순찰시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장애물 제거 병행 (해양환경관리공단 청항선 협조 요청)○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등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수시)○ 출입신고 미필 등 불법 운항선박 단속 강화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공선과 연계한 불법 선박수리 단속,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출·몰,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위반행위 단속(특별단속기간 5·11월)○ 항로, 정박지 등 해상교통 저해 장소에서의 어로행위 집중 단속(연중)○ 위험물 취급 시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변경·정비 여부- 태풍내습·한파 대비 위험물 하역현장·시설 일제점검(연 2회)○ 선박수리 신고·허가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항 준수 여부 확인○ 위험물 하역안전에 관한 연구·학습 동아리 운영(분기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공선을 이용한 불법 선박수리 단속 및 불법 어로행위 등 방지
지 자 체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선 운항을 통한 계류지별 선박수리 작업 현장 안전작업 계도○ 남항 내 제한속도 지도 등 운항질서 유지 및 해양사고 예방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공선 운용을 통한 개항내 질서 위반사범 계도·단속<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계 내 공사작업선, 항내 위험물 하역(급유), 불법 선박수리 등-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개항질서 특별 단속기간 설정·운영(5월, 11월중 2주간)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로, 항계내 불법어로 행위 금지 안내<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에 불법어로 금지 안내문 및 항만구역 현황 도면 배부,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및 계도○ 개항질서 단속 실시(연 2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어기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수시단속 실시○ 불법수리, 정박지 위반 등 해양사고 위험요소 제거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경상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한 안전한 항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육상 및 해상 순찰활동 강화 - 불법어로·선박수리 등 항내 불법행위 근절 ○ 지속적인 개항 질서 유지와 관리를 통해 항만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다발 취약선박과 위험물하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수시) - 항내 어구 등 폐기물 투기 단속 및 장애물 제거 추진 ○ 항만기본계획 용역 시 각종 수심 및 기반 조사 후 안전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수심 및 기반 조사 후 안전대책수립 및 확인
경상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개항질서 단속을 위한 시기별 집중단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무기(3~6월), 태풍내습기(7~10월), 해빙기(11월~2월) ○ 4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급유선 등 사고다발 안전관리 강화(작업허가, 관제 철저) - 취급부주의로 인한 위험물 사고 예방(교육·점검 지속 추진) - 강력한 행정처벌로 불법어로 행위 근절(해경 협조체계 유지) - 항법 및 경남도 관련 고시 준수여부 단속(속도 제한 등) ○ 선박 급유업체 자체안전관리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안전관리매뉴얼 작성 및 승인 기준 통일에 따른 일괄정비 - 위험물 터미널, 급유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 추진 ○ 개항질서 단속을 향상을 위한 육상 순찰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터미널, 수협부두 등 육상 순찰 강화(월 2회) - 순찰선 정기 항만 순찰을 통한 사전 예방(일 1회)
제주 특별 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순찰선 운용을 통한 개항내 질서 위반사범 단속 및 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 위험물 취급 안전조치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위반, 불법선박 수리, 정박·계류지 위반 등 ○ 항내 항로·항법 준수 등 교통질서 유지 ○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만질서 유지 등 지원

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해상교통 안전을 제약하는 교통관제(VTS)의 인적·제도적·운영적 취약요인 발굴·개선 필요

□ 추진계획

- 해상교통관제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13.8)의 지속 시행
 - 신항만 및 관제음영구역에 관제시설 확충, 노후된 관제장비 현대화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제인프라 확대
- * 5개 분야 12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맞춤형 해상교통관제 시행
 -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관제사 역량강화, 안전의식 제고 등 인적 과실 사고예방을 위한 VTS 개선방안 시행
- 해상교통관제 운영제도 정비 및 효율성 향상
 - VTS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제법령 정비, 관제구역내 발생한 선박사고 분석을 통한 미비점 개선 등
- 밀집해역에 관제섹터 세분화
 - 교통량이 밀집되는 해역에 해상교통관제 섹터 분리 및 교통 폭주 시간대 관제사 추가 배치 등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능력이 열악한 예·부선 및 위험물운송선박, 여객선 등 특별 관리 대상선박 집중관제 추진 ○ VTS 장비 개량 및 물표 탐지 성능 향상을 통해 정밀관제 강화 (용호 레이다시스템 : 1/4분기) <p>【 제주해양관리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선박에 대한 안전한 입출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항 전후 10마일 집중관제 실시 및 안전정보 적극제공, 주위선박에 사전회피 유도(주기적인 동승체험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 성어기(5월~10월) 크루즈 선박 입출항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선 이용 항계인근 조업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이동 조치 ○ 관제시스템 모니터 상 선종별 심벌부여 지속 실시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관제운영 개선계획 수립·시행('14.2) ○ 준사고 관제사례 안내에 관한 업·단체 간 안전협의 실시('14.3)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맞춤 관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블록 예부선, 위험물 운반선 등 취약선박 집중관제 -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물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적극 관제 ○ 광양항 항계 밖 진출입 해역 특별 관제 및 통항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주의구역 설정 및 섹터 변경 시 전담관제 실시 - 항계내 해상교통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실시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운영 협의체 활성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 리포터(통신원) 제도 운영(연중실시), 마산항 “안사모” 회의 개최(연 2회) ○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점검(매월/분기별)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모니터링 구역(동해·묵호항 항계 내) 및 정밀관제 시간 운영 (06~10시, 1팀(3명) 전원 근무 투입)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 유지준설 작업 구간에 전담관제사를 배치하여 특별 정밀관제 시행('14년 하반기)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TS 주요장비에 대한 전문업체의 유지보수 용역으로 효율성 제고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사 업무소통 활성화로 업무통일성 유지 및 관제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사고사례 연구회’ 개최 및 ‘해양사고 가상훈련’ 실시(매분기) - 관제사 자체 교육·훈련 내실화 및 현장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관제사 친절교육과 취약선박 방선, (수시) 항만공사현장 견학 (반기) 관제사 승선택험, 도선사 간담회, 관제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해양사고 사전 예방체제 및 인적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특성에 따른 관제실시(관제 화면상 선종별 심벌 부여 식별) - 취약시간대 해상교통관제 “안전계도 홍보방송” 지속실시 - 관제사의 업무형태에 따른 근무편성 및 “무사고 캠페인” 시행 ○ 포항청·기상청 간 관제담당 전담해상기상분석관 MOU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분석관의 판단에 따른 기상악화 대비 조기경보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대피분과위원회 개최 시 분석관 참석 해상기상자료 검토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관제시스템 활용 여부 및 추가 장비증설 검토(2월) ○ 인근 관제센터와 업무 협의(3월) ○ 관제구역 확대 홍보 및 관련규정 개정(4월) ○ 확대 관제구역 관제 시행(6월)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가 높은 5개 수역에 대한 선박통항상태 집중 모니터링 ○ 선종별·정박지별 색깔 및 심볼 부여로 집중관제의 실효성 확보 ○ 항행환경이 열악한 예부선 등에 대하여 맞춤형 관제 실시 ○ 울산항 항만특성* 고려, 외항정박지 투묘선박 대상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속력 준수, 엔진준비 권고 등 안전통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철 강풍에 의해 정박지 등에서 좌초 등 5건의 사고 연이어 발생(‘13.11) ○ 정박지 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정박지 운영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박지 입항 전 해당 선박 투묘위치 사전 지정 - 수심·톤수 등을 고려, 정박지 입항선박 척수 제한 운영 등 ○ 돌풍에 의한 주요 가능성 대비 선사·대리점 등 사전 정보 제공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서해역 통항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선박 통항 밀집시간대에 선임 관제사 배치(2인 관제) ○ 취약시간대 해상교통관제 “안전계도 홍보방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시간대(04~08시)에 VHF활용 자동 안내방송 실시 ○ 대산 해상교통관제센터 “무사고 캠페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실 내 캠페인 포어 게시를 통해 관제사의 목표의식 고취

중점 4-2 선박 통항 위해요소 발굴 · 개선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업기관	-
------	----------------	------	---

가. 선박교통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체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내 신규 개발(부두 · 교량 증설 등) 사업 등으로 인해 해상교통안전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적 대응 필요

□ 추진계획

- 민 · 관 공동으로 항내 안전 위해요소 지속 발굴 · 개선
 - 항만별 선박 · 항만분야 안전책임자,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위해요인 발굴(반기별) 및 이행상태 점검 추진
 - * 항만수역안전관리협의회, 해상교통 통신원, 선박안전관리 간담회, 항만안전 관리모임, 종사자 워크숍 등 적극 활용

< 지방해양항만청 · 지자체 · 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 해양 항만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위해요소 개선 지속추진(상시추진 10건, 중기 과제 3건) ○ 신항 어업활동, 봉래동 정박부선 및 북항대교 건설 등 해상교통 환경에 적합한 선박 통항안전 확보방안 마련(반기별)
	부산청	<p>【 제주해양관리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수역 안전관리 협의회 개최(연 1회) ○ 항만 · 선박 종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제주 신항 안전 위해요소 발굴 · 개선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부두 도선환경 및 접안 안전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 E1, IPA, 한국수자원공사(시화조력관리단) 및 인천항 도선사회와 협의체 구성 ○ 시화조력발전소 방류수 영향 저감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착공 : '13.11월/ '14년 하반기(수공) * 방류수 유속 저감시설로 이안제, 잠제 등 검토 중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항 위해요소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운영(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수역 안전관리 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위해요소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지역 항만 이용자, 관련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임을 정례화하고 발굴된 위해요소를 해사안전시행계획에 반영 * 북부두 선석노후로 인해 선박 접이안 지장 초래, 동해항 조명 장치 부족 등 위해요인 기 발굴 및 개선추진 중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수역안전대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청 및 유관기관 T/F 팀 구성하여 주기적(분기 1회) 회의개최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어장도 DB 공유를 통한 어장허가 수면위치도 자료 확보 및 지자체와 어장이용개발 협의 수행 ○ 해상교통 통신원, 해상교통안전대책 간담회 및 여객선 항로답사 등을 통한 항로상 위해요소 파악 개선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해역내 항계박 정박지(D-1) 확대운영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 용역 완료후 및 정박지 확대 추진('14. 3월~)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통신원 제도” 지속 시행 및 간담회 개최(연 1회) ○ 위해요소 발굴 Task Force팀 지속 운영 및 회의 개최(상·하반기) ○ 포항항 정박지 운영 개선대책 수립(상반기)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해상교통안전 위해요소 개선계획 수립('14.1) ○ 개선계획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추진('14.2~)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울산항 해상교통환경 개선 회의 개최(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T/F팀) 구성,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계획 실시 확인 - 도선사, 해상교통통신원* 등 해역이용자 의견을 상시 청취·반영 * 관내 예부선 등 선박종사자 참석 간담회 개최(12월) ○ 기 발굴된 위해요소(6건)의 개선 추진실태 지속 점검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구분	위해요소	추진사항	비고
		정박지	온산항에 선박블럭운반용 예부선의 대기 장소가 없어 항내 혼잡도 증가로 인한 충돌사고 우려	○ 울산항 남화물양장 축조공사 - 접안시설: 물양장 340m 부지면적: 16,308㎡ - 실시계획 승인 ('13.10.23) - 공사 중 : '13.10.~'15.10.	울산항만 공사
		입출 항로	울산항 항계 확장에 따른 정박지 및 항로 미지정으로 입·출항선에 대한 해상교통 안전대책 필요	- 집단정박지 및 항로설정 등 수역시설 조정 연구 용역 완료('13.12) - 해상교통안전진단(정박지 확대) 검토 요청 중	울산청, 울산항만 공사
			자동차 운반선 등 대형선의 도선점 부근 등부표 근접현상 발생	- 도선운영협의회 개최 - 도선사 승선위치 조정 등	울산청
			1항로 끝단 14번 등부표로 인해 염포부두 입출항시 장해요인 발생	- 등부표 폐지 또는 위치변경 검토 후 동해권역 스파부이 정비사업에 반영	울산청
		항만 시설	노후 계선주가 많아 선박 계선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계선주의 최대 견인력 등 안전성 검증 필요	-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시행 중	울산항만 공사
			포스코플랜텍 물양장이 태영 호라이즌 부두 및 OTK부두와 근접위치하여 예부선출입 시 부두를 파손하는 경우 발생	- 해당부두 및 물양장 운영사에 펜더 보강 등 안벽 충돌방지 대책 추진 유도	울산항만 공사
	대산청	○ 항로 및 정박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어업보상 추진			
지 자 체	부산 광역시	○ 학리항 등 15개 어항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5,764백만원) - 방파제 36m, 안전휀스 278m, 접안시설 98m, 준설 18,000㎥			
	울산 광역시	○ 시, 구·군, 지방해양항만청 합동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검(연 2회) ○ 어업지도선 해상 순찰활동 효율화 ○ 안전한 어항질서 확립을 위한 어항법 위반사범 철저 단속 ○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검 실시(반기별) - 시, 구·군, 지방해양항만청 합동 점검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 남구 】 ○ 안전한 어항질서 확립을 위한 어항법 위반사범 단속 강화 【 북구 】 ○ 울산해양항만청과의 협의체(T/F팀) 구성 및 위해요인 발굴·개선 추진 ○ 어업지도선 해상 순찰활동 효율화 ○ 특별 어항법 위반행위 단속기간 설정·운영 - '14 5월, 10월(연중 2회),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강원도	○ 동해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방관리 무역항 위해요인 해소 - 동해청 주관 항만수역안전관리대책협의회에 참여하여 강원도 관할 무역항에 대한 해상교통 환경 개선 공동 추진
	충청남도	○ 보령항 항만시설 증대(영보산단, 신보령1, 2호기)에 따른 항로 및 정박지 확장 검토
	전라남도	○ 해상안전관리 관련기관과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시군, 수협, 지방해양항만청(목포, 여수), 해양경찰서, 한국선급협회 등 * 여객선 터미널 및 접안시설(4개항 11개소)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1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중 ○ 여름철 집중 안전점검 실시(점검반 7명) - 점검 횟수 : 2회(1차 '14. 5월 / 2차 '14. 8월) - 점검 대상 : 공사 중인 항만시설과 인근해역 등
	경상북도	○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 및 운영 - 경상북도, 시군, 수협, 어민관련 협회로 구성 및 회의개최(연 2회) ○ Task Force팀 운영 절차 * 위해요소 제안→위해요소 심의·결정→개선계획 수립·추진
	경상남도	【 남해군 】 ○ 어항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10개소)
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	○ 남외항 정박구역의 수용능력 산정 및 전반적 수역관리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 발주('14.상반기)
	울산항만공사	○ 울산대교 건설 관련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 추진 ○ 울산항 원유부이 위치 선정 및 수역시설 조정 연구용역 시행(302백만원)
	여수항만공사	○ 교통위해요소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여수청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유지

나. 장기 정박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감수보존 등 장기 정박선박은 승무원 부족, 기상악화 대비 미흡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큰 실정
- 최근 조선경기 회복에 따른 신조 증가로 연해수역을 점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 필요

□ 추진계획

- 장기 정박선박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여부 수시 점검
 - 지방청·지자체의 순찰선과 관제실 등을 통해 승무정원 준수여부, 기상악화 대비 상태, VHF 청취여부, 닛 끌림 상태 등 점검
-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관계기관 회의 반기별 개최)
- 통항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을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지자체 관할 해역내 점·사용 허가 시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통해 통항 위험요소 사전 검토 및 정박선박의 안전조치 이행 유도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수보존선박 운항능력 상실 대비 안전 정박지 이선·지정 유도 ○ 장기정박(감수보존, 수리) 선박에 대한 유관기관 사전 선박 안전성 점검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양항만청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정박선박 집중관제(뱃 끌림 여부 집중관제) ○ 인천항만공사 장기정박선박 정보 최신화 유지 ○ 항만시설 및 취역수역 합동점검 정례화 및 상시 정보공유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정박 선박의 항만시설이용 허가 시 「정박선박 준수수칙」 안내 ○ 정박지 내 장기 정박 선박에 안전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내습 예상 시 선박 즉시 이동 가능하도록 준비 요청 - 장기 정박 선박에 대한 위치변동 여부 등 모니터링 - 선박 운용에 필요한 최소 인원 승선 여부 확인 및 연락망 최신화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개항장기항 또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시 허가기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승무정원 준수,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항해당직체제 유지 ○ 무단 정박 또는 허가기준 위반선박 단속 요청(연중)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연해수역 정박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수역 정박은 항계 내 정박장소가 없는 경우로 한정 ○ 허가 시 안전조치 준수 약약서 징구 및 관계자 교육 실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정박 선박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관제실, 지자체, 대리점 등 협조체제 구축 ○ 기상악화 대비 필수 승선원, 정박당직 등 안전대책 수립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정박선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청 시 동 대책 검토 후 허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내습 등 기상악화 시를 대비하여 본선 자력 이동을 위한 필수선원 승선 등 비상대응 체계 구축 ○ 관할 법원에 경매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여 장기 감수 보존 선박 감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 요청하고, 경매절차가 완료될 시 즉시 선박을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정관리인에게 요청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악화 대비 포항항 정박지 사전 안전관리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항 정박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실시(5개월) -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안전관리대책 이행 철저 ○ 기상악화 예상 시, 정박선박 재배치 등 사전 안전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박선) 주요 위험이 높은 선박은 안전한 정박지로 우선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크기, 화물적재상태, 선종 등을 고려하여 뱃 끌림 위험선박 분류 - (접안선) 필수선원 승선 및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확인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승무정원 유지 및 정박 당직자 당직수칙 준수여부 확인 ○ 선박의 주요설비·기기의 주기적인 작동테스트 및 기상악화 시 비상대응 조치 시행여부 확인·점검 ○ 관제실에서 장기 정박선 닻 끌림 여부 모니터링 강화 ○ 방선을 통해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및 선박 점검 실시(연 6회)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악화 대비 피항계획 등 자체 안전관리방안 마련 및 선내 비치 유도 - 장기 정박선박의 닻 끌림 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 및 기관 사용 가능여부 등 수시 확인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승무정원 유지 및 정박 당직자 당직수칙 준수여부 확인 ○ 선박의 주요설비·기기의 주기적인 작동테스트 및 기상악화 시 비상대응 조치 시행여부 확인·점검
지자체	울산광역시	【 울주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 불법 점용 및 장기 방치선박 : 신속처리(사법 및 행정조치)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수역내 장기 정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조치 이행 조건으로 정박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수역 정박 허가는 관제구역 내로 한정(동해항만청 관제실 협조) ○ 해상구역 내 항만순찰 강화로 장기 정박선박 발생 사전 차단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재박선박 발생시 실태조사 및 태풍 등 재해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 등 조치
	경상남도	【 사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정박 선박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해경,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와 합동 단속 및 협조체제 유지
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지역 경비용역 1명 추가배치('14.1) ○ 인천청, 해양경찰 등과 항만시설·취약수역* 합동점검 정례화 및 상시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 전면 해상, 입항 대기 정박지 등

다.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한 투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항만의 입출항 항로에 저수심 구간이 존재하여 대형선박 입출항 시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는 등 사고 위험성 상존

□ 추진계획

- 항만의 선박 진입 항로와 정박지에 대한 준설작업 추진
 -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항로, 접안시설 인근 해역 등 선박통항 해역에 대한 준설 적기 시행
 - 계획수심 미달구역 발생 우려 시 항로의 적정수심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신항 증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 준설(208만^{m³} 등 / '14.3 준공 예정) - (2단계) 준설(787만^{m³} 등 / '14.4 발주 예정)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북항 항로 준설 전체 대상구간 계획수심 14.0m 확보 ○ 인천항 항계밖 접근항로인 서수도 준설 시행하여 수심 14.0m 확보 ○ 연안항의 적정수심확보를 위한 20만^{m³} 준설 시행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항 제3항로 수역시설 유지준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사업비 : '14년~'15년 / 240억원 - 사업내용 : 유지준설공사 1,164천^{m³}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자 체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수도항로 준설 공사 적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호안축조공사 일정에 따라 추진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창원시) 협조체제 유지 ○ 제2항로 확장구간 수심 적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항 제2항로 조정(확장) 고시('13.4.3.)에 따라 확장구간 내 부족한 수심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 추진('14년 실시설계용역 착수)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신항 항로준설을 위한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신항 2부두 항로준설('15년 준설공사 시행 목표) - 포항신항 1부두 14번선식 항로수심 확보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 유지준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준설(2단계) : 3,000,000m³(200억원, 10개월) 추진 - 유지준설 : 700,000m³(50억원, 8개월) 계획 * 준설작업 착수 전 관련 업단체에 사업 추진방법 및 기간 등 사전 협의 및 준설 시행사(작업선 포함) 비상연락망 구축 등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심 미달구역 발생 시 항로의 적정수심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가능하도록 '14년도 예산 확보 추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의 적정수심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준설 추진
지 자 체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항 항로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사업 추진('14.8월 준공예정)
공 공 기 관	부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감천항 유지준설 공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설 : 39,300m³ (1,044백만원)
	인천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연안항 유지준설 공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연안여객선 부두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지준설 - 준설 : 20만m³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 등 적기 제거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협업기관	-
------	----------	------	---

가. 항로상 불법어로 합동 단속 및 계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항만수역과 항로에 설치된 통발, 정치망 등 불법어구로 선박 교통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

□ 추진계획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어로 행위 단속 및 어업인에 대한 계도활동 지속 시행
- 새벽, 공유일 등 취약시간대 순찰강화로 단속 실효성 제고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방해양항만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로행위 특별 합동단속(4, 10월 및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항로상 선박통항 장애물 수거 등 - 어촌계 방문 및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의 효율적 운영(4척)을 통한 연중 불법어로 단속 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인천해경과의 협업을 통한 불법어로행위 합동단속 실시(특별단속기간 운영 : 5,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차단 인천어업정보통신국과의 협의채널 구축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로 단속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부근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장·어구 신속히 제거 - 불법 낚시어선 또는 다이버를 고용한 불법어로 단속·지도 ○ 해양경찰 및 지자체와 협의채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해역 및 항계부근에서의 불법어로 예방을 위한 협의채널 구성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내 불법어로행위 단속 실시(개항질서단속과 병행실시) ○ 항계밖 항로에서의 불법어로행위 예방을 위해 순찰(월1회) ○ 유관기관 합동 불법 어로행위 단속시스템(협조체제) 구축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선 순찰 : 동해·묵호항(1일 1회) / 삼척, 옥계항(유관기관 요청 시) ○ 취약시간대(새벽 및 공휴일) 단속 강화 ○ 수협 등 관련 업·단체를 통한 항계내 불법 어로행위 금지사항에 대한 법질서 준수 계도·홍보 지속 실시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및 불법어로 사전 차단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발생 불법어로 행위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선 전용부두 인근 웅어잡이 어업 행위(웅어잡이)를 근절을 위한 순찰(해양11호) 강화 및 어망 철거 ○ 불법어장 단속에 대한 관련기관(지자체, 해경서)과의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어구, 폐선박의 무단방치 근절 홍보 등 * 전라남도 수산과학원 목포지소 협조(각 어촌계 담당자 등) ○ 어선종사자 관제센터 초청 등 어민에 대한 개항질서 및 환경 보호 의식홍보 추진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도 개항질서 확립 추진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포항수협 합동단속, 비상출동 지원 등 공조체계 유지(상반기 : 5월중, 하반기 : 11월중) ○ 순찰선 해상순찰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홍보, 예방순찰, 고질적인 불법어구 단속 및 제거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홍보·순찰을 통하여 고질적 항내 불법어구 설치 등에 대한 단속 및 어망 등 제거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찰선, 해경함정, 울산시 어업지도선 합동단속, 비상출동 지원 등 공조체계 유지(상반기 : 5.13~5.24, 하반기 : 11.11~11.22) ○ 불법어로 방지 등 개항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 일일 항내순찰 강화로 어구·어망 제거 및 안내방송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로행위, 어구설치 집중단속 및 어민 홍보 강화 ○ 도선사, 해경, 항만 역무선, 청경 등과 정보 공유체제 운영
지 자 체	<div> <div>울산광역시</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질서 확립 추진 계획에 의거 구·군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기관별 구역 및 단속체제 구축 - 총괄(시) 연안 및 육상, 내수면(관할 지자체), 항만(지방항만청) - 시, 구·군 및 지방해양항만청 협조체제 구성(연 4회 간담회) ○ 해역 및 육상 병행 단속실시(어업지도선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지도선 합동단속, 비상출동시 해경함정 지원 등 공조유지 ○ 항만구역내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현지 합동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경찰 고발 조치 </div> </div> <hr/> <div> <div>【 동 구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합동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2014. 5. ~ 12. - 단 속 반 : 울산광역시, 구, 수협 - 방 법 : 육·해상 합동단속팀 구성·운영 - 단속방법 : 새벽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중점 단속실시 ○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자율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2014. 5. ~ 12. - 단 속 반 : 수산자원관리선, 어촌계 - 방 법 : 불법어업 발견 시 전화 또는 무선통신기로 신고 또는 수시 계도·홍보 </div> </div> <hr/> <div> <div>【 북 구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단속 실시(월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관리 청원경찰·담당공무원 출장시 우심지역 동향 파악 및 불법어업행위 파악시 즉시 단속 실시) ○ 합동단속 실시(5월 산란기, 10월 성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의 합동단속계획에 따라 육해상 단속 참여 ○ 특별단속 시행(해상단속 필요시, 대규모 기획 단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 해경 등의 장비(어업지도선 등), 단속인력 협조 </div> </div>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p>【 울주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질서 확립 추진계획에 따라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2014. 5 ~ 12 - 단속반 : 울산광역시청, 울주군 - 방 법 : 새벽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 중점단속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선 순찰 : 속초항 1일 1회 / 삼척, 옥계항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수협 등 관련 업·단체를 통한 항계내 불법 어로행위 금지사항에 대한 법질서 준수 계도·홍보 지속 실시(지방관리어항 포함)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구 철거 등 지속적인 불법어업단속 실시 ○ 연안어선 어구표시시설 지원, 어구실명제 이행으로 자율 어업질서 확립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시·군 자체 단속 및 군산해경, 서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기간 : '14. 1월~12월 - 단속참여 : 어업지도선 4척(도, 군산, 고창, 부안)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목표 및 방법 : 180건 / 도·시군 합동단속 매월 10일 이상 실시 - 해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단속 - 우범해역은 해상과 연계한 육상단속과 휴일, 야간 단속 ○ 도 주관 합동단속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해역)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처 철저 - 특정지역 또는 해역에 국한된 불법어업이나 업종간 갈등 및 대립 등은 종합대책을 강구 특별단속 등 적극 대처 - 범칙어획물 유통, 불법어구 적재 등 육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상습·고의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매월 합동단속시 우범해역 중심 순회 및 지도·단속 - 필요시 유관기관(해양수산부, 해경, 지자체 등) 합동단속 - 불법조업을 못하도록 타 시·도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 연안에 난립한 정치성 불법어업 정비 및 어구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해역별로 불법어업자 색출 및 시설물 철거 병행 - 불법시설물이 완전 정비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실시 - 불법시설물 자율철거 유도 - 무주물 등은 강제 철거(시군에서 담당검사 사전지휘 조치)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경상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질서 확립 추진계획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수협, 해경 파출소, 합동단속 등 공조체계 유지(6월, 11월) ○ 육상 순찰 및 어업인 홍보 활동 강화(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홍보, 고질적인 불법어구 단속 철거 및 제거 ○ 동해특산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민간감시선 운용
경상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지도·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한 육상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장, 횃집, 어시장, 대형마트 판매, 수산물 포획금지 기간, 체장, 체중 위반행위 중점 단속 ○ 정치성구획어업 불법행위 일제정비(4~5월,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류 예정해역 불법어구 자율정비 유도 및 강제 철거 -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의 치어 채포행위 강력단속 병행 ○ 산란·성육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 5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등 산란기 정부주관 합동단속 실시 언론매체 홍보 등 - 종묘방류, 수산자원 보호수면 등 어업지도선 집중 배치 ○ 낚시어선 안점점검 및 지도 : 5.1~5.31(1개월), 시·군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의 설비기준 등 준수사항 중점 점검 <p style="margin-top: 20px;">【 사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 밖 항로에 대한 불법어로행위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계 밖 항로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로 불법 어구 등 위해 요소 사전제거 및 계도 효과 배양(월 1회) ○ 유관기관 합동 불법 어로행위 단속시스템(협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과 불법 어로 행위 단속 시스템을 구축(상호협력 체결 등)하여 항로 상 불법어로 행위 근절 추진 - 긴밀한 상호협력체제 유지로 기존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 정보 공유 ○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추진(반기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p>【 거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교육 및 지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14. 3월(9일간) - 대 상 : 전어촌계 - 방 법 : 일정장소 선정 집합교육 및 불법어업 추방결의 대회 ○ 불법어업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14. 2. ~ 12. - 방 법 : 우심 해역, 항포구, 위판장 등 조사 및 자진 철거 지도 * 자진 철거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사법 및 행정조치 제외 ○ 불법어업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14. 1월부터 연중 - 방 법 : 자체 및 경남도 합동단속 병행 추진 * 불법 시설자 색폴 사법조치 및 어구 강제 철거,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의 치어 채포행위 강력단속 병행 - 자체지도 단속반 편성 : 반장(어업자원담당), 반원(6명) <hr/> <p>【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불법어로행위 단속 강화(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로행위 단속 취약 시간대에 단속강화 - 주기적인 순찰로 불법어로행위 및 해양사고 사전 예방 ○ 수협, 해경, 어업관리단과 협조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활동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어업지도선 239호 신규건조(1,700백만원/고성군) ○ 어업인 교육, 현지도 등 불법어업 추방을 위한 활동 강화(남해군) <hr/> <p>【 창원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업 지도·홍보를 위한 어업인 교육(분기별·수협별) ○ 불법어구 적재, 폐그물 투기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hr/> <p>【 통영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불법어업 단속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남획 및 고갈형, 민원야기 업종 등 중점 지도·단속

나. 항행장애물 처리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 통항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으로부터 유실(遺失)되거나 불법 투기된 항해장애물의 적기 제거 필요

□ 추진계획

- 해상교통관제 · 순찰선 운항 등을 통해 항행장애물 조기 발견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신속 제거 추진
-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항행장애물 제거를 위한 장비 · 인력 등 역량 강화

< 지방해양항만청 · 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항 만 청	부산청	○ 항로 및 항계 내 장애물 제거 및 침몰물 제거(필요시 등부표 설치)
	인천청	○ 순찰선의 개항단속 활동 중 식별된 항행장애물의 적기 제거(연중) - 해양1호(남항, 신항), 인천902호(북항, 연안항), 해양3호(인천 내항) ○ 규모가 큰 항행장애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청항선과 합동 제거 실시(연중) - 필요시 인천항만공사의 지원 · 협조 요청 ○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민원 발생 및 비상 시 즉각 대응조치
	동해청	○ 항행장애물 제거 계획 수립('14.1분기) - 관할 항만에 대하여 순찰선 등을 이용하여 항행 장애물 및 수중 침적물 조사를 위한 T/F팀 구성
	군산청	○ 불법 항행 장애물 실태조사 및 제거를 위한 수시 계획 수립, 시행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목포청	○ 통항지장 장애물 제거를 위한 24시간 행정선 운영(목포VTS 협조) 및 청항선(경북939호)에 의한 해양부유폐기물 수거
	포항청	○ 순찰선의 개항단속시 항행장애물 유무 여부 확인 및 도선사 등의 부유물 신고시 적기제거(연중)
	평택청	○ 도선사, 해경, 항만 역무선, 청경 등과 정보 공유체제 운영 ○ 항행 장애물의 불법설치 억제를 위한 사전 순찰 강화 ○ 항행 장애물 정보접수 시 통항선박 대상 안내방송 실시(VTS센터) ○ 장애물 파악 후 합리적인 제거계획 수립 - 장애물 종류, 소유권, 위험도, 존재 원인, 제거 방안 등 검토
	울산청	○ 해상 표류물 발생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거·수습 - 해상 표류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자체 제작)에 따른 즉각적·단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속한 제거 추진 ○ 수로보전을 위해 죽목, 어구 등 폐기물투기 단속과 장애물 제거 - 항만운영·해상교통에 문제 발생 시 행정대집행으로 장애물 제거 - 순찰선 해상순찰시 단속 및 장애물 제거 병행
	대산청	○ 불법 항행 장애물 설치 억제를 위한 사전 순찰항해 강화
지자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함)	○ 항내 장애물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게 제거 명령 신속 조치
	전라남도	○ 선박항로 지장물 제거 및 지도 단속(2014. 4 ~ 12월)

다. 로프·폐기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 추진배경

- 선박 추진기에 폐 로프가 감겨 운항불능에 이르는 등 바다 쓰레기로 인한 사고가 계속발생하고 있어 바다 쓰레기의 지속적인 제거 절실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부유·침적쓰레기 등 9천여톤 수거('13년)

□ 추진계획

- 항만과 연근해에 있는 해양폐기물 지속 수거·처리
 -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연안대청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효율적 해양 정화사업 추진
 - * '14년 목표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5,000톤,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 3,900톤
 - 환경보전해역 등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처리('14년 연중) 및 '15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해양쓰레기 분포 실태조사 실시('14.3~12)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정책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TV, 라디오, SNS 등)
- '14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ICC 워크숍 개최 지원 및 전국 규모의 연안정화 행사 실시('14.10)
 - * 참가국 : 한·중·일·러 / 대상해역 : 북위 33°-52°, 동경 121°-143°
-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관리체제 및 위탁관리 수행체제 개선
 - 계획수립과 사후관리 추가 및 지방청을 통한 지사 위탁방식 전환

< 지방해양항만청 · 지자체 · 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항 만 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항, 신항, 감천항 등 주요 항만에 청항선 4척을 고정 배치하여 상시 순찰 및 해양부유쓰레기 발생 시 즉시 제거 ○ 수거 해양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3척)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로프, 페그물 등 적기 제거 * 사업구역 : 인천항 항계내의 해상구역 및 경인항 ○ 항만, 연안구역 별 관할 기관에서 정화사업을 시행 · 처리 - 인천항 → 인천항만공사, 항계밖 → 해당 지자체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사랑 실천의 날 실시(매월 1회) 및 청항선 전담 배치 ○ 각종 해양정화 행사시 적극 지원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유지 ○ 주기적 육상순찰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청방선을 활용하여 항만내 부유식 해양쓰레기 수거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을 활용하여 동해 · 묵호항, 삼척항, 옥계항에 대한 주기적 청항 작업 실시(동해항 : 3회 이상/주) - 원목, 페타이어, 로프 등 해상부유물 수거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 1연안(45개 단 · 업체) 가꾸기 운동 활성화(월 1회) ○ 해안가 쓰레기 및 항만내 발생 폐기물 수거처리(수시) ○ 민 · 관 · 군 합동 해양정화 활동(년 1회) ○ 항계내 수중침적 폐기물 인양(반기 1회) ○ 방파제 등 항만친수시설 폐기물 수거 처리(주 4회)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수시 바닷가 쓰레기 청소 실시 - ‘바닷가 대청소의 날’로 지정 · 운영(매월 넷째주 수요일) -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참여 업 · 단체와 함께 바닷가 청소실시 ○ 청항선의 운항해역과 기간을 지속적 확대, 페그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부와 적극 협조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경북939호)에 의한 해양부유폐기물 수거(160회)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처리량 100톤) ○ 바닷가 대청소 실시(연 6~8회)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범위를 항계구역 밖까지 확대하는 적극적 해양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운영중인 청항선 작업범위에 특별관리해역(방어진항, 미포항)을 포함하고 폐기물 실태 조사 및 환경개선조치 시행 ○ 해양환경정화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분위기 지속(분기별 1회) - 민·관 합동 해안정화 활동(연3회), 수시 청항작업(청항선 1척) - 로프·페그물 등 바다쓰레기 수거(연중)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및 협의(연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추진(5회/약 45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내 배후부지 및 호안 등 항계내 쓰레기 수거·처리 ○ 청항선을 통해 동해·묵호항, 삼척항, 옥계항 청항 작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 페타이어, 로프 등 해상부유물 수거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 운항을 통해 항내 해상부유 쓰레기 적기제거 및 홍보 <p>【 해운대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120톤 수거 추진('14.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해안쓰레기 수거(50톤), 해양폐기물 수거(7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정화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 추진(구·군별) - 민·관 합동 해안정화 활동 추진(스킨스쿠버 동호회 협조) - 어항내 청항작업 요청: 울산청 협조 <p>【 동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14.3~12 / 80백만원 ○ 조업중쓰레기 수매사업 : '14년 3월~사업비 소진시 / 57백만원 <p>【 북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 '14.4~12 / 1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조업중쓰레기 수매사업 : '14년 3월~사업비 소진시 / 100백만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p>【 울주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해안정화 활동 추진(해당 어촌계) ○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 1,000명 / 80백만원 ○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 200톤 / 20백만원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80톤 (안산 40, 화성 40) ○ 사업비 : 80백만원 (국비 40, 도비 6, 시비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 : 40백만원 (국비 20, 도비 3, 시비 17) - 화성시 : 40백만원 (국비 20, 도비 3, 시비 17)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 운항을 통하여 지방관리항 청항 작업 실시(동해항만청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 폐타이어, 로프 등 해상부유물 수거 ○ 유관기관(시·군, 수협 등) 협조하여 해상정화 활동 실시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 중 인양한 해양폐기물 구매 추진(수협 위탁) ○ 항포구와 도서지역에 방치된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포구내 해양폐기물을 적재할 선상 집하장 설치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구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900톤(군산 450, 부안 450) - 사업비 : 600백만원 (국비 300, 시군비 300) 투자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의 바다 투기 방지를 위한 선상 집하장 설치(88개소) - 굴패각 친환경 처리 및 친환경 부표·어구 사용 확대로 해상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중 인양 쓰레기 구매, 수중침체어망 인양 등을 통한 해양쓰레기 연중 수거·처리 - 도 어장 정화선을 활용한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사업 해안가 쓰레기 처리사업 시행 ○ 해안가 쓰레기 및 항만내 폐기물 수거처리(연중) ○ 방파제 등 항만친수시설 폐기물 공공근로 실시(월 1회) ○ 조업중 인양쓰레기수거사업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연 160회) ○ 생분해성어구 지원 사업으로 어망지원 및 폐그물 수거(연중) ○ 수산업협동조합 어망지원 및 폐어망수거처리(수시) ○ 생분해성어구 보급 및 폐어망 수거에 따른 어민교육(년 2회)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경상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 정화 사업 : 5개시군 1,760백만원 - 연안변 방치 페스티로폼 수매 : 4개시군 150백만원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 6개시군 350백만원 - 연안 낙시터 환경개선 : 6개시군 300백만원 ○ 연안 해역 보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폐기물 처리 : 7개시군 660백만원 - 해양쓰레기 정화 : 7개시군 700백만원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 7개시군 570백만원 -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 : 1식 100백만원
	<p>【 사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부유 해양쓰레기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상이동식 쓰레기 집하장 이용,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주기적인 해양환경 순찰활동 및 적기 해양쓰레기 수거 - 우기철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유지 * 수협,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p>【 거제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정화·정비업체 위탁 정화선 활용, 부유식 해양쓰레기 제거 ○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면, 장목면 내 일원 연근해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 사등면 가조도 일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추진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p>【 고성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된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포구 등에 방치된 폐어망 전문 처리업체 전량 위탁처리 - 연안 유·무인도서 등 우심지역 어업지도선 이용 주기적인 예찰 및 해양쓰레기 수거(시기별 예찰 주기 탄력 운영) - 장마, 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협력체제 유지 * 자율관리공동체, 수산경영인연합회, 어촌계, 해양환경단체 등 ○ 연근해 침적폐기물,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 연근해 침적된 폐어구, 유실어구 등 수거처리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위탁(군수협)처리 * '14년 침적폐기물 대상 지역 수요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p>【 남해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하고 연안침적물수거, 해양쓰레기수매, 어업폐기물처리 추진 <hr/> <p>【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폐기물,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군 연안 폐어구, 유실어구 등 수거처리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위탁(군수협)처리 <hr/> <p>【 창원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어업인 교육(분기별, 수협별 시행) ○ 폐그물, 폐로프 등 해양쓰레기 상시 제거 <hr/> <p>【 통영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수거 종합계획 수립('14.1) ○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 교부 신청('14.2) ○ 사업시행 및 준공('14.3 ~)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중 인양 해안가 쓰레기 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320톤 - 사업비 : 145백만원(국비 72.5, 지방비 72.5)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100톤 - 사업비 : 90백만원(국비 90)

라. 침몰선·방치폐선 관리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침몰·방치된 선박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선박 통항위해요소 제거 및 해양오염 예방 필요

□ 추진계획

- 침몰선박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위해도 평가 및 저감대책 시행을 위해 침몰선박 관리 시스템 지속 운영
 -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침몰선박 정보 종합 관리
- 해역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에서 방치폐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신속한 제거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항 만 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내 방치폐선 실태를 조사하여 선박조사서 등 기록 관리 ○ 방치폐선 등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선박을 대상으로 제거명령 -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은 고시 후 직권제거 조치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분기별 방치선박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 실시(순찰선 3척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점검을 통해 소유자 확인·미확인 선박, 장기 방치 우려 선박 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선박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치방안 마련
	여수청	○ 방치선박 정기(연 4회) 및 수시점검, 취약지구 중점 점검
	마산청	○ 방치폐선 발생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현장 실태조사(년 2회)
	동해청	○ 방치선박 일제 점검(반기 1회) 실시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자 체	군산청 ○ '14년도 방치선박 일제점검 실시(매 분기)
	포항청 ○ 방치선박 일제 점검 실시(반기별) - 방치선박의 현지 확인 및 전수조사 후 유형별로 구분, 관리 - 방치선박 조사서, 방치선박 처리서 등 기록 및 관리 철저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은 우선 제거 명령하고, 불응 시 고발 조치 ○ 해상 및 육상 순찰시 방치선박 수시 확인·점검
	평택청 ○ 평택당진항 내 지역별 방치선박 현장 확인 및 유형별 관리 - 소유자 확인여부, 고위험도, 톤급별 및 재질별 등
	울산청 ○ 점검반을 구성(해양환경과장, 해양계장 외 3명)하여 육상 및 해상 현장 확인(분기별) 및 행정대집행 시행
	대산청 ○ '14년도 방치선박 일제점검 실시(매 분기)
지 자 체	부산광역시 ○ 분기별 실태 조사(부산남항) 실시 및 조기 처리 추진 - 소유자 확인된 경우 선박관리지시(제거명령) 및 관리계획서 징구,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은 고시 후 직권제거 조치 【 사하구 】 ○ 구내 방치된 폐선 처리 추진(목표 : 5척) - 사하구 관내 해역 순찰 및 발생시 조치('14.3~12)
	울산광역시 ○ 방치폐선 일제 점검 실시(반기별) 【 남구 】 ○ 공유수면 내 방치폐선 점검 실시(분기별) - 어선통항에 지장이 있는 방치물 즉시 해양경찰서 고발조치
	울산광역시 ○ 【 북구 】 ○ 안전한 어항질서 확립을 위한 어항법 위반사범 단속 - 방치어선 적발시 해양경찰서에 즉각 고발조치 ○ 특별 어항법 위반행위 단속기간 설정·운영 - '14년 5월, 10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울주군 ○ 【 울주군 】 ○ 어항시설 불법 점용 및 장기 방치선박 : 신속처리(사법 및 행정조치)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선박 일제 점검(년 1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확인 선박은 우선제거 명령, 불응시 고발 조치 및 직권 제거 - 소유자 미확인 선박은 공고 후 행정대집행 실시 ○ 시·군 담당부서, 수협, 어촌계 등 협조 하에 조기 발견 및 조치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 포구 및 연안해역에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을 해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 20백만원 (국비 10, 도비 4, 시비 6) - 부안군 : 10백만원 (국비 5, 도비 2, 군비 3)
경상남도	<p>【 사천시 / 거제시 / 고성군 /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발생 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현장 실태조사(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 적기 제거, 발생 대비 100% 제거 추진 - 침몰 방치폐선 특별처리비 지원(경상남도)

중점 4-4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부산시	협업기관	-
------	---------------	------	---

□ 추진배경

- 항내·연안에서의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교통관제(VTS)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제인프라 적기 확충 필요

* 항만 VTS 15개소(해양수산부), 연안 VTS 2개소(해경) 등 총 17개소 운영
연안 VTS 2개소(진도, 전남동부) 운영, 1개소(통영) 구축 중

< 연안 해역 사고사례 >



'95.7.23 전남 여수 남동방 5마일
해상, 대형원유선 좌초
씨 프린스호(144,567톤)



'07.12.7 충남 태안 남서방 6마일
해상, 대형원유선과 해상크레인 충돌
HEBEI SPIRIT호(146,848톤)



'13.12.29 부산 남동방 9마일
해상, 대형화물선 2척 충돌
MARITIME MAISIE호(29,200톤)

□ 추진계획

- 신항만 개발 등에 맞춰 VTS 시설 확충
 - (신항만 개발) 인천 신항 및 동해 호산항('14~'15년 / 4,920백만원)
 - (음영구역 해소) 울산 미포항('14~'15년 / 2,003백만원)
- 최적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항내 VTS 시설 현대화
 - 장기간(15년) 사용으로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레이더 시스템 개량 추진
- * 14년 대상지역 : 부산·군산·동해·제주항

- 기상정보 제공시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상측정장비* 개량(포항청)

* 홍해 레이더 사이트(풍향풍속계, 기압계 & 시정계 센서, 온·습도계 등)

○ 연안 해상교통관제 해역 확대(해양경찰청)

- (통영) 거제남부부터 경남서부까지의 해상교통 관리를 위해 연안 VTS 구축 추진('14. 7월 운영예정, 4,200백만원)

*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 '10. 8월 ~ '14. 6월 / 110억원

사업규모 : 센터 1개소, 레이더 사이트 2개소(육지도, 매물도)

- (경인) 용진권역 교통관제 구축을 위한 설계 실행('14년, 850백만원)

*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 '14년 ~ '17년 / 139억원

사업규모 : 센터 1개소, 레이더 사이트 3개소(덕적도, 소청도, 소연평도)

○ 부산 남항(연안항)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부산광역시)

- 항계 밖 부산남항 좁은수역의 해양사고 방지와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 선박통항 모니터링 및 안내

* 선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14.7~12) / 운영요원 채용 및 교육(5~9월)

- CCTV(9대 설치)를 활용한 해상 무단투기 및 불법 계류선박 관리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e-Navigation 대응체계 확보

□ 추진배경

-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선박운항기술에 ICT를 융합한 ‘e-Navigation*’ 도입 필요성 제기('05.12, 영국 등 7개국)

* 다양한 선박항해장비를 통합·표준화하고, 선박-육상간 끊김 없는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시에 맞춤형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체계

- 국제해사기구(IMO)는 e-Navigation 도입을 결정('06)하고 협약 제·개정을 통해 '18년(잠정) 시행 전망

* 해운·조선 관련 기술분야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UN산하 전문기구

- e-Navigation 도입으로 해운·조선시장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직접시장규모 300조원, 간접 시장규모 900조원 추정

* 조선매출액중 ICT기자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8%→20%), 해상 이동 통신·인터넷 및 콘텐츠산업 등 관련 신산업 창출 예상

⇒ 국제규제 도입에 대비 선제적인 대응체계 확보로 해양사고 감소 및 신해양산업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필요

□ 추진계획

-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 예산 확보('14 상반기)

-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획연구서 작성 및 지원체계 확보
 - * e-Navigation 개념설계 및 해역 시험체계 구축 : '14.1~11 / 8억원
-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및 사업추진 예산 확보('15~'19년, 2천억원) 및 '15년도 추진 예산* 작업 실시
 - * e-Navigation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150억원)
- e-Navigation 관련 주요이슈의 선도 및 해사안전 산업분야의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 국제해사포럼 개최
 - * '14.4월(1박2일)/ 서울 / 국내·외 기관, 단체, 산업계 등 250명
- 관계부처 합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14.~)
 - 관련 부처*간 지속가능한 업무 조정·협력 및 체계적인 사업평가·개선 등 구속력있는 관리를 위하여 총리 훈령을 제정·운영
 - * 해수부, 미래부(해상무선통신), 기재부(R&D), 산업부(조선), 국방부·국정원(국가보안), 해경청(수색·구조), C.I.Q 기관, 해운단체, 관련 산업계 등
- e-Navigation 포럼 창립·운영 등('14.4~)
 - e-Navigation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역량집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동 정책포럼 창립
 - * 참여 : e-Navigation 관련 부처, 학계 전문가, 산업계 등 200명
 - 전문가 및 산업계의 참여를 위하여 전문분야(①전략개발, ②선박항해, ③육상기반 및 ④통신서비스)로 구분하여 상시 온라인 포럼 운영
 - 유관기관, 관련 업·단체 실무자 중심의 연구회 개설·운영(부산청)

- 「IMO 규제 선도적 대응을 위한 해사산업 발전법(가칭)」 제정 추진
 - e-Navigation 추진근거 마련 및 관련 산업계의 체계적 지원
 - * 정책연구용역('13.10~'14.3), 법률안 초안마련('14.6), 국회제출('14.9)
- 표준화 주도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14~)
 - e-Navigation 소프트웨어 품질평가(SQA) 지침서 개발 및 해상무선 통신 체계 표준마련·활성화를 위한 국제논의 적극 대응
 - * IMO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14.9),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14.10)

나. 'e-Navigation' 전략 기반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GICOMS) 고도화

□ 추진배경

- e-Navigation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 '08년 e-Navigation 전략수립, '14년 세부 시행계획(Action Plan) 확정 예정

□ 추진계획

- 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GICOMS 서비스 구현('14.4~)
 -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확산 등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時·공간의 제약없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 추진
 - * 모바일기반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자원 활용도·신뢰성 제고('14.4~)
 - 기존의 선박, 선사, 선원 정보 등과의 연계 구조 개선 및 추가로 활용 가능한 정보 자원 분석·연계를 통하여 GICOMS DB 신뢰성 확보

다. 해양안전 통합 모니터링 및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 추진목적

- 전국 관제센터의 VTS 정보와 선박운항 모니터링 시스템(VMS)의 통합 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e-Navigation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전국 관제 센터(15개 항만, 3개 연안)의 VTS 정보 연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실시
 - VTS 정보 연계망 시설규모, 시스템의 규격과 수량, 설치방안, 연계망 운용 및 유지관리 계획 검토 수립
 - 연계망 구축 공사 설계도서, 예산내역서 및 연계를 위한 세부 기술 지원방안 등 검토 수립
 - VTS 정보 연계망 구축시 e-Navigation 도입 대비 대응방안 수립
- * (실시설계) '14.3~12(1.5억원) / (연계망 구축) '15~'16 서남해권 → 남해권 → 동해권 → 연안 VTS 등을 연차적으로 연계(100억)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첨단 지상파 항법(e-Loran) 시스템 개발

☐ 추진현황

- eLoran 시스템 조달외자구매·설치 사업이 1·2차 입찰 모두 유찰됨에 따라 3차 입찰('14.1.17. 개찰) 공고
- 송신국 부지는 대체부지를 선정 한 후 보상계획 공고·통지를 위한 측량 및 자료조사 추진 예정

☐ 추진계획

- '17년까지 eLoran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송신국 구축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시스템 조달외자구매·설치 및 송신국 신축공사 착수·추진
- 송신국 부지매입 및 보상 완료('14.12.)
- eLoran 시스템 조달외자구매·설치 계약 및 추진('15.12. 준공)
- 송신국 신축공사 착수('15.12. 준공 목표)

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평택지방해양항만청)

□ 추진현황

- 입출항 선박에 풍향·풍속·조류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항로입구, 변침점 등 주요지점에 항로표지용 AIS를 설치

* 평택항에 집약관리시스템(AtoN AIS 포함) 운영 중('13.1~)
: 대상 총 55기(등대 15, 등표 11, 등부표 28, 기타 1)

□ 추진계획

- 통항선박에 대한 신속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AIS 등 선박의 전자항법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지속 추진

* 집약관리시스템(AtoN AIS) 운영 및 유지보수 : '14. 1. ~ 12.

다.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노후 항로표지시설 개량

□ 배경 및 필요성

-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에 따른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 표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노후 표지시설을 태양광 등 녹색에너지를 이용해 악천후(눈, 우기)에도 선박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첨단 표지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주요 선박 통항로에 항로표지 확대 설치 및 노후 항로표지에 대한 유지·보수 추진

- '17년도까지 2.5마일 당 1기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14년도 항로표지시설 확충(39기) 추진

* 무인등대 15기, 등표 23기, 무신호기 1기

** '08년 2,092기(3.13마일) → '12년 2,284기(2.87마일) → '17년 2,625기(2.5마일)

○ 녹색에너지 이용 항로표지 시스템 구축

- Hybrid 전력 생산시스템 해상 실용화 연구(2차) 추진

· 기간/사업비/연구기관 : '14.1~12 / 122.5백만원 / 항로표지기술협회

· 해상 설치 및 현장 성능 실험 등

- 악천후에도 발전 가능한 다면 구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 기간/연구비/연구기관 : '13.11 ~ '14.11 / 2억원 / 동국중전기(주)

- 해상용 LED 등명기 및 태양전지 등 녹색에너지 이용 확대

· 기간/사업비/사업주체 : '14.1~12 / 31억원 / 각 지방항만청

< 지방해양항만청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항포구에 항로표지 설치(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백섬등표 신설, 임랑항 방파제 등대 신설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섬 등대,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 나무섬 등대 레이콘 개량, 대수선 공사 및 감천항 대형 등부표 개량 - 낙동강하구 위험수로 등주 유지보수 추진
	<p>【 제주해양관리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양도 북서방 등표, 태흥 3리 등표, 태흥 3리 방파제 등대 ○ 행원항서방파제등대 개량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인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및 어선의 통항안전을 위한 등표 설치(고이식등표, 1건)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신호시스템 유지보수, 해상기상신호시스템 유지보수, 유인 등대 전원시설물 개량
여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항 위험해역 식별을 위한 등표 설치(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화도남방 등표, 진막금 등표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모서 등표, 대수선 공사, 남해권 등부표 인양점검 추진
마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등표 및 무신호기 신설(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여등표, 너른여등표, 가룽포등표 및 대병대도 무신호기 ○ 통항선박의 원활한 항행정보 제공을 위하여 첨단 시스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권역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 ○ 태풍내습시 파손된 항로표지시설 복구 및 기존 노후된 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여등표 복구, 대수선 공사 및 홍도등대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보수
동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항포구 및 항행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등표 설치(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항 방사제 등대, 동산항 남방파제 등대, 문암 1항 방사제 등대, 가이암 남방 등표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인진항방파제·방사제 등대 개량, 전진항방파제등대 개량, 대수선 공사 추진
군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 어선 등의 통항안전을 위한 등표 및 방파제 등대 설치(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항등표, 광승남방등표, 광승북방등표, 장자도 남방등표, 위도 북방등표, 궁항 물양장 등대, 벌금항 방파제 등대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항포구·해상 간출암상에 등표 및 방파제 등대 설치(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도등표, 탄도동방등표, 원산항 방파제 등대, 재원항 방파제 등대 ○ 통항선박 안전을 위하여 첨단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개량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이도등대, 장도등대, 하남덕도등대 개량, 대수선 공사 추진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p>【 진도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마도 북방등표, 앞여 등표, 용치여 등표(3건) ○ 집약관리시스템 구매 설치 ○ 갈두리서방등표 개량, 대수선 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포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 위해요소(암초)에 등표 및 소규모 항포구에 방파제 등대 신설(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도등표, 지경항 방파제 등대, 골장항 방파제 등대, 병곡항 방파제 등대, 여남항 방파제 등대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수선공사 추진
평택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하여 기상정보 제공(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파도등대 해양기상신호시스템 구축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표지 집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입파도등대 축전지 개량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항포구 방파제 등대 신설(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명항 방파제 등대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 동방파제서단 등대 레이콘 개량, 대수선공사 추진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항포구·해상 간출암상에 해양교통시설 설치(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항 남서방 등표, 후서암 등표, 몽산포항 이안방파제 등대 ○ 기존 노후된 항로표지시설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대암 등표, 대수선공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중점 4-7 정밀도 높은 해도 제작 보급

주관기관	국립해양조사원	협업기관	-
------	---------	------	---

가. 연안 해역에 기본·정밀조사

□ 추진현황

- (연안해역) 32천km², 109개 국가어항에 대한 기본·정밀조사 추진
 - '13년까지 연안해역 32천km² 중 19,948km²(62%)완료, 국가어항 109개항 중 98개항 조사완료
- (해안선) 육지부('01~'10)와 도서부 해안선('11~'13) 완료로 '13년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안선 조사 조기완료(당초 '14년 완료 목표)

□ 추진계획

- 소형선박의 안전항해 지원을 위해 연안해역의 해저지형, 수심, 항해위험물 정밀조사 확대 및 대축척해도 간행
 - 전남 연안해역, 국가어항의 해저지형, 노·간출암, 항해위험물 등 정밀조사 추진
- * 현 예산액 기준으로 연안해역 잔여물량 12,133km²에 대한 조사 시 '22년 완료 예상

나. 주요 항만해역에 대한 정밀수로측량

□ 추진현황

- 무역항(31개항), 연안항(29개항) 총 60개항 중 56개항에 대한 주기적 조사 실시

* '12.8월 신규 지정된 연안항 3개항은 '14년 조사 예정이며, 서울항은 기반 시설이 완료 시 조사 시행 예정

□ 추진계획

- 항해 안전확보와 항만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지원을 위해 군산항 등 12개항* 항만해역에 대한 정밀수로측량 추진

* 군산항, 장항항, 평택·당진항, 진해항, 보령항, 속초항, 태안항, 대산항, 제주항, 상왕등도항, 가거항리항, 국도항

- 항만해역의 안전항해 위해요소 파악 및 지형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해저지형, 해저지질 등의 주기적인 정밀수로측량 실시

다. 국가어항 및 연안해역 대축척 해도 제작

□ 추진현황

- 대축척 종이해도와 전자해도(부산항 등)를 제작하고 최신자료 업데이트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고품질 전자해도 제작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간행 전자해도에 대해 매주별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 최신 전자해도 제작(297셀) 및 항행통보 수정사항 업데이트(52회)

라. 최신 항해안전정보 지속 제공

□ 추진현황

- 선박의 안전항해 및 항만 입·출항에 필요한 수로서지* 제작

* 한국연안 항로지, 조석표, 천측력 등 서지 발행

- 항로표지의 변경사항, 해도와 수로서지의 수정사항 등 국·영문 3,600부(매주 1회/연간 52회) 간행·배포

□ 추진계획

- 수로서지 확대 제작

- 한국연안 항로지, 등대표, 천측력 등 11종의 서지 간행

- 수로서지 후보표 간행을 통한 최신자료 업데이트 및 정확성 유지

- 해도 등 수로도서지의 수정사항 및 해상교통 관련정보를 선사 등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항행통보 및 정보 제공

- 국·영문 항행통보 간행(약 3,600부, 600개소/매주) 및 인터넷 서비스 시행

- 군 작전, 해양레저 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 해상사격훈련, 표류물, 침몰·좌초 등 긴급사항 발생 시 방송사 등 관련기관에 스마트폰 어플, Fax, SMS 등을 통해 정보 전파

* 매년 약 400회의 항행경보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계류시설 개발시 선박·승하선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항만 계류시설 개발시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승하선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사전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항만 계류시설 계획 시 해사안전 관련 관계자 의견청취 및 반영
- 항만 계류시설 개발 후 반영된 안전조치 지속 지도·점검

나. 내항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 추진현황

- 도서민, 관광객 등 내항여객선 이용자의 승하선 안전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에 대한 순차적 개선사업 추진
 - * '12년 2개소(10억원), '13년 4개소(30억원) 개선 시행

☐ 추진계획

- 도서지역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이용객 안전 확보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여객선 중간기항지를 중심으로 낙후된 접안시설 7개소 개선 시행

일반 4-2 해양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

주관기관	기상청	협업기관	-
------	-----	------	---

가. 연안 해역에 해양 이상현상 감시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해상활동과 밀접한 연안해역의 해양기상 감시능력 향상을 통한 해양 위험기상현상 사전 감시 및 대응능력 향상 도모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원인불명의 다양한 해양 위험기상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예측능력 향상 필요

□ 추진계획

- 해상에서 발달하는 위험기상현상의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해양 기상현상 감시,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및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연근해 해역별, 해양기상 현상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해양 기상감시망 구축
- 해양사고를 야기하는 해양 위험기상 현상 조기 예측 및 분석 체계 구축
 - 해양에서의 위험현상(기상해일, 이안류, 저수온, 저염수, 너울 등) 감지 · 대응을 위해 조기 감시 및 예측능력 개선 추진
 - 해양위험기상 사전발생 정보 서비스의 유관기관 지속적인 제공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나.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 추진현황

○ '13년 선박기상관측시스템, 파고부이 등 총 17개 장비 설치 완료

관측장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비고
해양기상부이	5	5	5	5	5	7(2)	8(1)	8	9(1)	9	10(1)	
선박기상관측시스템	-	-	-	1	1	1	1	1	1	3(2)	8(5)	
등표기상관측장비	5	6(1)	7(1)	7	8(1)	8	9(1)	9	9	9	9	
파랑계	1	2(1)	2	2	5(3)	6(1)	6	6	6	6	6	
파고부이	-	-	-	-	-	-	-	10(10)	18(8)	27(9)	35(8)	
연안방재 관측시스템	-	-	-	-	-	-	-	6(6)	11(5)	15(4)	17(2)	
항만기상관측장비	-	-	-	-	-	-	-	-	1(1)	2(1)	3(1)	
기상관측선	200호	1	1	1	1	1	1	1	기생호	1	1	
해양기상기지	-	1	1	1	1	1	1	1	1	1	1	

※ ()는 당해연도 설치

□ 추진계획

-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연해·근해 및 광해역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양기상관측망 인프라 구축
 - 연·근해 위주의 관측망 극복을 위한 광해역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 * 선박기상관측 시스템(2개소), 해양기상부이(2개소)
 - 기상해일 및 너울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방재 관측시스템 확충(1개소)
 - 평수구역과 연안 등 특정관리해역의 예보 세분화를 위한 파고 부이관측망 확대(4개소)
 - 해역별, 항로별 상세 해양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한 해양·항만기상 관측·예측시스템 고도화

다. 해양기상관측 전용선박 운영

□ 추진현황

- 해양기상관측(기상1호) 전용선박의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의 해양위험 기상 관측 추진 중

□ 추진계획

- 위험기상현상 및 예측능력향상을 위한 선도 및 집중관측 수행
 - 해양기상관측선을 활용하여 위험기상 및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선도관측 및 집중관측 수행
 - 태풍 진로감시 및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해 태풍기간 표류부이 투하

라. 해양기상 예측 신뢰성 증진 및 예보 신속 전달

□ 추진현황

- 다양화·대형화되는 해양 위험기상의 원인규명을 통해 해양기상 예측능력 향상 추진
-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 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 예측·예보 정보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위험 해양기상현상 감시·분석기술 향상 및 예측기술 개발
 - 해양기상 관측, 예측, 특보 사례 분석을 통한 해양 예·특보 가이던스 마련 및 활용을 통한 예보 정확도 향상
 - 지방청 예보구역별 상세(500m 해상도) 해양기상 예측으로 예보 능력 향상 및 선박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해양정보 제공 강화(포털 사이트 운영)
 - 실수요자 중심의 해양기상정보 개발 및 실시간 전달체계 강화
 - 기상해일, 이안류, 너울, 폭풍해일 등 해양 위험기상현상 사전 예측 및 분석정보 제공 체계* 지속적 운영
- *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풍랑 및 너울 분리 예측 정보를 통한 파랑 예보 정보 정확도 향상 및 관련 사고 방지 지원

일반 4-3 어장표지 표준화

주관기관	전남, 울산시	협업기관	-
------	---------	------	---

가. 어장표지 등의 표준화 추진(전라남도)

□ 추진현황

- 전라남도 「면허어장 어장구역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기초로, 어장표지 등의 표준화 추진방안 마련

《 전남도 고시 현황 》

- 고시명 : 면허어장 어장구역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일자 : 1997. 11. 22
- 주요내용 : 어업의 종류별 어장구역 경계 표지시설 설치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 근거규정 : 수산업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 추진계획

- 타 시도와 협조하여 전국적인 표준화 방안 마련
 -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어장 표지 등의 방안 마련 시에 이를 이용하는 어업인이나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혼란 초래
 - 각 지자체의 통일된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여 방안 마련

나. 어장 경계구역 표지시설 설치(울산광역시)

□ 추진현황

- 업종간 분쟁 방지와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어장이용개발 계획에 따라 승인된 어장에 대해 어장표지 추진

□ 추진계획

- 선박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면허·어선어업의 어장 및 어구 실명 표지설치 추진
 - 표지 표준화를 추진하고 어장구역의 바깥부분(모서리마다)에 표준화된 표지 설치 유도
- * 어업권 종류(85건 /1,343ha) : 마을어업 20건, 정치어업 6건, 양식어업 59건
- 미실시 어장에 대한 지도 공문 발송 및 이행 적극 독려

주관기관	국립해양조사원 울산항만공사	협업기관	-
------	-------------------	------	---

가. 실시간 해양관측 및 정보제공(국립해양조사원)

□ 추진현황

- 해양재해 감시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양관측망 증설(5개소)
 - * 조위 관측 3(삼천포, 백령도, 연평도), 광역해수유동관측 2(경기만, 울산항)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관측자료의 분석 등 해양예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안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공간 창출을 위한 디지털 해양관리 체계(관측·예보·서비스) 마련
 - 거문도항 조위관측소('81년 설치) 이전, 주요항만(부산·광양항) 실시간 해양관측 및 예보체계 구축
 - 국가해양관측망(90개소) 유지·관리, 관측자료 종합분석을 통한 해양예보 인프라 구축 및 이어도 해역에 대한 연구지원 등 추진

나. 실시간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운영 (울산항만공사)

□ 추진현황

- 도선사, 울산항 이용선사 등의 요청에 따라 울산신항 일원*에 해수유동관측시스템 구축·운영 및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제공 추진('10.10~)

* 중앙방파제 등대, UPA 등부표, 9호 등부표 및 S-OIL 원유부이 인근 해저

□ 추진계획

- 울산항 통항선박 안전확보 및 항만이용 효율 증진을 위해 입출항선박 및 항만이용자에게 정확한 조류 및 기상정보 제공(연중, 총사업비 136백만원)
 - 층별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인양 및 정비(분기별)
 -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수집 데이터를 가공하여 보고서 작성·배포(분기별)
 - 실시간 해수유동 관측자료 제공(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 항만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관측위치 변경 검토

5. 국제협력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중점 5-1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능력 제고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IMO*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회원국 감사제도를 '16.1월부터 강제화할 예정으로 체계적인 대비 필요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추진계획

- ISO 인증심사(내·외부)를 활용한 '회원국 감사' 수감능력 배양
 - ISO 인증기관의 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보완 사항 발굴·개선('14.9, 10월)
- 정부권한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여 선박검사 대행기관(KST, KR 등)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개선('14 상반기)
- 타 회원국 감사 참여 등 IMO에서의 역할 확대
 - 타 국가의 회원국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IMO에 대한 기술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감사관 양성교육 시 강사 지원 추진

중점 5-2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산자부	협업기관	-
------	----------	------	---

가. IMO 국제기준 대응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IMO를 통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의제문서의 전략적 개발과 이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IMO 주요 회의에서 논의되는 국제기준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우위 기술력과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의제 발굴
 - 신산업 국익창출을 위한 선박평형수, e-Navigation, 그린쉽, 극지 운항기술 등 핵심 현안의제 적극 대응
 - IMO 대응은 해수부 총괄, 의제별 특성에 따라 부처 간 협업 추진
- 전문가 T/F팀을 통해 IMO 회의 상시대응체제 구축
 - IMO 전략대응 연구용역과 IOPC Fund 대응 용역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연구 활동 및 회의참여 지원
 - 관·산·학·연 전문가 합동토론회(연2회) 개최로 IMO 신규과제 발굴,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 국제해사(해운·조선)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추진

- 해사분야 국제기구 의결과정의 이해와 토론 기법 등 교육

* 장소/시기/교육목표인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14.11월 / 20명

나. 해사산업계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전파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적인 해사안전, 해양환경 관련 동향을 적기에 해운·조선 업계에 전파하여 해사산업계의 대외경쟁력 유지·강화 필요

□ 추진계획

○ 해사안전분야 국제 업무 발표회 개최(연 2회)

- IMO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해운·조선 등 해사산업계에 전파

○ 해사정보 제공 채널 다각화로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

- IMO 및 국제해사 동향 전파(주간), 해양안전 소식지 발간(계간) 추진

다. 해운·조선·조선기자재 분야 간 협력체계 구축(산업통상자원부)

□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산하 ‘국제협력기술위원회’^{*}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해운·조선산업 발전협의회’^{**}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 조선협회 회원사(9개), 한국선급, 해양과학기술원, 조선기자재연구원 참여(분기1회)

** 해운업계(8개사), 조선업계(7개사) 참여(분기1회)

□ 추진계획

- ‘국제협력기술위원회’, ‘해운·조선산업 발전협의회’ 활성화 도모 및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주관부처와 협력강화

- ‘국제협력기술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 지속 개최

- ‘해운·조선산업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주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

- 조선해양 분야 국제기구 활용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 조선해양분야 국제기구 활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13.5~’14.4, 조선학회 연구용역중)

<주요연구내용>

- 국제기구 최근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 친환경선박 기술동향 분석 및 친환경선박 핵심 기자재 품목 도출
- 초대형 부유식 해양구조물 기술동향 및 대응방안

- 조선해양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아시아조선협의체(ASEF) 설립 추진

* ASEF : Asian Advanced Shipbuilding Expert's Forum

* 주요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

라. '국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대형 오염사고 발생시 국익 확보를 위해 IOPC Fund 회의에 국내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추진계획

- IOPC Fund 회의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상시대응체제 공고화
 - IOPC Fund 중장기 인력진출과 전략적 회의대응을 위한 전문가 풀 마련 및 자문위원 구성·운영('14.2)
 - OPC Fund 대응용역('14.3)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연구활동 지원 및 회의참여('14.5·10월)로 발언권 강화 등

중점 5-3 양 · 다자간 교류 및 기술협력 공고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양 · 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국제해사기구(IMO)와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해양안전 · 환경 · 보안 등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주변국, 주요 해사국 및 아 · 태 지역 협력체 등을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로 우호세력 구축과 국적선 안전확보 도모 필요

□ 추진계획

- 주변국 및 주요 해운국 등과의 양자회의 개최
 - 주변국(中 · 日 · 싱) 및 주요 해운국(호 · EU) 등과의 회의를 통해 IMO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과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등 추진
 - * 선박온실가스 감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e-Navigation 등
-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 해사안전 정책 선도
 - 아 · 태지역 해사안전기관장회의(APHoMSA)의 주도적인 참여로 새로운 해사안전 정책과 기술협력사업 발굴

구분		차수	장소	일정
양자회의	한 · 중국	15차	중국	'14.2
	한 · 일본	18차	한국	'14.10
	한 · EU	4차	런던	'14.5
	한 · 호주	4차	한국	'14.4
	한 · 싱가포르	4차	한국	'14.5
다자회의	아 · 태 해사안전기관장회의	15차	피지	'14.7

나. 해사안전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IMO A그룹 7연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역할 수행 필요

* '03~'13년간 546만불을 기부(年 50만불)하였으며, 총 72개의 사업을 선정·시행함

□ 추진계획

- IMO 기술협력 자금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세계해사대학 장학사업, e-Nav 환경에서 해운산업의 안전확보, 런던협약 준수장벽 제거 등 역량강화 사업 지원(12개, 78.8만불)

구분	프로그램	일정	예산(USD)	장소
IMO 기술 협력 사업	세계해사대학(WMU) 장학사업	'14.1	250,000	스웨덴
	"Maritime Woman: Global Leadership" 국제세미나	'14.1	50,000	스웨덴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워크숍	'14.	90,000	아시아
	IMO/IHO 수로조사 및 거버넌스 교육과정	'14.	70,000	동유럽
	해상교통 간소화 세미나	'14.10	15,000	앙골라
	해양사고조사 교육 과정	'14.3	25,000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해운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14.	30,000	방글라데시
	트레몰리노스 협약 이행 세미나	'14.	50,000	필리핀
	SAR 강사 양성 교육	'14.	50,000	동유럽
	e-Navigation 환경에서 해운산업의 항해 안전 확보를 위한 세미나	'14.4	113,000	서울/부산
	국제협약의 효율적 적용에 관한 워크숍	'14.	30,000	아시아
	런던협약 장벽제거 사업	'14.	15,000	-

- 글로벌인재 방한 연수 실시('14.4, 23명 내외)

- 개도국의 해사전문 인력인 세계해사대학 재학생의 국내 해운·항만시설 견학 등을 통해 국내 기술력 홍보 및 親韓세력 구축

중점 5-4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과의 협력강화

□ 추진현황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제3작업반 회의에 참석('13.9.9, 런던) 하여 국제적인 해적피해 방지 노력에 주도적 역할 전개
- 무력사용 해상규칙 국제모델 100 Series Rule, 피랍선원의 복지 제고를 위한 가이드 라인, 민간해상보안업체 및 보안요원 국제표준 논의 등
- * CGPCS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적퇴치 국제공조를 위해 창설('09.1) 제3작업반(의장 : 한국)은 소말리아 해역 통항선박들의 안전운항 수칙 개정 담당

□ 추진계획

- 소말리아 해적퇴치연락그룹(CGPCS)을 통해 각 국가의 해적피해 방지 역량 강화 주도
-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지침(BMP) 이행 강화, 피랍선원의 복지제고, 선사·선박의 자구책 강화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 주도

나. 아시아해적방지협정(ReCAAP)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 추진현황

- ReCAAP(한, 중, 일, 싱가포르, 영국 등 19개국 참여) 사무국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의 역량강화 도모

* 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협정채택 '04.11, 한국 가입 '06.4.7)

** '13년 ReCAAP 사무국(싱가포르 소재)에 운영분담금 1.5억원 지급, 해적피해 방지 역량강화 워크숍('13.8.15~16) 및 관리자 회의('13.11.11~14) 개최

□ 추진계획

-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 지역협력 및 공조체제 강화

-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등 아시아지역 해적퇴치를 위한 정보공유, 역량강화, 협력증진 등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강화(연중)

* 14년 ReCAAP 사무국에 운영분담금 1.5억원 지속 지원

다. 선박위치정보(LRIT) 공유로 구조대응 협조체계 증진

☐ 배경 및 필요성

- 해적위협 초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유지를 위해 해적위협 해역에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연중 운영 중('09.1.~)

☐ 추진계획

- 청해부대와 국적선박의 위치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한 상황 대응
 - 청해부대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설치로 해적 출몰해역 통항 국적 선박의 위치정보 공유 및 24시간 정밀 모니터링 추진(연중)

* 파견함정 시스템 유지보수(1억원),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위탁·운영(1.16억원)

라. 해운 업·단체에 해적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 배경 및 필요성

- 해운업계에서 능동적으로 해적피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적모선, 해적사고 등의 정보를 업·단체에 신속 제공 필요

☐ 추진계획

- 해적모선 및 해적사고 정보의 실시간 제공 지속 추진
 - UN, IMO, ReCAAP, 국제상공회의소 해적신고센터(IMB PRC)의 해적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선사 및 선박 등에 전파(매분기)

중점 5-5 항로표지 국제 교류협력 확대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추진배경

- '1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19차 IAL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절실

* 80개국 500명 참석, 이사국 선출, 향후 IALA 중·장기 추진전략 결정 등

□ 추진계획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직무파견 추진

- IALA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IALA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에 해수부 직원을 '14년부터 1년(연장 가능)간 파견 추진

* IALA 사무총장(Mr. Garry Prosser)이 직접 우리부에 IALA 본부 직원파견을 공식 요청('12.12월 해수부와 IALA간 직원파견에 대한 MOU 체결)

중점 5-6 해양·수산 관계자 해사안전 의식 제고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종사자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시키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안전관리 사례 발굴·확산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 * '10년부터 해수부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입출항이 빈번한 어업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조업 현장에서의 안전운동 전개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4.11월)
 - 우수 안전관리 기법을 발굴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회사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모전 개최
 - 우수사례에 대해 사례집 발간, 전문지 게재 등 전방위 홍보 추진
-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해양안전기동반 운영(어업관리단)
 - 어업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지원, 어업인 수산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

중점 5-7 대국민 해사안전 생활화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바다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해양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의 내재화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
- 국민이 해양안전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이 찾는 등대를 체험공간으로 탈바꿈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 개최('14.11월)
 - 해양안전을 주제로 전국 어린이 대상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추진
 - 해양안전 기초 교재 개발·보급
 - 선박 승선, 물놀이, 갯벌탐험, 바다낚시 등 바다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안전수칙을 어릴때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해양안전 교재 지속 개발
-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해양안전교육교재(만화) 제작('13.9~12)

○ 구명동의 착용 등을 위한 안전캠페인 전개(해경청, KST)

- 여름철 해수욕장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명동의 착용, 긴급 전화번호 122 홍보 추진
- 어선 등 선박검사 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스티커 배부

< 배부용 스티커(안) >



○ 등대를 활용한 대국민 해사안전 체험공간 확충

- 영도등대 등 23개 유인등대를 국민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련회, 전시회, 음악회 등 개최('14.1~12)
 - 바다를 통한 국민의 힐링과 해사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부산 신행 입구(나무섬 2천평)에 가칭 '종합등대휴양소' 건립 추진
- * '종합등대휴양소'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시행('14.7)

일반 5-1 해양사고 조사 심판 국제협력 강화

주관기관	중앙해심	협업기관	-
------	------	------	---

가.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 추진현황

- 최근 국제 해양사고 조사동향을 파악하고 외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및 우리나라의 대외 영향력 제고를 위해 각종 국제회의 적극 대응

- * 제21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 참석 : '13. 3월, 2명
- 제22차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MAIIF) 개최 : '13.10월, 41개국
- 제16차 아시아조사기관 회의(MAIFA) 개최 : '13. 11월, 14개국
- 제2회 해양사고조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 '13. 10월
- IMO 아시아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훈련 참가 : '13. 7월, 2명

□ 추진계획

- 해양사고 조사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가

구분	추진사항
제1차 III('14. 7월)	해양사고 교훈 및 권고사항 등 대응
제17차 MAIFA	회원국 활동 및 조사사례 공유 등
제23차 MAIIF	회원국 활동, 조사사례 공유, IMO 의제문서 검토 등
제60차 항해안전 전문위원회	항해자료기록장치 동향 파악 및 대응

- 제3회 해양사고조사 국제 컨퍼런스 개최(4분기)

-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과 선진국과의 조사기법 공유 창구로 지속 활용

나. 양자협력을 통한 조사협력 강화

□ 추진현황

- 양국간 선박 운항이 활발한 중국과 해양사고 발생시 원활한 조사협력, 조사기법 공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해양사고 조사협력 회의 등 개최

* 제9차 한중 해양사고 조사협력 회의 개최('13.5월, 부산, 양국 16명)
제6차 한중 해양사고 조사관 교환근무('13.11월, 2명)

□ 추진계획

-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간 조사협력 체계 강화 추진
 - 양국간 조사협력 평가, 주요 사고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제10차 한중 조사협력 회의 개최
 - 양국관련 해양사고 조사협력 강화, 조사코드 이행상황 파악 등을 위해 제7차 한중 해양사고 조사관 교환근무를 실시('14.11.)
 - 영국 등과의 양자협력 추진(연중)

다.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의 이행력 확보

□ 추진현황

-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의 국내법 도입(개정 해심법 '11.12.16. 시행)을 근거로 그 이행을 위한 특별조사 인력확보('13.12월, 5·6급 각1명) 및 특별조사부 연중 운영(7회)

□ 추진계획

-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 이행을 위한 조사관 역량 강화
 - 영국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에 조사관·심판관 등 파견교육 추진
- 조사코드에 따른 특별조사를 위한 인력 지속 확보('14년 5급 4, 6급 4명)
- 연중 조사코드 대상사고 발생시 특별조사부 구성·운영

일반 5-2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추진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배경 및 필요성

- IMO 미가입 협약 중 우리나라의 가입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필요

□ 추진계획

- 미가입 협약별 종합분석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추진
 - IMO 국제동향과 협약 비준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외교부(유엔과), 관련 부처 등과 상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 우리나라 해사산업계와 연관성이 높은 미가입 협약 가입 추진
 - 「2006 해사노동협약(MLC)」의 원활한 가입을 위해 국내법 수용, 인증서 발급 등 국내 이행 준비 완료시기에 맞춰 IMO에 기탁서 제출 추진('14.3)
 - 「어선안전협약(케이프타운 협정서)」가입 필요성 검토를 위해 주기적 동향 분석 및 국내 입법화 준비 추진('14.12)

일반 5-3 해양사고 예방 지식 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주관기관	중앙해심	협업기관	-
------	------	------	---

□ 사업개요

- 주요 해양사고 원인, 사고재발방지 교훈 등을 수록한 학습효과가 높은 동영상 교재를 제작·배포하여 사고예방 효과 제고
- 사고상황을 현실감 있게 재연한 3D CG 등을 통해 이해도 제고
- * 화물선·예부선·어선 관련 연안해역 사고를 주제로 동영상 기 제작('13년)

□ 추진계획

- 연안해역에서 빈발하는 해양사고 유형, 원인 및 교훈 등을 수록한 교재 지속 제작·배포
- 최근 5년 이내 재결된 여객선, 유조선, 어선관련 연안해역 사고 중 빈발한 유형의 해양사고, 피해가 컸던 사고를 대상으로 동영상 제작 (공개입찰 '14.4월, 제작완료 '14.12월까지)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중점 6-1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주관기관	해경청	협업기관	-
------	-----	------	---

가. 해상 수색·구조 장비 확충

☐ 추진현황

- 해상에서 조난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조장비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추진계획

- 광역·연안특성에 적합한 구조장비 지속 확보 배치
 - 대형구난함(3척, '12~'16년), 항공기(대형헬기 1대), 연안구조장비(수상 오토바이, 고속제트보트 등 33척), 122구조대 고속보트(1척)
- 특수구조단 무인잠수정(ROV)·수중다방향 CCTV 등 첨단장비 도입

나. 민·관 수난구조 공조체계 강화

☐ 추진현황

- 수난구조법 전부 개정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지원 등 체계적인 운영체계 마련

-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 해양구조협회지부 등 지역 민간 구조대와 상호 협력체제 유지

□ 추진계획

- 민간 구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비와 보상 예산 확보·지원
 - * 민간구조대원 구조활동 실비 보상 및 교육훈련 예산 확보('14년 494백만)
- 해양경찰 수난구조 활동시 실질적 구조협회지부 참여 방안 마련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인명구조요원 교육, 각종 사고시 협회 참여 활성화 유도

다. 해양긴급전화 122 활성화 및 122구조대 직무훈련 강화

□ 추진현황

- 언론 및 홍보스티커·전단지 배부 등으로 '해양긴급번호 122' 인지도 향상 추진
- 122구조대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장비 확충 및 훈련 실시

□ 추진계획

- 해양긴급번호의 122 대국민 홍보 강화
 - 오접속·장난전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접수를 위한 122접수요원 교육 실시

- 특수구조단·122구조대의 인력보강 및 최신 구조·구난장비 도입
 - * 구조로프 등 육상구조장비 보완, 수중탐색장비(다방향 CCTV) 등 보급
- 전문 구조기술 교육을 통한 대규모 해양사고시 인명 구조능력 향상
 - * 야간·다중 인명피해 등 취약요소 극복을 위한 집중훈련 실시
- 연안사고 신속구조를 위한, 122구조대 'LIFE PATROL 계획' 추진
 - 122구조대 연안사고 다발 및 취약해역 정기순찰
 - * 연안사고를 사전 예방·점검하고 선제적인 맞춤형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

라. 해양 응급의료체계 개선

□ 추진현황

- 해양·도서민의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구급대 운영
 -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경비함정 139척, 헬기 8대 설치·운영 및 해양경찰교육원 응급구조사(2급) 양성기관 지정

□ 추진계획

- 함정 응급구조사 양성·배치 등 해상구급대 운영 활성화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응급구조사 자체 양성 교육을 통한 운영인력 확대
 - * 신임경찰관 대상 매년 120명의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실시, 국군의무학교 의무전경 연간 100명(20명, 5회) 위탁교육 실시
 - 현장에서의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점을 반영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전문가에 의한 현장점검 및 교육 실시

주관기관	해수부, 지자체, 항만공사	협업기관	-
------	----------------	------	---

가. 대형 해양사고 수습 및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인해 태풍·지진 등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동반한 재난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 「풍수해」·「지진」·「선박사고」·「해상테러」 등 재난유형별 본부, 지방청 및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추진계획

-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안전관리 선진화
 - 총리실·안행부 등과 재난대책기간별(여름철 5.15~10.15, 겨울철 12.1~익년 3.15) 취약시설물에 대한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 실시('14.5, 12)
- 재난안전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14.7)
- 자연재난 행동요령, 재난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해양수산 재난대책 업무편람 제작·배포('14.9, 지방청·어업관리단·지자체)

나. 지능형 구난기술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첨단기술의 구난기술 개발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 손상선체 응급조치 및 침몰선체 위치 예측 기술, 구난 자원을 위한 지능형 구난기술 개발 추진

* 연구 기관 / 기간 / 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3.9~'14.8 / 350백만원

다. 기관별 위기관리 체제 유지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각 기관별로 사고 유형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 매뉴얼 마련 필요
- 유관기관, 업·단체간 역할 분담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이 필수

☐ 추진계획

- 사고 초기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고대응 매뉴얼 개선 등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 · 지자체 · 공공기관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추진사항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인천청 ○ 가용자원에 대한 지원 등을 반영한 해양사고 위기대응매뉴얼의 체계적 관리 · 운영
	여수청 ○ 해양사고 예방 보고체계 상시 점검 · 교육(내부교육) - 관내 보유 예선, 방제선 구난구조선 및 동원인력현황 등 파악(연중) ○ 유관기관 및 업 · 단체 등 비상연락망 상시 관리(연중)
	마산청 ○ 유관기관, 업 · 단체 등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지(매년 1월중) ○ 주요 해양사고 발생시 민간 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 지자체와 연계한 해양사고 대응 훈련 시행시 적극 참여
	동해청 ○ 해양사고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최신화 관리 · 유지(연중)
	군산청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한 도상 · 실제 훈련 집행
	포항청 ○ 「대규모 해양사고 위기대응 현장매뉴얼」 보완 및 수정 ○ 비상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울산청 ○ 관내 사업장 소속 선박 육 · 해상종사자 비상연락망 정비(반기 1회) - 해상기상특보 등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사고예방활동 강화 ○ 해양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제 · 개정(필요시)
	목포청 ○ 해양사고 종류별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공제체제 유지
	대산청 ○ 해양사고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최신화 관리 · 유지(연중)

지 자 체	서울 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조치(6~10월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류량 증가 시 단계별 운항통제 및 대피계획 수립 및 추진 ○ 홍수 후 항로 안전점검 및 항로표지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 수심측정 및 항로 내 장애물 발견 시 즉시 제거 - 항로표지 관리 주체별 자체점검 및 위탁관리업체 지도·감독 ○ 수난사고 대비 도상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훈련 : 2회(3월, 10월),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훈련 <li style="padding-left: 40px;">*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자체훈련 - 합동훈련 : 10월, 선박사고 대비 민간합동훈련 <li style="padding-left: 40px;">*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민간업체 합동훈련 ○ 수난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난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개선정비 -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활용 체계적인 안전관리 -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SNS 활용기능 추가
	부산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대비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확립 ○ 유류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 시 수습대책반 편성운영 및 해양 오염사고 대응 방제장비·물품 및 방제인력 확보 ○ 해양사고 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사고에 대한 기록 유지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민간자율구조대 육성 및 지원 ○ 항·포구별 어촌계 대상 재해예방 방송시설 지원 지속 추진 ○ 항만시설 운영회사, 선사 및 항만종사업체 등과의 대응체계 구축
	경상 남도	<p>【 사천시,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정비 등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서, 항만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 역할 재정비
공공 기관	여수 광양 항만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최신화 유지·관리(연중) ○ 주기적인 비상연락망 정비 ○ 긴급 복구 및 대응을 위한 비상자원 확보 방안 수립 등

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선박관련 사업체, 선박 소유자 및 어업인 등 육·해상 분야의 민간자원 활용 필요

□ 추진계획

- 민·관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채널 다양화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 민·관 합동 결함선박 감시체제 운영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 지방해양항만청·지자체별 주요 추진계획 >

기관명		주요 내용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인천청	○ 구난업체, 예선, 도선사 등 지역 내 민·관 가용자원 일제 조사(반기 1회)
	여수청	○ 주요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 자원 활용위한 공조체제 유지 - (충돌·좌초) 예방지원을 위한 가용 예인선 확보 및 지원 - (오염)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환경관리공단 방제정 운영 지원
	마산청	○ 주요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동해청	○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군산청	○ 해양사고 확산 방지 및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협조체제 구축 - 해양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상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 항만공사 작업선 등에 대한 비상연락망 유지 및 확인점검 실시
	포항청	○ 해양사고 발생 시(크루즈 선 등) 동원 민간자원 현황조사(연중) - 관내 보유 예인선, 방제선, 구난구조선 및 동원인력현황 등 파악
	평택청	○ 평택 당진항 민관합동 결함선박 감시체제 운영 - (신고자) 도선선, 예인선, 통선 및 순찰선 등에 종사중인 선원, 항만용역업 관련자 등 모든 국민 - (신고대상) 국적선 포함, 모든 입·출항 및 정박선박의 결함 의심사항

지 자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결함 의심사항을 선원해사안전과에 신고, 선박검사관은 신고 접수 후 승선 점검 실시 - (시행기간) '14. 1. 1 ~ 12. 31(상시) ○ 항만종사자 및 대국민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결함선박 감시체제 구축·운영에 대한 대국민 홍보 ○ 결함선박 우수 신고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연말)
	울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결함선박감시체제 운영(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종사자 등의 취약선박 조기 발견으로 사고요인 사전 차단
	목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자원 활용을 위한 가용자원 조사 및 매뉴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인선, 방제선 등의 선박 및 도선사·선박검사원 등
	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 어업무선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유기체제 구축 ○ 유관기관 및 업종별어업단체 종사자간 간담회 개최(년 2회) ○ 어항시설(방파제) 안전가드라인 설치로 안전사고 미연방지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발생 시 수협, 어촌계 등 민간자원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민간자율구조대 육성 및 지원 ○ 항, 포구별 어촌계 대상 재해예방 방송시설 지원 ○ 항만시설 운영사, 선사, 항만종사업체 등을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비상연락망 유지
	충청남도 (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취약해역 사고발생 시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 오염사고 사전대비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유관 업·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해양오염방지 지도단속 강화 - (대비) 방제대책 수립 및 방제지원 협조체제 유지 - (대응) 방제인력·자재 최대 활용으로 신속한 방제실시 - (복구) 사고종료 후 사후관리 대책 강구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해양사고 위기대응 현장매뉴얼」 계획수립 및 시행 ○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자원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사전조사(연중) ○ 비상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업·단체 비상연락망 최신화
	경상남도	<p>【 사천시 / 고성군 / 하동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인선 및 구난업체 등 활용자원 현황파악 및 관내 항만시설 운영사, 예선사 등 민간 자율 대응체제 마련 - 해양사고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반기별 1회)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
------	-----------------------	------	---

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해양경찰청)

☐ 추진현황

-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응 절차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고로 인한 인명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

☐ 추진계획

- 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가·지역방제계획 개정 추진
 -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국가방제체제 상의 기관별 역할과 임무 재조정 및 방제종료 기준 등을 반영한 국가긴급방제계획 개정
 - 보령해경서 신설에 따른 계획 신규 수립 및 방제자원관리 분야 신설 등 지역방제실행계획 개정

나. 해양·해안 방제장비 보강(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 현황 및 문제점

- 보유 방제장비 노후에 따른 대체 확보 시급 및 방제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방제지원을 위한 장비 확보 미흡

* '13년말 기준 방제기자재 노후율 60.3% 수준(해양환경관리공단)

□ 추진계획

- 해상기름 회수 목표량 증대를 위한 장비 보강 및 물품 비축(해경청)
 - 중·소형 방제정 2척(노후대체1, 신조1) 건조·배치
 - 비치크리너 등 해안 방제장비 보강 및 노후 유회수기 교체
 -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소모성 방제자재 구매·비축(비축기지)
- 사고 빈발 항만 우심지역 순찰서비스를 통한 집중 관리(해양환경관리공단)
 - 신규 방제선 2척을 건조하고, 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부산·마산)으로 방제장비 효율적 운영

다. 과학적 방제지원시스템 구축(해양경찰청)

☐ 현황 및 문제점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시 해안특성에 따른 방제기술 부족 및 해안 오염평가방법 부재로 이해당사자간 불신 및 갈등 초래

☐ 추진계획

- 신속한 해안오염평가와 방제전략 수립을 위해 방제자원 현황, 권장방제기술, 방제종료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과학적 방제실행
 - 태안·군산해안별 방제 특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해경·지자체·해양환경관리공단 합동 해안방제 교육·훈련 실시

라. 해역별 오염사고 위험도 평가(해양환경관리공단)

☐ 배경 및 필요성

- 신조 방제선 확충에 따라 해역별 적정 방제세력과 지원체계 재검토 필요
-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 방제시스템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해양오염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 조치를 위한 방제장비 적정 재배치 방안 마련·시행
- 해수부, 해경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통합방제지휘 통신체계 및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마. 유류오염사고시 피해자 신속보상을 위한 제도개선(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 유류오염피해보상에 사례집 발간 및 국제기금 손해보상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 도입 추진 중

☐ 추진계획

- 유류오염손해 발생시 피해민 보호를 위해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권과 지급이행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국제기금 협약의 보상금 청구 소멸시한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
-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에 대한 즉각적 대응 지원을 위한 유류 오염 피해보상 사례집 발간 및 보상매뉴얼 정비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
------	-----------------------	------	---

가. 위험·유해물질(HNS) 위기관리 점검 체제 정비(해양경찰청)

☐ 추진현황

- HNS* 물질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과 육·해상 간의 사고대응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사고대응 관련 업무의 체계화 추진 중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 추진계획

- HNS 사고시 신속·효율적 현장 대응이 가능한 현장 실행 능력 및 관련 기관간 공조 강화
 - 항만·물질별 전문가 DB(연락처 등) 최신화 및 간담회 등 개최
 - 국립환경과학원 등 MOU체결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 환경부와 육·해상 HNS 사고대응 협업 강화
 - 해상양사고 시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이용 협력
 - 울산 등 합동방재센터와 해양 인접시설 HNS 사고 공동대응
 - 화학물질 유출 사고사례 분석 및 물동량 등 관련 자료 공유

나. HNS 사고대응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해양경찰청)

□ 추진현황

- 모바일 폰 이용 추세 확산에 따른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HNS 사고대응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12년)

※ 해양오염 대응정보시스템(MAMIS : Marine Accident response Mobile Information System)

- HNS 사고대응 관련자 및 국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HNS 물질정보, 사고대응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로 접근·이용 토록 하여 신속·효율적으로 사고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사용 가능)

□ 추진계획

- HNS 사고시 신속·효율적 현장 대응이 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
 - 해양오염 대응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정보 업데이트 추진
 - HNS 대응정보 갱신 및 신규장비 사용방법 등 재등록

다. HNS 사고대응요원 양성(해양경찰청)

□ 추진현황

- HNS 사고 발생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 및 위탁교육 실시로 사고 현장 실행력 확보
 - 국외교육(4회 9명), 국내교육(43회 518명), 민·관합동훈련(95회) 실시

□ 추진계획

- HNS 사고시 신속·효율적 현장 대응이 가능한 전문요원 양성
 - “해양오염 방제대응 경진대회” 개최 및 대응요원의 사고수습 역량 평가를 통한 사고대응 전문성 향상 유도
- HNS 방제훈련을 통한 현장실행력 강화
 - HNS 사고대응 민·관 합동훈련 및 해경서별 자체 대응 훈련
- 자체·위탁교육 실시를 통한 사고대응 전문성 확보
 - 해양경찰학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 교육 실시

라. HNS 사고대응장비 추가 확보(해양경찰청)

□ 배경 및 필요성

- 울산, 여수 등 HNS 물동량이 많은 해역 중심의 장비 운영에서 전 해역으로 대상해역을 확대하여 해역별 사고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HNS 사고 대응에 유효·적절한 대응장비의 확보 및 운용
 - 보령해경서 신설에 따라 공기호흡기, 누출방지밴드 등 유해물질 대응장비 신규 확보
 - 신규 및 관리전환 기자재는 방제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운용실태 점검
 - 지방청 주관으로 장비관리 적정성 및 운용 능력 등 실태 점검

마. 국제협약(HNS협약) 발효대비 대응 강화(해양환경관리공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HNS 사고 증대 및 OPRC-HNS* 채택에 따라 HNS 국가/지역 방제실행계획 수립 요구

* 위험, 유해물질 오염사고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2000 의정서

- HNS 사고 대응 체계와 관련한 정보 부재 및 인식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능력의 한계 노출

☐ 추진계획

- HNS 방제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위기관리 점검체제 정비
- HNS 관련 항만별 중점관리 대응전략 및 대응방법 적극 홍보
- HNS 관련 실무자 및 전문방제 과정을 개설(해양환경개발교육원)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바. 위험·유해물질 사고대비 국제협약(HNS협약) 가입 추진(해양수산부)

□ 추진현황

- HNS 협약의 발효*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동향 파악 및 향후 가입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 발효요건 : 선복량 200만톤 이상 4개국을 포함한 12개국 이상 가입('14.1월 현재 덴마크, 독일 등 8개국 가입)

□ 추진계획

- 국내외의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HNS협약 가입 시기 조율 등 대응 추진
- '10.4월 HNS협약 의정서 개정에 동의한 일본·유럽 주요국의 추가비준 동향 및 협약 발효조건 충족여부 수시 확인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가. 보안사고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성장 및 무역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 입출항 선박이 증가하고 관광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따른 해상 유동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추진계획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운영('14.2)
 - 금년 개최 예정인 인천 아시안게임('14.9.9~10.14)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 및 업·단체 협력체계 구축
 - *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해군, 해경,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박검사기관 등

나. 선박보안평가심사기법 개발 및 보안심사관 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적선박에 대한 보안심사 및 보안관련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 선박 보안심사관의 역량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선박 보안심사 기본자격 및 재교육 실시('14.5)
 - 선박의 입출항, 하역작업, 선원과 여객의 승·하선 등 해상 경제 활동 관련 보안업무의 철저한 이행과 역량강화
- 선박 보안심사 및 보안교육 업무대행 실태점검('14.9)
 - 선박, 항만시설의 파괴, 납치, 밀항 등에 대비 항만 출입구, 갑문, 진입수로 봉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협업기관	-
------	-----	------	---

□ 현황 및 문제점

- 아덴만 함정호송 지원, 위험해역 운항선박 24시간 위치추적,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등 정부지원 대책 추진
 -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취약선박*에 보안요원 탑승 권고
- * 취약선박: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고, 수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선박
-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사고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추진계획

-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24시간 정밀 모니터링 감시체제 유지·강화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운영(연중)
 - 해적대응센터 설치·운영('14.하)으로 해운선사·선박에 대해 해적 사고 발생동향 및 예방대책 등 해적관련 정보 제공
- 선사·선박의 해적대응 역량제고 유도
 -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연 2~3회)하고, 선사 및 선박의 자구책 이행실태 현장점검('13.6)
 - 對해적 민·관·군 합동대책반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체제 공고화

일반 6-1 해양오염에 대한 민간 대응기반 강화

주관기관	해수부, 해경청 해양환경관리공단	협업기관	-
------	----------------------	------	---

가. 민간 방제세력과 협력체제 강화(해양경찰청)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42개 어촌계 자율방제대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어민은 농·어업에 종사하며 자율적인 활동 제약
- 방제업체, 구난업체, 급유업체 등 80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방제훈련에 동원 애로

□ 추진계획

- 자원봉사단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122 국민 방제대”로 개편하는 ‘122 국민 방제대’ 운영계획 수립
 - 방제기술 향상을 위해 방제대별 방제교육훈련 연1회 이상 실시
 - 활동실적이 우수한 “122 국민 방제대” 선정 포상 실시
- 오염사고 및 방제훈련 시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훈련 참여시켜 팀워크 향상 도모
- 지자체, 공단 등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 보유현황 DB 재정리

나. 자원봉사자 및 민간 방제업체 교육시스템 구축(해양환경관리공단)

□ 현황 및 문제점

- 해상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잔존유 처리 등에 있어 비전문가(행위자 또는 지자체)에 의한 초기대응 미흡으로 오염사고의 확산 우려
- 민간 방제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가 방제자원 확대 필요

□ 추진계획

- 주요 정유사 실무자(1회 이상) 및 유관기관 대상(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3회 이상) 전문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관리자과정 개설
 -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실습형 교육 실시
 - 방제경험이 우수한 퇴직 방제전문인력을 강사로 활용방안 강구
 - 향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교육이수자를 우선 방제작업에 투입
-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연계한 지역 어촌계 '방제대응단' 구성 추진

주관기관	해경청	협업기관	-
------	-----	------	---

가. 방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제교육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오염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제요원 전문교육 실시
 - 자체(교육원, 지방청) 및 관계기관 위탁, 전문교육 실시(13회 137명)

□ 추진계획

-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방제전문가 양성
 - 해양경찰교육원, 방제실무과정 및 HNS과정 등 4개 과정 교육
 - 방제비축기지, 방제장비운용기술과정 교육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형선박 오염대비대응과정 위탁교육
 - 국외 방제전문교육 위탁교육 추진

나. 민·관 합동 방제훈련 등 다양한 테마별 방제훈련 개발·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13년도 방제훈련 83회 실시

- 도상훈련 32회, 현장훈련 48회, 불시훈련 3회

□ 추진계획

○ 도상훈련, 현장훈련, 불시훈련 등 방제훈련 85회 실시

- (도상훈련) 오염사고평가와 확산예측을 통한 방제전략 수립 과 오염사고 상황처리 및 VIP 브리핑 등 방제대책본부 운영 훈련
- (현장훈련) 해상에 유출된 기름 확산방지·회수와 방제기자재 동원 및 해안기름 제거 등 해안방제합동훈련, HNS대응훈련
- (불시훈련) 사전예고 없이 시행하는 불시 방제훈련

일반 6-3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 행정지도 강화

주관기관	해경청	협업기관	-
------	-----	------	---

☐ 추진현황

- 법 개정에 따른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의 추가 수정사항에 대한 자체 변경 권고 및 출입검사 시 행정 지도로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해양시설별 대응 태세 구축

☐ 추진계획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기존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는 비치의무만 있고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개선

VI. 투자계획

□ '14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투자소요는 약 5,402억 원

- 해양수산부 3,983억 원(73.7%), 지방자치단체 844억 원(15.6%), 공공기관* 386억 원(7.1%), 해양경찰청 143억 원(2.6%), 기상청 46억 원(0.8%)

*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상교통 환경 구축에 전체 예산의 63.2% 소요

- '추진과제 1.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에 904억 원
- '추진과제 2. 선박 안전성 강화'에 500억 원
- '추진과제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에 264억 원
- '추진과제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에 3,419억 원
- '추진과제 5. 국제협력 강화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에 63억 원
- '추진과제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에 253억 원

< '14년도 사업별 투자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종사자 안전	선박 안전성	안전관리 시스템	해상교통 환경	국제협력 안전문화	비상대응 체계	합계
합계	90,398	49,985	26,412	341,857	6,318	25,262	540,232
(비중)	(16.7)	(9.3)	(4.9)	(63.2)	(1.2)	(4.7)	(100.0)
해양수산부	87,381	40,506	4,684	258,766	6,317	743	398,397
해양경찰청	0	0	2	5,923	0	8,332	14,257
기상청	0	0	0	4,584	0	0	4,584
지자체	2,717	8,959	21,176	51,539	0	0	84,391
공공기관	300	520	550	21,045	2	16,187	38,604

□ (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1-1. 인적오류 기인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내실화		50
가.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해양수산부	-
나. 해양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
다. 어업인 등 종사자에 대한 사고방지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50
라. 해양사고 관련자의 징계집행 유예 직무교육 시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중점 1-2. 선원 고용여건 개선		-
가. 선원 고용여건 개선	해양수산부	-
중점 1-3. 선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87,930
가. 선원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시설 확충	해양수산부	7,660
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시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00
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지자체	80,170
중점 1-4. 외국인 선원의 근로 여건 향상		-
가. 외국인선원 권익 보호	해양수산부	-
나. 외국인선원 고충 상담소 운영	해양수산부	-
중점 1-5. 어선원 안전조업 교육 강화		417
가. 어선원 안전교육의 내실화 추진	해양수산부, 지자체	417
중점 1-6 해사 전문인력 양성		2,001
가. 우수 해기사 양성 확대	해양수산부	1,701
나. 새로운 운항시스템 및 운항기술을 습득한 해기사 양성	해양수산연수원	300
다.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및 해외진출	해양수산부	-
일반 1-1.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 교육체계 확립		-
가.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 교육체계 확립	해양경찰청	-
합 계		90,398

□ (추진과제 2) 선박 안전성 강화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2-1. 중·소형 유조선 안전 제고		—
가. 화주·선사 간 협력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강화 유도	해양수산부	—
나. 내항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체화 유도	해양수산부	—
중점 2-2. 내항선·어선에 안전관련 항해장비 설치 확대		—
가. 내항선·어선에 안전관련 항해장비 설치 확대	해양수산부, 부산시	—
중점 2-3. 해양안전 기술개발 추진		19,000
가.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新 기술개발(R&D) 추진	해양수산부	18,800
나. 야간 충돌예방을 위한 예인줄 개발·보급	해양수산부	200
중점 2-4. 노후 선박의 안전검사 강화		27,903
가. 노후선박 및 어선에 대한 검사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
나. 선박검사품질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520
다. 노후기관 교체 및 노후어선 감척	해양수산부, 지자체	26,050
라. 어선 기관실 화재방지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	—
마.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및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지원	부산시, 강원도	1,333
중점 2-5. 선박검사제도 선진화		—
가. 선박용물건 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해양수산부	—
나. 레저선박(선체) 형식승인 시험기관 도입	해양수산부	—
중점 2-6. 안전취약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건조 자금 지원		1,650
가. 외항선사의 안전경영을 위한 금융기반 강화	해양수산부	—
나. 내항선박의 신조자금 지원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1,650
일반 2-1. 내항 취역선 현장 안전점검 강화		—
가. 내항 취역선 현장 안전점검 강화	해양수산부	—
일반 2-2.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200
가.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200
일반 2-3. 소형어선의 생존성 강화 [저체온증 방지]		960
가. 소형어선의 생존성 강화 (저체온증 방지)	해양수산부	960
일반 2-4.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가.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해양수산부	—
합 계		49,713

□ (추진과제 3)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3-1.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		—
가.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해양수산부	—
나. 사고 선사·선박 수시심사 실시	해양수산부	—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사 대형화·전문화		10
가. 안전관리대행사 대형화·전문화	해양수산부	10
중점 3-3. 내항 여객선 및 시운전 선박 안전운항 관리 강화		—
가.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시책 수립·시행	해양수산부	—
나. 신조 시운전 선박 안전관리 강화	지방해양항만청	—
중점 3-4. 관공선 안전관리 체계화		—
가. 관공선 안전관리 체계화	해양수산부	—
중점 3-5. 지자체 등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		20,526
가. 지자체 관할 항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	18,776
나. 해양사고방지 및 전문 연구기능 강화	선박안전기술공단	250
다.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안전기능 강화	해양수산부	1,500
중점 3-6. 국적선 안전관리 우수 국가 유지 및 항만국통제(PSC) 강화		46.9
가. 국적선의 국제 안전평가 우수등급 유지	해양수산부	43.5
나. 국내입항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해양수산부	1
다.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	해양수산부	2.4
중점 3-7.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
가.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고도화	해양수산부	—
일반 3-1. 선박검사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
가. 취약선박별 사고 관리체계 구축	선박안전기술공단	—
나. 어선·내항선의 사고 시 기술지원 체제 구축	선박안전기술공단	—
일반 3-2.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100
가.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 시행	해양수산부	100
일반 3-3. 민간 자율적인 출항운항 통제 강화		—
가. 민간 자율적인 출항·운항 통제 강화	해양수산부, 부산시	—
일반 3-4.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 강화		2,400
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추진	해경청	—
나.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해경청, 지자체	2,400
일반 3-5. 항만내 선박급유선 등의 자체안전관리체제 확립		6
가.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및 적정성 검토 규정 마련	해양수산부	—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나. 항만공사 시행사에 의한 해양안전관리 강화	지방해양항만청	6
일반 3-6. 다중이용 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2
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고도화	해양경찰청	-
나. 국제여객선 취락분야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
다.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	2
일반 3-7. 항로표지 관리체계 강화		3,021
가. 항로표지 시뮬레이터 시스템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
나. 부표류 관리체제 개선	해양수산부	3,021
일반 3-8. 경인아라뱃길 통항선박 관리 강화		300
가. 경인아라뱃길 안전운항 체계 마련	한국수자원공사	-
나. 아라뱃길 항로 개선 등 안전환경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
다. 안전한 아라뱃길 갑문 운영관리 도모	한국수자원공사	300
일반 3-9. 실효적 음주운항 예방·단속제도 마련		-
가. 실효적 음주운항 예방·단속제도 마련	해양수산부	-
합 계		26,411.9

□ (추진과제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4-1. 항만내 운항질서 관리 강화		14,904.7
가. 개항질서 중점관리 지침 수립·운영	해양수산부, 지자체	12,550.3
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개선	해양수산부	2,354.4
중점 4-2. 선박 통행 위해요소 발굴·개선		169,139
가. 선박교통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체제 구축	지자체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35,550
나. 장기 정박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지자체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560
다. 항로 수심 유지를 위한 투자 강화	지자체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133,029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 등 적기 제거		45,325
가. 항로상 불법어로 합동 단속 및 계도 강화	해양수산부, 지자체	4,930
나. 항행장애물 처리	지방해양항만청	-
다. 로프·폐그물 등 바다쓰레기 제거	해양수산부, 지자체	40,270
라. 침몰선·방치폐선 관리강화	해양수산부, 지자체	125
중점 4-4.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25,150
가.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해양수산부, 해경청, 부산시	25,150
중점 4-5. e-Nav 체계 해양안전정보시스템 구축		1,714
가. e-Navigation 대응체계 확보	해양수산부	954
나. e-Navigation전략 기반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양수산부	610
다. 해양안전 통합 모니터링 및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	150
중점 4-6. 미래형 표지정보 제공		44,057.5
가. 첨단 지상파 항법(e-Loran) 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	15,000
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지방해양항만청	100
다.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노후 항로표지시설 개량	해양수산부	28,957.5
중점 4-7. 정밀도 높은 해도 제작 보급		18,274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가. 연안 해역에 기본·정밀조사	국립해양조사원	12,500
나. 주요 항만해역에 대한 정밀수로측량	국립해양조사원	1,500
다. 국가어항 및 연안해역 대축척 해도 제작	국립해양조사원	3,995
라. 최신 항해안전정보 지속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279
일반 4-1.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개발 운영		3,300
가. 계류시설 개발시 선박·승하선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강화	해양수산부	-
나. 내항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해양수산부	3,300
일반 4-2. 해양기상 예보 정확성 향상		4,584
가. 연안 해역에 해양 이상현상 감시 체계 구축	기상청	450
나.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기상청	1,963
다. 해양기상관측 전용선박 운영	기상청	1,781
라. 해양기상 예측 신뢰성 증진 및 예보 신속 전달	기상청	390
일반 4-3. 어장표지 표준화		-
가. 어장표지 등의 표준화 추진	전라남도	-
나. 어장 경계구역 표지시설 설치	울산광역시	-
일반 4-4. 해수유동 모니터링 등 해양관측 시스템 확대		15,409
가. 실시간 해양관측 및 정보제공	국립해양조사원	15273
나. 실시간 해수유동 관측시스템 운영	항만공사	136
합 계		341,857.1

□ (추진과제 5) 국제협력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5-1.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능력 제고		9
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능력 제고	해양수산부	9
중점 5-2. 해사안전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533
가. IMO 국제기준 대응 역량 강화	해양수산부	500
나. 해사산업계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전파	해양수산부	3
다. 해운·조선·조선기자재 분야 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
라. '국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30
중점 5-3. 양·다자간 교류 및 기술협력 공고화		638
가.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	72
나. 해사안전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해양수산부	566
중점 5-4.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150
가.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과의 협력강화	해양수산부	-
나. 아시아해적방지협정(ReCAAP)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해양수산부	150
다. 선박위치정보(LRIT) 공유로 구조대응 협조체계 증진	해양수산부	-
라. 해운 업·단체에 해적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해양수산부	-
중점 5-5. 항로표지 국제 교류협력 확대		150
가. 항로표지 국제 교류협력 확대	해양수산부	150
중점 5-6. 해양·수산 관계자 해사안전 의식 제고		5
가. 해양·수산 관계자 해사안전 의식 제고	해양수산부	5
중점 5-7. 대국민 해사안전 생활화		4,483.4
가. 대국민 해사안전 생활화	해양수산부, 해경청 선박안전기술공단	4,483.4
일반 5-1. 해양사고 조사 심판 국제협력 강화		230
가.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5
나. 양자협력을 통한 조사협력 강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5
다.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의 이행력 확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0
일반 5-2.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추진		-
가.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추진	해양수산부	-
일반 5-3. 해양사고 백서 및 사고예방 지식 보급		120
가. 해양사고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20
합 계		6,318.4

□ (추진과제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중점 6-1.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5,424
가. 해상 수색·구조 장비 확충	해양경찰청	-
나. 민·관 수난구조 공조체계 강화	해양경찰청	494
다. 해양긴급전화 122 활성화 및 122구조대 직무훈련 강화	해양경찰청	3,737
라. 해양 응급의료체계 개선	해양경찰청	1,193
중점 6-2. 해양사고 위기관리체계 정비		-
가. 대형 해양사고 수습 및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계 정비	해양수산부	-
나. 지능형 구난기술 개발	해양수산부	-
다. 기관별 위기관리 체제 유지관리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항만공사	-
라.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
중점 6-3. 친환경적인 방제시스템 구축 및 방제역량 강화		18,510
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	해양경찰청	-
나. 해양·해안 방제장비 보강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17,008
다. 과학적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청	230
라. 해역별 오염사고 위험도 평가 및 방제지휘 시스템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1,252
마. 유류오염사고시 피해자 신속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20
중점 6-4.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체계 구축		211
가. 위험·유해물질(HNS) 위기관리 점검 체제 정비	해양경찰청	-
나.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해양경찰청	10
다.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요원 양성	해양경찰청	15
라.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대응장비 추가 확보	해양경찰청	150
마. 국제협약(HNS협약) 발효대비 대응 강화	해양환경관리공단	16
바. 위험·유해물질 사고 대비 국제협약(HNS협약) 가입 추진	해양수산부	20
중점 6-5. 선박 보안관리 강화		-
가. 보안사고 대응에 관한 위기관리체계 정비	해양수산부	-
나. 선박보안평가·심사기법 개발 및 보안심사관 역량 강화	해양수산부	-
중점 6-6. 해적대응체제 유지·강화		703
가. 해적대응체제 유지·강화	해양수산부	703
일반 6-1. 해양오염에 대한 민간 대응기반 강화		44

과제명	주관기관	소요예산
가. 민간 방제세력과 협력체제 강화	해양경찰청	30
나. 자원봉사자 및 민간 방제업체 교육시스템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	14
일반 6-2. 방제전문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 강화		370
가. 방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제교육 추진	해양경찰청	16
나. 민·관 합동 방제훈련 등 다양한 테마별 방제훈련 개발·시행	해양경찰청	354
일반 6-3. 해양시설 유류오염 대응체제 구축		—
가.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해양경찰청	—
합 계		25,262

[1] 한강 (서울특별시)

□ '13년 중 한강 수역에서 선박 사고는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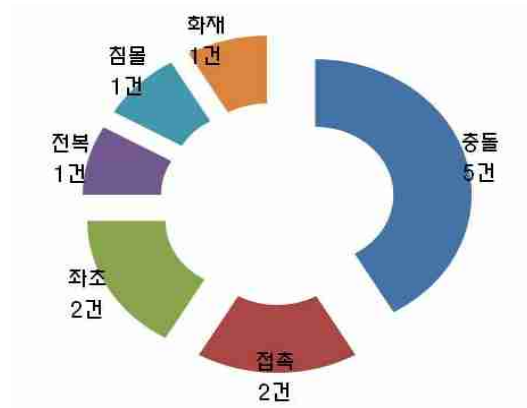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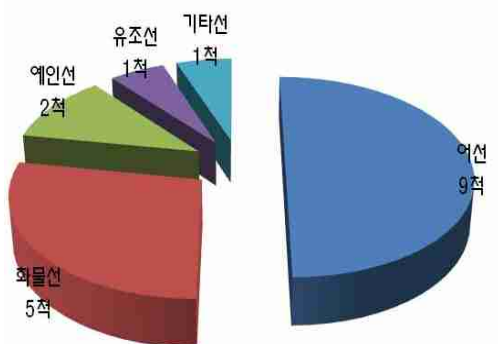
* (현황) 매년 1,365천명(유·도선, 수상레저 등 965천명, 수상레포츠 400천명이 한강에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이용

[2] 부산항 및 인근해역 (부산청, 부산시)

□ (총괄) '13.9월 기준 부산항과 인근해역에서 12건 발생(선박 18척 손상), 전년 대비 선박사고 1건(피해선박 5척) 감소

○ 선종별로 어선 9척, 일반선박 9척이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충돌이 5건으로 전체의 41.7% 차지

< 선종별, 사고별 현황 >



○ (사고원인) 75.0%(9건)가 운항자의 범규위반 또는 과실로 해상 종사자의 안전역량 부족에 기인

※ 승선원 인적과실 9건(75.0%), 기기결함 2건(16.7%), 시계불량 1건(8.3%)

- 이 가운데 6건(50%)이 항해당직 수칙 미준수 등 인적과실로 인하여 정박선, 낚시어선 및 부표 등 고정된 물체와 충돌 또는 접촉한 것으로 분석

< 부산항 생도 좌초선박 >



□ (부산남항) '13.9월까지 선박 계류 중 총 2건 발생

* 부산 남항(연안항) 항만시설 : 물양장 3개구(69,086㎡), 계선주 389개소

< 선종별, 사고별 현황(단위 : 척) >

구 분	합 계	어 선	외항선	항내운항선	기타선	비 고
2012	1	1	-	-	-	화재사고(1)
2013 9월	2	1	-	1	-	화재사고(1) 전복사고(1)

자료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 (관내 어선) 총 21건의 사고 발생(전년대비 1건 감소)

< 어선사고 발생률 및 원인(단위 : 건, %) >

구 분	해양사고율			발생원인			
	어선척수	해양사고	%	계	기상악화	선박불량	운항과실
2013	4,269	21	0.4	35	2 (9%)	6 (29%)	13 (62%)
2012	4,311	22	0.5	37	-	16(73%)	6 (27%)

※ '12년 전국 해양사고 454건 대비 부산의 해양사고는 22건(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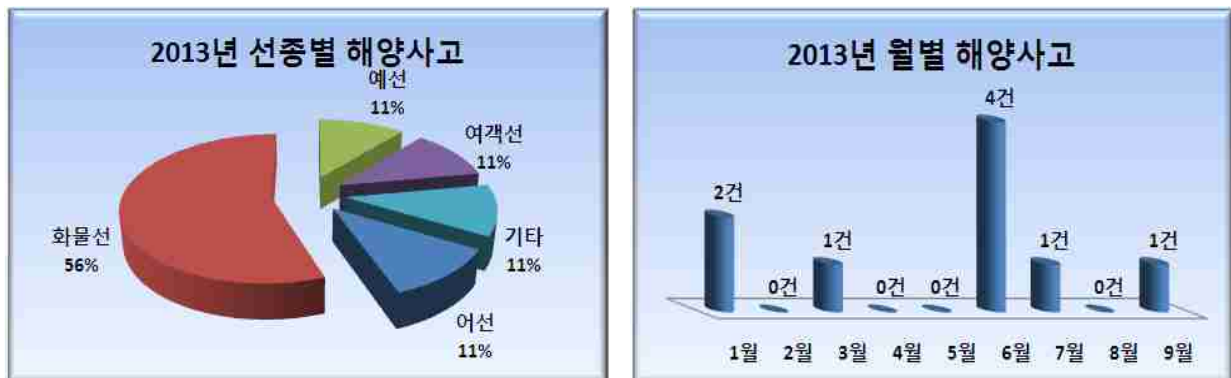
* 부산시 관내 총 50개(국가어항 3, 시 관리 13, 시군구 관리 34)의 어항 운영 중

[3] 인천항 및 인근 해역 [인천청, 인천시]

□ (선박) '13년 중 총 9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47% 감소

- 9건의 사고 중 일반화물선이 56%로 가장 많고 예선 2건으로 22%, 어선, 여객선 등이 각 1건으로 11%를 차지

< '13년 사고 현황 >



- 취약선박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와 한·중 합동점검을 통한 국제 여객선 안전수준 향상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

< '12년 / '13년 유형별 증감 현황 >

연도	총돌	기관손상	좌초	침몰	운항저해	인명사상	전복	접촉	기타	합계
증감(건)	△7	1	△2	-	-	1	-	1	△2	△8
2013	0	1	0	0	0	1	0	6	1	9
2012	7	0	2	0	0	0	0	5	3	17

□ (해수욕장) '13년 297건의 사고발생, 백사장내 안전사고가 97.0% 차지

< '13년 사고 현황 >

구분	합계	물놀이 사고 (이안류사고)	백사장 내 안전사고	수상레저기구 관련사고	해파리 등 유해생물 관련 사고	기타
사건사고(건)	297	8	288	-	1	
인명피해 (死/傷, 명)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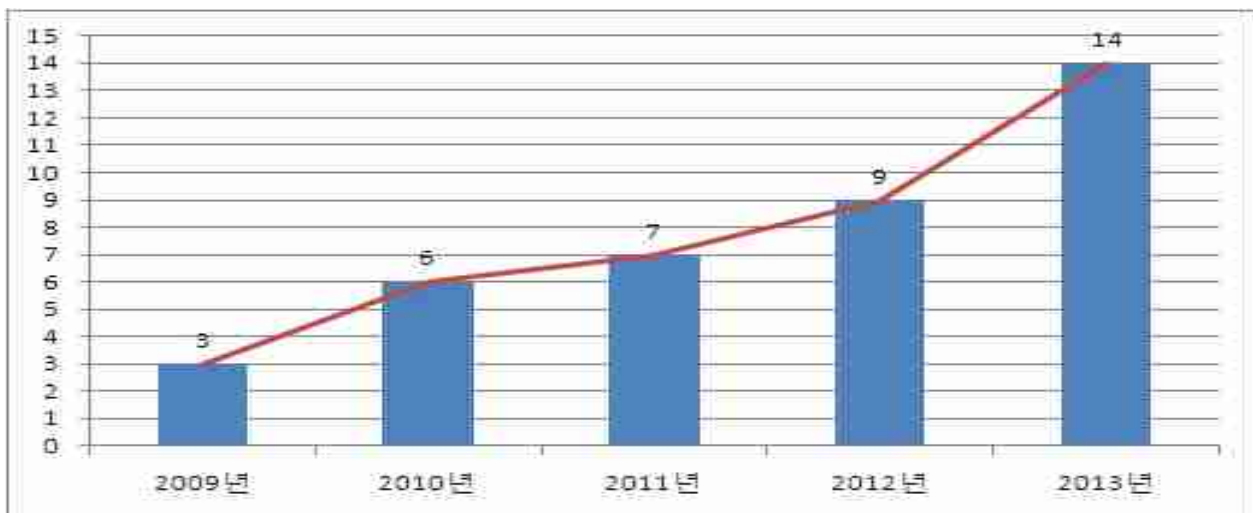
* 사고원인 : 수영미숙 (8건), 백사장내 찰과상(288건), 해파리관련(1건 9명 현장 조치) 안전의식 부족 및 현장 안전 지시 불이행

[4] 울산항 및 인근 해역 [울산청, 울산시]

□ (총괄) '13년 기준 14건 사고 발생(전년 대비 55.6% 증가)

- (계절별) '13년 가을철(9~11월) 저기압 세력 확장에 따라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에 의해 좌초·오염사고 5건(35.7%)이 연이어 발생

< 울산항 및 인근해역 사고 발생건수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선종별) 위험물운반선(10척) > 화물선(4척) > 어선(2척) 순으로 발생

< 울산항 및 인근해역 사고선박 종류 >

(단위 : 척)

구 분	어선	일반선박					계
		소계	위험물 운반선	화물선	여선	기타	
2009	1	4	3	1	-	-	5
2010	3	7	2	1	2	2	10
2011	-	10	5	4	1	-	10
2012	3	10	4	2	2	2	13
2013	2	16	10	4	-	2	18
합계 (비중)	9 (16.1%)	47 (83.9%)	24 (42.9%)	12 (21.4%)	5 (8.9%)	6 (10.7%)	56 (100%)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유형별) 충돌·좌초사고가 전체의 57.1%(8건) 차지하였고, 전체 사고의 대부분이 일반선박에서 발생(13건, 92.9%)

- 충돌·좌초사고(8건)중 62.5%(5건)가 정박지 등에서 돌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강한 조류에 의해 압류되어 발생

< 사고 유형별 증감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충돌	침몰	좌초	오염	인명사상	화재	기타	계
2009	2	-	-	-	-	-	1	3
2010	4	-	-	-	1	-	1	6
2011	3	-	-	1	2	1	-	7
2012	3	1	-	2	2	1	-	9
2013	4	-	4	2	1	2	1	14
합계	16	1	4	5	6	4	3	39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5] 평택 · 당진항 및 인근 경기 해역 (평택청, 경기도)

□ (총괄) '13년 3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6건) 50% 감소

- '13년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충돌사고이며, 이중 2건(67%)은 대기묘지 정박선 간 또는 정박선과 이동선박 간 충돌

<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08~'13)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좌초	1	-	-	-	-	-	1
충돌	-	1	-	1	-	3	5
침몰	-	-	1	-	-	-	1
해양오염	-	-	1	4	4	-	9
전복	-	-	-	1	1	-	2
접촉	-	-	-	1	1	-	2
인명사상	1	-	-	-	-	-	1
합계	2	1	2	7	6	3	21

- (선종별) 최근 5년간('08~'12) 발생한 17건의 사고 중 화물선이 35%(8척)로 가장 많고, 작업용 예부선, 여객선 등의 순으로 발생
- (사고원인) 최근 5년간('08~'12) 발생한 17건의 사고 중 인적결함이 67%, 설비결함이 19% 차지
- 특히 '13년 사고(총 3건) 중 2건이 입파도 정박지에서 발생하여, 입출항 선박의 증가에 따른 대기묘지 이용선박의 증가가 사고 발생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입출항선박 추이 : '09년 11,177척 → '11년 15,520척 → '13년 18,472척

< 사고원인별 발생 현황('08~'13.9월) >

(단위 : 건)

구분	설비결함	인적결함	기상이변	운항관리 부적절
2008	1	1	-	-
2009	-	-	1	-
2010	1	1	-	-
2011	1	6	-	-
2012	1	3	1	1
2013	-	3	-	-
합계	4	14	2	1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인근해역) '13년도는 2척의 어선에서 선내 안전사고와 충돌로 2명의 사망자 발생('12년 : 2척, 1명 사망)

< 주요 어선사고 내용>

선 명	톤 수	업 종	사고내용	인명피해
계	2건 발생 (2명 사망)			
대광호	7.93	연안저망	양망 작업 중 롤러에 가슴부분이 감김	사망 1명
금강호	9.16	낚시어선	레저보트와 충돌	사망 1명

[6] 동해항 등 강원도 해역 (동해청, 강원도)

- (총괄) '13년 강원지역의 5개 무역항(동해·묵호, 옥계, 삼척, 속초, 호산)과 인근해역에서 일반선박은 7건(7척), 어선은 21건(25척)사고 발생

< 최근 5년간 사고발생 현황 >

(단위 : 건, 척,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사고건수(일반선)	28(4)	25(8)	33(5)	43(9)	28(7)	157(33)
사고척수(일반선)	36(6)	30(8)	40(7)	50(12)	32(7)	188(40)
사망·실종	0	2	0	3	2	7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항만청 재구성, 2013.12.31. 기준)

- (유형별) 최근 5년간 사고 중 66%가 기관손상(31%), 충돌(29%), 좌초(6%)이며, 일반선박은 약 70%가 충돌, 접촉 및 좌초사고

< 유형별 사고 현황 >

(단위 : 척)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기관손상	9	3	16	17	13	58(31%)
충돌	12	10	13	11	8	54(29%)
좌초	5	1	0	4	2	12(6%)
화재	2	0	2	4	1	9(5%)
접촉	0	4	2	1	1	8(4%)
침몰	0	1	2	2	0	5(3%)
해양오염	0	2	0	1	2	5(3%)
전복	2	0	1	0	1	4(2%)
기타(인명사상, 조난 등)	6	9	4	10	4	33(17%)
계	36	30	40	50	32	188(100%)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항만청 재구성, 2013.12.31. 기준)

- (선종별) 최근 5년간 사고 선박 중 어선이 79%,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의 경우 예부선이 42% 차지

< 선박종류별 사고 현황 >

(단위 : 척)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어선	30	22	33	38	25	148(79%)
예부선	4	4	2	6	1	17(9%)
화물선	2	2	3	4	3	14(7%)
여객선	0	1	1	0	2	4(2%)
유조선	0	0	1	0	0	1(1%)
기타	0	1	0	2	1	4(2%)
계	36	30	40	50	32	188(100%)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항만청 재구성, 2013.12.31. 기준)

- (시기별) 조업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은 특정 시기에 상관없이 연중 발생

* 4월 기타통발어선, 연안자망어선 등, 10월 오징어 성어기

< 시기별 해양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강원지역	36	49	29	43	157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항만청 재구성, 2013.12.31. 기준)

- (사고원인) 항해, 기관정비점검 소홀(33.5%) 및 선원의 인적과실(경계 소홀, 항해관련 과실·위반)등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원인
 - 어선을 제외한 일반선박의 경우 경계소홀(40.0%), 조선부적절(12.5%)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

< 사고 원인별 현황 >

(단위 : 척)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항해, 기관정비점검 소홀	12	5	17	17	12	63(33.5%)
경계소홀	5	17	18	12	1	53(28.2%)
기타 항해관련 과실, 위반	3	0	0	6	10	19(10.1%)
선체,기관,설비노후	1	0	0	3	2	6(3.2%)
항해, 기관 기기 결함	2	0	0	3	1	6(3.2%)
황천대비, 대응 불량	3	3	0		0	6(3.2%)
조선 부적절	3	1	0		1	5(2.7%)
충돌회피동작 부적절	4	0	0	1	0	5(2.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0	3	0	2	0	5(2.7%)
기상이변	0	0	2	1	0	3(1.5%)
기타	3	1	3	5	5	17(9.0%)
계	36	30	40	50	32	188(100%)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항만청 재구성, 2013.12.31. 기준)

[7] 대산항 및 인근 충남 해역 (대산청, 충청남도)

□ (총괄) '13년 충청남도 지역의 4개 무역항(대산, 태안, 당진, 보령)에서 선박사고 2건(일반선박 4척) 발생

<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08~'13.12월)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좌초	-	-	-	-	-	-	-
충돌	-	-	-	-	-	-	-
전복	-	-	-	-	-	-	-
접촉	-	-	-	-	-	2	2
인명사상	-	-	-	-	-	-	-
합계	-	-	-	-	-	2	2

[8] 군산항 및 인근 전북 해역 (군산청, 전라북도)

가. 일반선박

□ (총괄) 전년 대비 35.3%(17→11건)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증가

* 운항부주의(항법 및 주의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 최근 5년간 사고 추이 >

연 도(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고건수(건)	2	3	8	17	11
사망·실종(명)	2	-	-	1	4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군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재구성)

○ (선종별) 예부선, 화물선(각 5건), 유조선(1건) 순으로 발생

* 사고선박(12척/어선제외) 중 외국적선 2척, 국적선10척 / 군산선적 선박은 2척

< 선종별 사고 현황 >

선 종	연도(년)	계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부선)	여객선	기타
사고선박(척)	2012	18	-	2	11	1	4
	2013	12	5	1	5	-	1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군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재구성)

○ (유형별) 충돌(4건), 좌초·조난(3건), 화재(2건), 인명사상(1건)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충돌사고 중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3건 발생

< 사고 발생 유형 >

사고유형	연도(년)	계	충돌	인명사상	화재	좌초/조난/침수	안전저해/기타
사고건수(건)	2012	17	3	1	2	7	4
	2013	11	4	1	2	3	1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군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재구성)

○ (계절별) 겨울철 사고가 가장 많은 가운데, 충돌·화재사고가 집중

< 계절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시기	겨울(12월~2월)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사고건수(건)	4	2	1	3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군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재구성)

○ (경향 및 원인) 예부선 및 소형선(100톤 미만) 사고가 많고(53.3%), 81.8%(9건)가 인적과실(부주의·관리소홀)로 발생

나. 어 선

□ (총괄) 전년대비 사고선박은 16.7%(36 → 42척) 증가, 사망·실종자는 10명(0 → 10명) 증가

< 연도별 사고척수 및 인명피해 >

(단위 : 척, 명)

구 분	2011	2012	2013	비 고
○ 해양사고(척)	75	36	42	
- 선체불량	23	6	6	
- 운항과실	27	4	8	
- 기상악화	3	3	2	
- 기 타	22	23	26	
○ 인명피해(명)	3	0	10	
- 사 망	1	0	0	
- 실 종	2	0	10	

[9] 목포항 등 인근 전남 해역 [여수청, 목포청, 전라남도]

가. 여수항 등 전남남해 해역

□ '13년도 27건 사고(3명 부상 2명 사망) 발생하였으며, '12년도 63건에서 57% 감소

○ (위치) 대부분이 항계 밖에서 발생(항계내 8건/항계밖 19건)

○ (유형별) 충돌, 해양오염사고가 전체 사고의 41%를 차지(11건)

(단위 : 건)

구분 계	충돌	해양오염	시설물 등 접촉	화재	조난· 침몰	기타
27건	6건 (22%)	5건 (19%)	2건 (7%)	4건 (15%)	4건 (15%)	6 (22%)

○ (규모별) 100톤 미만 선박에서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 차지

(단위 : 척)

구분 계	20톤 미만	2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38척	11척 (29%)	12척 (31%)	7척 (18%)	4척 (11%)	4척 (11%)

○ (선종별) 어선이 전체의 63%(24척) 차지하고, 일반선박에서는 14척 중 예부선과 화물선에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척)

구분 계	어선	일반선박			
		소계	예부선	화물선	유조선
38척	24척 (63%)	14척 (37%)	4척 (29%)	8척 (57%)	2척 (14%)

나. 목포항 등 전남 서남해역

□ (총괄) '13년 51건(64척)의 사고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52%(98건→51건) 감소

○ (유형별) 충돌이 13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사망·실종자 11명 발생

< 사고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	충돌	전복	침몰	화재	인명사상	좌초	기타
51건	13건 (25%)	7건 (14%)	1건 (2%)	4건 (8%)	3건 (6%)	7건 (14%)	16건 (31%)

○ (규모별) 100톤 미만 선박에서 사고가 전체 사고의 72% 차지

(단위 : 척)

구분 계	20톤 미만	2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64척	33척 (52%)	13척 (20%)	11척 (17%)	6척 (11%)	1척 (2%)

○ (선종별) 어선이 전체의 67% 차지

(단위 : 척)

구분 계	어선	예부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64척	43척 (67%)	7척 (11%)	6척 (9%)	6척 (9%)	2척 (3%)

[10] 포항항 및 인근 경북 해역 (포항청, 경상북도)

□ (총괄) '13년 37*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대비(44건) 16% 감소

* 사고해역 : 동해해역 중 위도 35도39분 부터 37도10분 내의 해역

○ (유형별) 충돌 12건, 기관손상 11건, 기타(화재, 침몰 등) 6건 순

< 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충돌	좌초	기관 손상	추진기· 키 손상	인명 사상	안전 저해	운항 저해	기타
평 균	57.2	14.4	2.8	20.6	0.8	2.6	7	1.2	7.8
점유율(%)	100	25.2	4.9	36.0	1.4	4.5	12.2	2.1	13.6
2013	37	12	3	11	1	2	2	0	6
2012	44	11	2	13	0	2	6	0	10
2011	60	17	3	17	0	5	9	0	9
2010	61	16	3	26	0	1	8	1	6
2009	84	16	3	36	3	3	10	5	8

출처 :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2013.12.31. 기준)

○ (선종별) 사고선박의 86%(32척)가 어선에서 발생

- 최근 5년간 기관사고가 45%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 선종별 사고 현황 >

(단위 : 척)

구 분	계	어 선	화물선	예·부선	여객선	유조선	기타
평 균	57.2	47	8.6	1.2	0	0.2	0.2
점유율(%)	100	82.5	15.0	2.0	0	0.3	0.3
2013	37	32	4	1	0	0	0
2012	44	23	19	1	0	0	1
2011	60	52	6	2	0	0	0
2010	61	50	8	2	0	1	0
2009	84	78	6	0	0	0	0

출처 :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2013.12.31. 기준)

○ (인명피해 사망·실종자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2→13명))

* (증가사유) 포항항(영일만항 북방파제 인근)에 정박한 중국선박(Cheng Lu 15)이 강풍에 방파제 접촉·좌초·침몰(10.15)되어 11명의 사망·실종자 발생

- 포항항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명('13.12월기준)으로 '09년(6명)이후 감소 추세

< 인명피해 발생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사 망	실 종	부 상
평 균	8.2	4.0	1.6	2.6
점유율(%)	100	48.8	19.5	31.7
2013	16	10	3	3
2012	2	2	0	0
2011	11	5	2	4
2010	6	2	1	3
2009	6	1	2	3

출처 :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2013.12.31. 기준)

< Cheng Lu 15 사고위치 및 사진 >



[11] 마산항 및 인근 경남 해역 (마산청, 경상남도)

□ (총괄) '13년 총 27건(38척), 인명피해는 총 37명(승객 경상 34명) 발생

○ 어선 사고의 소폭 증가로 사고는 전년대비 사고는 다소 증가

< 연도별 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척)

구 분	2012년	2013.9.30. 기준
사고 건수 / 척수	22건 / 37척	27건 / 38척
일반선박	26척	17척
어 선	11척	21척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유형별) 충돌이 전체사고의 44%, 좌초가 26% 차지

(단위 : 건)

구분	충돌	좌초	화재	기관 손상	기타
계					
27건	12건 (44%)	7건 (26%)	1건 (4%)	2건 (7%)	5건 (19%)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규모별)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전체 사고의 72%차지

(단위 : 척)

구분	20톤 미만	20톤 이상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계					
38척	15척 (40%)	12척 (32%)	7척 (18%)	2척 (5%)	2척 (5%)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선종별) 어선이 전체사고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일반선박 중 예부선과 유조선이 전체 사고의 37%를 차지

(단위 : 척)

계	구분	어선	일반선박			
			소계	예부선	유조선	여객선
38척		21척 (55%)	17척 (45%)	8척 (21%)	6척 (16%)	2척 (5%)
						1척 (3%)

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원인별) 항해당직자의 경계소홀과 안전수칙(항법) 미준수 등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약 90%를 차지

(단위 : 척)

계	구분	경계소홀	안전수칙(항법) 미준수	정비불량	기타
38척		18척 (47%)	16척 (42%)	3척 (8%)	1척 (3%)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2] 제주 인근 해역 (제주단, 제주특별자치도)

□ (총괄) '13년 제주 인근해역에서 114건(134척)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15% 감소

○ (유형별) 기관손상이 전체사고의 30%, 충돌이 17%를 차지

(단위 : 척)

구분 계	기관손상	충돌	침몰·좌초	화재	기타*
114	34	19	13	3	45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기타사고 : 조난, 추진기 손상, 선내 안전사고, 해양오염 등

○ (선종별) 어선이 전체사고의 약 84%를 차지

(단위 : 척)

구분 계	어선	일반선박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기타선
134	112	6	2	7	7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규모별)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전체사고의 약 89%를 차지

(단위 : 척)

구분 계	20톤 미만	20톤~ 100톤	100톤~ 500톤	500톤~ 1천톤	1천톤~ 5천톤	5천톤 이상
134	73	47	4	3	4	3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한강 (서울특별시)

□ (선박현황)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공용선박 등 19종의 947척*이 운항

- 수상 레포츠 산업의 발달과 해양레저에 대한 대중의 관심증가로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연간 수상 이용객 1,365천명)

* 영업용(유·도선 및 수상레저) 선박 : 452척
수상이용단체(비영리 협회·단체) 선박 : 412척
공용선박(서울시, 소방, 경찰, 해양경찰) : 83척

□ (선착장) 유·도선장 등 총 44개의 선착장이 운영 중

* 유선장 20, 도선장 11, 수상훈련 등 선착장 10, 기타 2

□ (교통안전) 선박과 교량간 충돌방지를 위해 19개 주요 교량에 주·야간 항로표지 222개(야간표지등 108개, 주간표지 114개) 운영

[2] 부산항 및 인근해역 (부산청, 부산시)

- (부산항) '13년 입항척수는 전년대비 0.8%(258척)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부산항 입출항 선박수 >

(단위 : 척)

구분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증감율(%)
			년간	8월	8월	
합계		49,997	50,437	32,854	33,112	+0.8
내 항		22,054	22,101	13,994	14,229	+1.7
외 항	국적선	7,966	8,476	5,611	5,874	+4.7
	외국적선	19,977	19,860	13,249	13,009	-1.8

출처 : 부산항만공사

○ 부산남항의 경우 계류선박수는 '12년과 유사한 수준

- 다만, 연근해 어선은 감소한 반면 항내운항선이 증가('10년 92척 → '13년 120척)하고 있어 항내 선박사고 위험성 고조

< 부산남항 계류선박 >

(단위 : 척)

구분 연도	총계	외항선	연근해어선	항내운항선	기타선	전년대비 증감률(%)
2010	428	16	212	92	108	
2011	387	16	154	90	127	-10.5
2012	420	14	168	127	111	+7.8
2013	421	14	161	120	126	+0.3

출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 (어선) 부산 관내 어선은 4,269척*으로 5톤미만 소형어선(3,337척)이 전체어선의 78%를 차지하며, 20년 이상 노후어선(911척)이 21% 차지

* 어선등록 척수 : '11년 4,373척 → '12년 4,311척 → '13년 4,269척

- 소형어선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톤급별 척수 >

구 분	계	1톤 미만	1~5톤 미만	5~10톤 미만	10~100톤 미만	100톤 이상
계	4,269	1,248	2,089	118	181	633

< 선령별 척수 >

구 분	계	5년 이하	6 ~ 10년 이하	11 ~ 15년 이하	16 ~ 20년 이하	21 ~ 25년 이하	26 ~ 30년 이하	31년 이상
계	4,269	390	872	971	1,125	386	204	321

< 어업허가 건수 >

계	근 해 어 업						연안어업
	소계	트롤	저인망	선망	채낚기	기타	
2,795	254	46	36	24	60	88	2,541

[3] 인천항 및 인근 해역 [인천청, 인천시]

□ (인천항) 인천 신항개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입항 화물선의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초대형 크루즈여객선의 입항 증가가 예상

○ 입출항 항로 폭(500~1,000m)이 좁고 길며(동수도 약 26마일, 서수도 30마일), 활발한 어로행위*, 연 50일 이상의 안개발생, 갑문·연육교 통과 등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

* 동수도 항로 부근의 승봉도, 영흥도에 어류 등 20여개의 어업면허구역이 있고, 서수도 항로가 있는 무의도, 소이작도, 덕적도 부근에 패류양식 등 20여개의 어업권이 형성되어 있는 등 입출항 항로에 다수의 어선이 운항 중

< 인천항 선박 입출항 현황 >

(단위 : 척)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입항	출항	입항	출항	입항	출항	입항	출항
합계	21,318	21,245	19,514	19,517	17,588	17,572	17,514	17,519
외항	9,014	9,029	8,356	8,411	7,867	7,921	7,893	7,908
내항	12,304	12,216	11,158	11,106	9,721	9,651	9,621	9,611

□ (어선·어항) 51개 어항에서 1,920척(동력 1,893, 무동력 27척)의 어선이 빈번하게 운항

< 인천시 어항갯수 >

(단위 : 개)

종별 \ 군구	계	중구	서구	강화	옹진
계	51	7	1	14	29
국 가 어 항	5			1	4
지 방 어 항	15	2		6	7
어촌정주어항	31	5	1	7	18

< 인천시 등록어선 현황 >

(단위 : 척)

구 분	합 계	군 · 구	강화	옹진	비고
척	1,920	1,000	410	510	
동 력	1,893	999	384	510	
무동력	27	1	26	-	

□ (해수욕장) 인천시 관내 총 31개의 해수욕장 운영,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필요

< 인천관내 해수욕장 현황 >

(단위 : 개)

계	중 구	강화군	옹진군	비 고
31	5	2	24	

< 인천관내 해수욕장 안전인력 및 장비 비치현황 >

(단위 : 명, 개)

구 분	인력(명)			시설 및 장비(개)				
	지자체직원	안전요원	육경,해경, 119구조대	샤워장	화장실	감시탑	고무보트	구명환(구명외)
계	54	130	201	28	69	23	21	127 (121)

[4] 울산항 및 인근 해역 [울산청, 울산시]

□ (울산항) '10년 이후 위험화물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80%가 위험화물로 위험물 운반선에 의한 사고와 이에 따른 해양 환경 오염 위험이 높음

○ (물동량)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과 석유정제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주력 화물인 위험화물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물동량 처리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총 물동량	위험화물	일반화물	위험화물 비중
2010	171,663	135,467	36,196	78.9
2011 (증감률)	193,752 (△12.9)	155,489 (△14.8)	38,263 (△5.7)	80.3
2012 (증감률)	196,972 (△1.7)	157,929 (△1.6)	39,043 (△2.0)	80.1
2013 (1~11월)	174,091	140,020	34,071	80.4

출처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시스템(SP-IDC)

○ (선박입출항) 위험물운반선 입항 증가로 대형사고 위험성 잠재

- 전년 동기 대비 입항 선박 수는 비슷하나, 원유운반선·위험물 운반선의 입항 척수는 5.0% 이상 증가(타 선종은 감소)

< 선종별 입출항 현황 >

(단위 : 척)

구 분	일반화물	자동차	원유(VLCC)	위험물	컨테이너	기타	계
2010	3,933	693	409	14,970	1,685	3,742	25,432
2011	3,848	752	497	15,152	1,751	3,828	25,828
2012	3,468	809	562	14,995	1,752	3,597	25,183
2013(1~11월)	2,787	678	539	14,335	1,675	2,802	22,816
계	14,036	2,932	2,007	59,452	6,863	13,969	99,259
구성비	14.1%	3.0%	2.0%	59.9%	7.0%	14.0%	100%

출처: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시스템(SP-IDC)

- 특히 울산항내 조선소(2개사)의 수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블록운반과 시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13년 상반기 수주량(전 선종) : 95척(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 오일허브 구축사업*, 북방파제·신항 항만배후단지 축조 등으로 공사작업선(준설선 등)이 산재한 등 교통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액체화물 물동량을 '10년 대비 2.2배 증대 예정(3억톤, '30년까지)

□ (어선·어항) 1,255척의 어선이 28개 어항을 중심으로 어로작업에 종사

- 연안어선의 기관, 장비가 노후화 됨에 따라 기관고장 등 이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울산시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

구 분		단위	구 · 군별				
			계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어 선 수		척/톤	1,255/4,608	155/378	184/2,163	190/757	726/1,310
추진력	동력선	"	878/4,038	57/240	184/2,163	187/750	450/885
	무동력선	"	377/570	98/138	-	3/7	276/425
선 질 별	목 선	척/톤	442/635	98/138	5/4	47/49	292/444
	FRP선	"	794/2,930	57/240	161/1,116	143/708	434/866
	강 선	"	19/1,043	-	19/1,043	-	-
어업허가		건	1,390	76	266	283	765
연 안		"	1,296	65	227	244	760
근 해		"	94	11	39	39	5

< 울산시 관내 어항현황 >

항 종 별	항수	관리청	항 명	비고
계	28			
국가어항	2	시	방어진, 정자항	
지방어항	4	시	나사, 신암, 주전, 당사항	
어촌정주어항	9	구·군	북구 4 울주군 5개소	
소규모어항	13	구.군	동구 7, 북구4, 울주군2	

- 불법어업 지도 · 단속 공무원(총 5명, 시1, 구·군4)과 어업지도선은 2척(17톤, 3톤급)에 불과하며,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인력은 전무한 상태

보유기관	계	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인 원	5	1	1	1	1	1
척 수	2	2				

- (해상기상) 지리적 위치상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의 우측반원(위험반원)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약 2.5년에 1개씩 최대순간풍속 20.0m/s 이상의 태풍이 내습(1959~2009년까지 51년간 19개 태풍 내습)

- 사전 피항 조치 등 태풍 내습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

[5] 평택 · 당진항 및 인근 경기 해역 (평택청, 경기도)

□ (평택당진항) 총 51개 선석이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08~'12) 항만 물동량은 연평균 4.5%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음

* 동 기간 전국 항만물동량 연평균 증가율은 4.1%임

< 항만물동량 현황 >

(단위 : 백만톤, 증가율)

구분	합계	외항화물	내항화물	비고
2008	50,724	44,798	5,926	
2009	51,319	46,288	5,031	595(1.1%)
2010	76,681	68,881	7,800	25362(49.4%)
2011	95,632	86,007	9,625	18951(24.7%)
2012	100,712	92,852	7,860	5080(5.3%)
2013. 9.(현재)	109,206	99,696	9,510	849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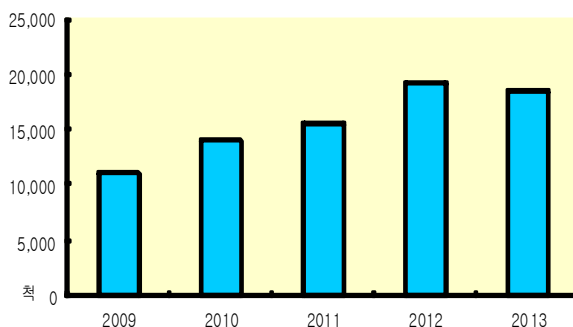
○ (선박 입출항) 입출항 선박수는 전년대비('12년, 19,243척) 4.1% (771척) 감소했으나, 총톤수는 2.4%가 증가하는 등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

< 선박입출항 현황(총톤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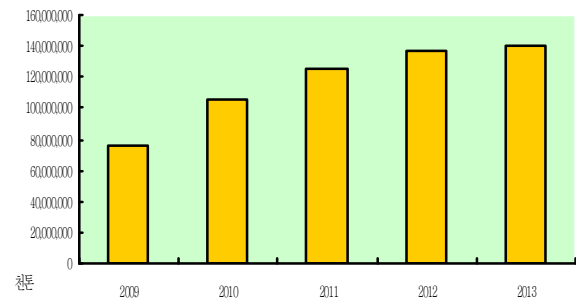
(단위 : 천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75,704	104,903	126,157	137,097	140,434

선박입출항 현황(선박 척수)



선박입출항 현황(총톤수)



- 평택당진항 중앙항로와 항로 1구역 준설공사 등 항내 준설작업으로 항로 내 준설선 및 작업용 부표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 입파도정박지 내 일부 수역에 불법어구가 빈번히 설치되어 어구와 닻·프로펠러 간 엉킴과 이로 인한 사고 개연성 잠재
- 또한, 경기도내 유인도를 연결하는 다수의 도선이 운항하고 있어 도선선의 사고방지가 대단히 중요한 상태

< 유인도 및 여객도선 운항 현황 >

유인도 (5개소)	가구 (호)	인구 (명)	면적	거 리 (전곡항 →)	여 객 도 선			생 활
					선 명(운항로선)	톤수	운항 회수	
계	480	890	3.90km ²					
풍 도	70	118	1.51km ²	26km	서해누리호 인천↔방아머리항↔풍도·육도	106톤	1회	인천
육 도	23	34	0.31km ²	21km				
국화도	43	70	0.18km ²	21km	국화훼리호(장고↔국화) 서해도선(궁평↔국화↔입파) 경기도선(전곡↔입파)	22톤	3회	당진 화성
입파도	11	13	0.45km ²	15km		29톤	3회	
제부도	333	655	1.44km ²	-	육로이용 (신비의 바닷길)			화성

□ (레저시설)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전곡항 마리너 시설확대(123선석 → 210선석)로 인해 레저선박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

□ (어선·어항) 경기도내 1,017척(안산 153, 평택 41, 시흥 191, 화성 541, 김포 91)의 어선이 운항

* 근해어업허가 10건, 연안어업허가 1,264건, 양식어업 232건 6,810ha

< 경기도내 어선등록 현황 >

(단위 : 척)

시군별	계	1톤 미만	1~5톤	5~10톤	10톤 이상
합 계	1,017	154	694	164	5
안산시	153	18	103	32	-
평택시	41	2	37	2	-
시흥시	191	22	154	15	-
화성시	541	104	369	65	3
김포시	91	8	31	50	2

□ (해상기상) 연중 맑은 날이 83.6일, 흐린 날이 104.9일, 안개가 낀 날이 39.3일, 강수일수가 30.8일로 봄·가을에 안개가 많이 발생

○ 기상특보는 '13.9월말 기준 60건으로 전년대비('12.9월까지 81건, 태풍경보 5건, 풍랑경보 14건 등) 25% 감소

□ (해수욕장) 경기도내 총 5개 운영(비지정) 중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

* 안산 2개소(방아머리, 구봉도), 화성 3개소(제부도, 국화도, 궁평리)

[6] 동해항 등 강원도 해역 (동해청, 강원도)

- (무역항) '13년 강원도 5개 무역항*의 물동량과 입출항 선박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무역항 : 동해·묵호항, 옥계항, 삼척항, 속초항, 호산항

- '14년 호산항의 LNG생산기지 운영시 대형 LNG 운반선의 운항과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5년간 무역항 선박교통량 및 물동량 현황 >

(단위 : 척,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선박(상선)	7,259척	6,452척	6,262척	6,167척	6,249척
전년대비	△4.3%	△11.1%	△2.9%	△1.5%	1.3%
총물동량	37,981천톤	41,284천톤	45,098천톤	43,399천톤	43,630천톤
전년대비	△5.5%	8.7%	9.2%	△3.8%	0.5%

출처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13년말 기준)

- (여객수송) '13.12월말기준 연안·국제 여객선의 활발한 운항으로 강원지역의 여객수송 실적도 전년대비 8% 증가하고 있으며

- '14년 삼척/울릉(현포), 묵호/울릉(저동)/독도 항로에 여객선(2척)이 추가 투입될 경우 수송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운항 여객선 척수 : '12년 5척 → '13년 4척 → '14년 6척(예상)

<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연안·국제 여객수송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89,939	382,123	553,510	617,396	665,701
여객선	연안	343,615	321,959	508,238	568,652
	국제	46,324	60,164	45,272	48,744
전년대비	11.2%	△2.0%	44.9%	11.5%	8%

출처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13년말 기준)

< 국제·연안 여객선 운항 현황 >

구 분	선박명(총톤수)	항로
국제여객선	이스턴드림호(11,478톤)	동해/ 블라디보스톡, 동해/ 사카미나토
	뉴블루오션호(16,485톤)	속초/ 자루비노, 속초/ 블라디보스톡
연안여객선	썬플라워2호(4,599톤)	묵호/ 울릉(도동)
	씨플라워호(584톤)	묵호/ 울릉(사동)/ 독도
	씨스타1호(388톤)	강릉/ 울릉(저동)/ 독도
	씨스타3호(550톤)	강릉/ 울릉(저동)/ 독도

출처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2013.12.31. 기준)

- 유·도선은 과거 노후된 다수의 소형선박을 운영하는 형태에서 최근에는 소수의 대형선박을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 '10년/ 12척 → '11년/ 9척 → '12년/ 10척 → '13년/ 9척

- 지역별로 관광객 수요에 따라 울릉도 유도선 이용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안을 운항하는 이용객은 감소 전망

< 최근 4년간 강원, 경북지역 유도선 이용객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계	614,225	597,114	481,790	481,548
유선	259,793	272,673	218,166	190,233
도선	354,432	324,441	263,624	291,315
전년대비	-	△2.8%	△19.3%	△0.05%

출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13년말 기준)

- (해양레저) 주 5일제 근무정착과 수상레저에 대한 관심 증가로 레저 기구 등록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

<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수상레저기구 등록 현황 >

(단위 : 척)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742	767	827	908	1008
모터보트	496	516	552	607	660
고무보트	53	53	58	64	77
수상오토바이	193	198	216	229	258
동력요트	0	0	1	9	13
전년대비	-	3.4%	7.8%	9.8%	11%

출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13.9.30. 기준)

<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수상레저 활동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50,613	242,803	165,819	110,360	135,168
전년대비	△35.7%	61.2%	△31.7%	△33.4%	22.4%

출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13.9.30. 기준)

- (해상기상)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강원지역에 발효되는 기상특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출항통제도 증가하고 있어 기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철저한 대비 필요

< 최근 5년간 '동해중부' 기상특보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64	79	75	100	89
풍랑	주의보	55	68	79	81
	경보	9	8	7	7
태풍	주의보	0	2	13	1
	경보	0	1	1	0

출처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해상교통관제센터), '13년말 기준

< 최근 5년간 관할 구역 내 선박출항 통제 건수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통제 건수	2	10	13	8	22

출처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해상교통관제센터), '13년말 기준

□ (해수욕장) '08~'12년까지 감소하다 '13년 증가('12년 19,256천명 → '13년 25,671천명/전년대비 33%증)

- '14년 피서객도 '13년과 유사한 수준(25백만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해수욕장에서의 지속적 물놀이 안전관리 필요

<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이용객 수 >

(단위 : 천명, 천대))

구 분	피서객	전년대비	차 량	전년대비(%)
2013	25,671	33.3%	3,704	31.1%
2012	19,256	△13.4%	2,826	△11.8%
2011	22,233	△24.3%	3,208	△22.7%
2010	29,368	9.2	4,148	32.1
2009	26,902	△11.3%	3,141	△20.6%
2008	30,329	6.2	3,958	△25.6%

출처 :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 여름해변운영결과 (2013.8.30. 기준)

(7) 대산항 및 인근 충남 해역 (대산청, 충청남도)

□ 충남에는 2개의 국가관리 무역항과 2개의 지방관리 무역항이 운영

* 무역항 : 대산항(국가관리무역항), 당진항(국가관리무역항),
태안항(지방관리무역항), 보령항(지방관리무역항)

- 대산항 인근 장안서 해역은 인천항, 평택·당진항 및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밀집하는 교통요충지임에 따라 충돌 등 사고
위험성이 상존함
- 당진항, 태안항, 보령항은 각각 인근 화력발전소에 유연탄을 운송
하기 위해 조성된 항만으로 대형 광탄선의 입출항이 빈번하나,
 - 방파제가 없고, 조류가 강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잠재
 - 특히 보령항은 '17년 LNG 터미널 항만시설(2선석) 증설시 82천톤급
LNG 운반선의 운항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 필요

[8] 군산항 및 인근 전북 해역 (군산청, 전라북도)

- (군산항) 군산·장항항의 주력화물인 '차량(부품), 고철 등'의 수출 화물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곡물·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
- 이에 따라 입·출항 선박의 규모는 다소 줄었으나(전년대비 7% 감소) 선박 숫자는 전년 대비 4% 증가했으며, 중소형 연안선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항만물동량 현황 >

(단위 : 천톤)

구 분	2012	2013년	전년 대비(%)
계	18,745	18,591	99.2
수 출	4,610	3,369	73.1
수 입	10,137	10,434	102.9
연 안	3,998	4,788	119.8

< 선박 입출항 현황 >

(단위 : 척, 천톤)

구 분	척 수			톤 수		
	2012	2013	전년동기 대비(%)	2012	2013	전년동기 대비(%)
계	4,052	4,195	104	44,034	41,253	93.7
외항선	1,956	1,847	93	39,451	35,832	90.8
연안선	2,096	2,348	117	4,583	5,421	118.3

- (어업현황) 지속적인 어선감척으로 등록어선*은 감소하고 있으나 성어기 향로통과, 항계 내 불법조업(양식)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어선등록현황 : 3,254척(선복량 12,765톤) 등록어선 중 5톤미만 85%(2,792척)

** 어업권현황 : 596건 10,8958Ha (군산시·부안군·고창군)

□ (운항환경) 항계 내 저수심 구역 유지준설과 새만금 신항 방파제 공사 등 항만공사로 대형선의 운항제한요소 존재

* 유지준설구간 : 군산항 1~3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장항항 항로 및 부두(물양장)

** 항만공사 : 새만금 신항 방파제 공사(2개소), 유연탄부두, 장항항 물양장 축조 및 호안정비 공사 등

○ '13년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운항통제일수는 감소하였으나, 기상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군산항 운항통제실적 >

(단위 : 일)

연 도	계	기상특보	시정제한
2012년	101	83	18
2013년(9월)	59	43	16

□ (관광·레저) 여객선 이용객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전북지역 해수욕장·공원 및 해안가 이용객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레저 활성화로 수상레저기구 등록**도 증가하는 추세

< 군산·격포항 여객선 이용객 현황 >

(단위 : 천명)

구 분	2012	2013년 9월	전년 대비(%)
국제여객선(1척)	156	157	101
연안여객선(9척)	371	415	111

* 관광객 : 전북지역 10개 해수욕장 1,285천명('13.7-8월), 해안가 6개소 3,036천명 이용

** 수상레저기구 : 모터보트 91대, 고무보트 27대, 수상오토바이 12대 등록 (군산시·부안군·고창군)

[9] 목포항 등 인근 전남 해역 [여수청, 목포청, 전라남도]

□ (항만물동량) 전남지역 무역항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출항 선박도 감소하는 추세

○ (여수항·광양항) 항만 물동량은 '12년 동기대비 3% 감소했으며, 입·출항 선박도 약 4% 감소

* 항만 물동량 : 215,207천톤('12년 11월말 222,259천톤 대비 97%)

* 선박 입출항 : 52,467척('12년 11월말 54,393척 대비 약 96%)

- '13.11월말 기준 유류·케미칼·가스 등 위험화물이 전체 화물의 45%(9,659만톤)를 차지하고 입출항 선박의 51%(26,581척)가 위험물 운반선으로 폭발, 해양오염 등 사고 가능성 상존

○ (목포·완도항) 목포항 입출항 선박은 16,471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고, 완도항 입출항 선박도 4,254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

□ (여객운송)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은 증가

○ (여수항) '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 및 여수엑스포 재개장에 따른 관광객 증대로 여수항을 이용하는 여객(2,029천명)은 '12년 대비 약 3% 증가

○ (목포항) 봄·여름 피서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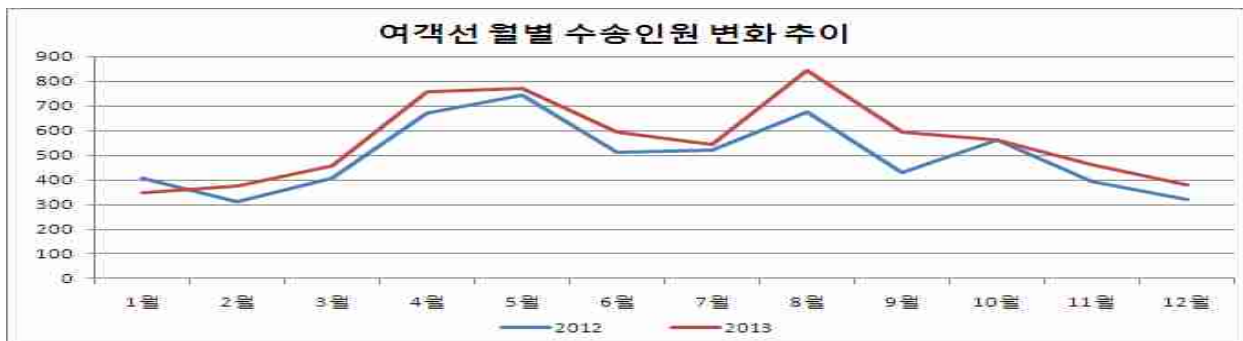
< 여객선 운항 및 수송실적('13.9월 누적) >

(단위 : 척, 명)

구분	항로	여객선(척)	수송인원(인)
목포항	21	44	3,954,344
완도항	13	21	2,739,779
합계	34	65	6,694,123

출처 : 한국해운조합

< 여객선 월별 수송인원 변화추이>



□ (어업현황) 전남지역에 206개의 국가·지방어항과 892개의 항 포구를 중심으로 46,337척의 어선이 운항(전국에서 등록어선이 가장 많은 상태)

○ 어선의 등록·운항이 많은 만큼 어선사고의 위험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

< 전라남도에 등록된 어선 현황('13.6월말 기준) >

(단위 : 척)

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	어획물 운반업
46,337척	507	11,936	3,403	30,432	59

(10) 포항항 및 인근 경북 해역 (포항청, 경상북도)

□ (포항항) '13년 항만 물동량은 61,056천 톤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하고, 입·출항 선박 척수(12,140척)도 '11년 대비 27.7% 감소

○ 대형 광탄선(48.2%)과 철제품운반선(38.7%)이 전체 입출항선박의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선박 입출항 현황('13.09.30.기준 '13.12.31.예상)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예상)			2011년 대비(%)
	계	외항선	내항선	계	외항선	내항선	계	외항선	내항선	
척수	16,789	8,570	8,219	15,958	7,809	8,149	12,140	6,448	5,692	72.3
총톤수 (천톤)	112,125	95,978	16,147	112,450	95,951	16,499	97,328	83,653	13,675	86.8

* 지방관리 연안항에 458척(구룡포항 286척, 강구항 172척)의 어선이 이용

□ (등록선박) '13년 포항청과 경상북도에 등록된 선박 척수는 전년대비 1.7% 증가(레저선만 20% 감소)

○ 관내 총 2,678척의 등록선박 중 어선이 2,099척으로 78.4%를 차지

< 관할해역 등록선박 현황('13.09.30.기준 '13.12.31.예상) >

선박 종류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부선	레저선	기타선	어선	낚시선	합계
등록 척수	14	19	2	38	33	282	135	2,099	56	2,678

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경상북도의 자료 취합

□ (여객수송) 총 5척의 내항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6% 증가 예상(전체 여객수송의 68.6%가 포항 ↔ 울릉간 여객)

< 관내운항 여객선 현황('13.09.30.기준) >

	썬플라워호	아라퀸즈호	씨플라워2호	돌핀호	독도사랑호
선 사 명	대아고속해운	광운고속해운	제이에이치페리	돌핀해운	울릉해운
항 로	포항 / 울릉	포항 / 울릉	후포/울릉/독도	울릉 / 독도	울릉 / 독도
소요시간	3시간10분	3시간50분	3시간30분/ 4시간20분	4시간00분 (왕복)	4시간00분 (왕복)
취 항 일	'95. 08. 14	'13. 07. 19	'13. 03. 13	'12. 06. 20	'11. 7.27
총 톤 수	2,394G/T	3,403G/T	363G/T	310G/T	295G/T
항해속력	40노트	30.5노트	25노트	30노트	27노트
여객정원	920명	855명	376명	390명	419명
화물/차량	20톤/16대	180톤/50대	-	-	-

< 여객수송 실적('13.09.30.기준 '13.12.31.예상) >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예상)	전년대비(%)
합 계	424,066	356,887	466,574	488,081	588,500	△ 20.6
포항/울릉	385,832	347,266	387,721	380,838	404,000	△ 6.1
후포/울릉	-	-	31,225	-	24,500	-
울릉/독도	38,234	9,621	47,628	107,243	160,000	△ 49.2

□ (교통여건) 포항항의 지정학적 특성과 교차 상황이 많은 통항로 여건상 사고 위험성 잠재

○ (정박지) 북동방향으로 개방된 지형적 특성상 강한바람과 너울성 파도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모래저질 특성으로 정박선박의 주요사고(닢끌림 현상) 위험이 상존

○ (통항량) 포항~울릉도 간 조업어선, 호미곶 부근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항로변경(동서방향 대각도 변침) 및 남북방향 통항선박 간 교차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요구

- 특히 관내 연안항은 주로 대게 및 오징어가 어획되는 10~3월 사이가 어선의 왕래가 많아 동 시기가 해양사고의 위험도이 높은 상태

○ (교통장애) 영일만항 개발공사와 포항신항 준설작업(1부두) 시행 등으로 예부선의 이동이 많아 입출항선박의 위해요소로 작용

□ (해상기상) '13년 포항항 인근해역 기상특보 발효건수는 50회로 전년 대비 10.7% 감소하고 기상특보 발효일수도 작년대비 4.5% 감소

○ '14년 기상특보 발효건수도 '1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어선이 빈번히 입출항하는 강구항은 상류 오십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와 정동방향으로 개방된 지형적 특성에 따른 바람과 스웰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 상존

< 포항항 및 인근해역 기상특보 발효건수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기상특보 발효건수	32회	53회	56회	50회	▽ 10.7
기상특보 발효일수	41일	66일	89일	85일	▽ 4.5
여객선 운항통제 횟수	87회	211회	293회	225회	▽ 23.2

출처 : 한국해운조합 포항지부(2013.9.30. 기준 2013.12.31. 예상)

□ (해수욕장) '13년 이용객수는 해수욕장 조기 개장과 장기간의 폭염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사망사고 미발생)

○ 이용객 증가에 따라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 내재

< 해수욕장 운영 현황 >

지 역	해수욕장 (개소)	이용객수(명)		사망사고(명)	비 고
		2012년 도	2013년 도		
계	26	4,679,307	5,335,781	0	'12년 대비 이용객/ 14%증가
포항시	6	2,622,760	3,160,150	0	
경주시	6	1,127,200	1,214,000	0	
영덕군	7	808,811	836,028	0	
울진군	7	120,536	125,603	0	

[11] 마산항 및 인근 경남 해역 (마산청, 경상남도)

□ (무역항) '13년 마산항의 물동량은 14,949천톤으로 전년도(16,039천톤) 대비 7% 감소했으나, 선박 블럭 등 조선 관련 물동량 증가로 연안 물동량은 전년대비 4% 증가

○ 경남도 지방 관리항인 7개 항만*의 입출항 척수도 5% 감소

* 진해 · 통영 · 삼천포 · 하동 · 옥포 · 고현 · 장승포 · 하동항

< 마산항 물동량 현황 >

(단위 : 천톤)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계	외항		내항	계	외항		내항	계	외항		내항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계	16,039	2,053	6,504	7,482	14,949	1,750	5,423	7,776	93	85	83	104

출처: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지방관리항 입출항 척수 현황 >

구분	2012년 9월까지		2013년 9월까지		전년대비(%)	
	척수(척)	톤수(천톤)	척수(척)	톤수(천톤)	척수	톤수
합계	21,419	68,876	20,241	62,968	95	91
외항	2,898	45,251	2,580	41,134	89	91
내항	18,521	23,625	17,661	21,834	95	92

□ (여객수송) '13년 여객 수송실적은 2,251,495명으로 전년도(1,971,245명) 대비 14% 증가

○ 국민 여가활동이 활발해지고 섬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여객 수송 실적 >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여객선 수송실적	여객선 수송실적	여객선 수송실적
계	1,971,245	2,251,495	114

출처: 한국해운조합통영지부

- (어항) 경남지역에 총 567개소(국가어항 19, 지방어항 61, 어촌정주어항 432, 소규모어항 145)의 어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14,994척의 어선이 조업

* 도내 단속공무원은 53명(도 10, 시군 43), 어업지도선 11척 운영

< 어업관련 현황('13년 기준) >

구 분	단 위	경 남	전 국	대비(%)	비 고
○ 해 안 선	km	2,453	14,378	17.1	
○ 어 가 수	호	9,753	61,493	15.9	
○ 어 가 인 구	명	25,128	153,106	16.4	
○ 어 업 종 사 가 구 원	명	16,446	100,173	10.7	
○ 어 선 척 수	척	14,994	75,031	20.0	
동 력 선	척	14,710	72,922	20.2	
무 동 력 선	척	284	2,109	13.5	
○ 어 항	개	567	2,286	24.7	
○ 수 협	개	18	92	19.6	
○ 어 촌 계	개	425	1,874	22.6	
○ 수 산 물 생 산 (원 양 어 업 제 외)	천 ^M /T	607	3,183	19.1	
○ 자 율 관 리 공 동 체	개소/명	188/9,536	980/66,072	192/14.4	
○ 지 정 해 역	ha	25,849	34,435	75.0	

- (해양레저) 경남지역에 다수의 마리나항만과 해수욕장이 운영됨에 따라 레저활동과 물놀이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증가

- '국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 고시된 8개 마리나*와 해양마리나 1개소(거제 근포)가 운영

* 고성 당항포, 창원 명동·구산, 사천 삼천포, 거제 사곡, 통영 충무, 남해 물건, 하동

- '13년 총 30개(통영 6, 사천 1, 거제 1, 남해 6 등)의 해수욕장에 연인원 1,158,395명이 이용

- (해양기상) '13년 마산청 관제구역 내 기상 특보는 총 32회 발효되고 1개의 소형태풍이 통과, 해양기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13년 마산청 관제구역내 기상특보 발효현황 >

구 분	풍랑주의보/경보	태풍주의보/경보
발효 횟수	28회	4회

출처: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관제센터), 부산지방기상청

[12] 제주 인근 해역 [제주단,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항·서귀포항) 항만물동량은 6,973,973톤으로 전년도(6,491,069톤) 대비 7.4% 증가했으며, 선박 입출항 척수도 5,241척으로 전년도(4,225척) 대비 24% 증가

○ 최근 외국적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증가세가 뚜렷하고, 서귀포항에 신규취항 내항여객선(녹동 ↔ 서귀포)이 계획되어 '14년 제주항 및 서귀포항의 입출항 선박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제주 : 전년도(3,905척) 대비 12% 증가 / 서귀포 : 전년도(320척) 대비 175% 증가

< '13년 선박 입출항 현황 >

(단위 : 척)

선박종류	제주항		서귀포항		합 계
	외국적선	내항선	외국적선	내항선	
계	207	4,155	0	879	5,241
화물선	36	893	0	219	1,148
유조선	2	539	0	39	580
여객선	156	2,284	0	0	2,440
기타선	13	439	0	621	1,073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

□ (여객수송) '13년 국내·외 여객선 이용자는 3,305,501명으로 전년도 대비(2,886,890명) 14.5% 증가

○ '14년도는 신규 취항(제주↔부산)과 증선(제주↔인천), 연휴 증가, 국제 여객선(크루즈선)의 기항증가 등으로 여객도 계속 증가 예상

< '13년 여객수송 현황 >

(단위 : 명, 개)

구분	국내 여객선	국제 여객선	합 계
인원	2,919,362	386,139	3,305,501

출처 :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 (어선 현황) '13년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어선등록 척수는 1,982척으로 전년도(2,048척) 대비 3.2% 감소

- '14년에도 지속적인 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어선척수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3년 어선 등록 현황 >

(단위 : 척)

종류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강선	11	6	17
FRP선	978	897	1,875
AL선	1	2	3
목선	42	45	87
계	1,032	950	1,982

출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해양레저) '13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677척으로 전년도 대비 약 32% 증가

-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도두항 및 김녕항에 계획된 공공마리나 시설 건설로 해양 스포츠 이용자와 레저기구 증가 예상

< '13년 수상레저기구 등록 현황 >

(단위 : 척)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동력요트	4	2	6
모터보트	352	137	489
고무보트	80	25	105
수상오토바이	53	24	77
계	489	188	677

출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해양기상) '13년 제주해역은 다수의 기상특보(풍랑주의보·경보 203회, 태풍경보 1회)가 발효

○ 제주지역은 다수의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지리적 특성으로 특별한 주의 필요

< '13년 해역별 기상특보 발효 현황 >

(단위 : 회)

구 분	제 주 북부	제 주 남부	제 주 동부	제 주 서부
태풍주의보·경보	1	2	1	1
풍랑주의보·경보	51	70	37	45

출처 : 제주지방기상청

□ (해수욕장) 제주지역에 총 13개소*의 해수욕장에 '13년 3,366,026명 이용, 전년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용객은 계속 증가가 예상('13년 안전인원 225명, 장비 544개 배치)

* 이호테우해변, 광지과물해변, 금능으뜸원해변, 협재해변, 삼양검은모래해변, 함덕서우봉해변, 김녕성세기해변, 중문·색달해변, 표선해비치해변, 화순금모래해변, 신양섬지코지해변, 하호쇠소깍해변

< 해수욕장 사고건수 >

구 분	합 계	물놀이 사고 (이안류 사고)	백사장 내 안전사고	수상레저기구 관련 사고	해파리 등 유해생물 관련 사고
사고건수 (건/명)	592건/838명	53건/74명	502건/502명	-	37건/262명
인명피해 (死/傷,명)	-	-	-	-	-

□ (갯바위 등) 관광·낚시객에 의한 갯바위, 방파제 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통제구역(10개소*)과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 설치운영(32개소)

* 작은 관탈 본섬 및 부속여, 화도 동쪽여 및 끝여, 절명이 고구마여 및 끝여, 직구, 형제섬 간출여, 홀애미여, 섭이여, 도두항 갯바위, 화도마당여, 절명이 본섬